

제429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정기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1월10일(월)

장 소 제2회의장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 부별심사: 경제부처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 1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 1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 1  
- 부별심사: 경제부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 부별심사: 경제부처

○위원장 한병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회의는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17분,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 5분입니다.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내일까지 이어지는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 회  
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내일 회의 산회 이후에는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

를 접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차 당부 말씀드립니다.

먼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발언은 국회방송을 통해 송출되지 않습니다. 국회방송을 통해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질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다소 답답해하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부여된 발언시간을 엄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방송으로 보시기에 질의 위원님 교대에 따른 발언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다음번 질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 앞 대기석에 미리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민의힘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구의 한기호 위원입니다.

먼저 울산 화력발전소 타워 붕괴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심심한 애도와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님, 지금 장관님은 현장에 나가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현장에서 수습……

○**한기호 위원**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수습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구조를 못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하면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지금 조금씩 구조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 사고를 보면서 실제로 기업주나 또 기업체의 오너를 처벌한다고만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느끼시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위원님, 그런데 수사 중이어서 저희가 말씀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로 작업장에서 준수해야 될 규칙이 있고 최소한의 규범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많은 노동자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기호 위원**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행정부가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이런 앞으로의 또 발생할 사고를 막지 못합니다.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데 이건 강원도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염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3년도 6월 11일, 출범한 지 2년 반이 지나도록 이름뿐인 특별자치도법입니다. 송기현 의원과 함께 제가 발의해서 105명의 의원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동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기부 사항인데 과기부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슬라이드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분명하게 우리가 뭐라고 맨 끝에 넣어 뒀나, ‘과학기술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가가 정하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준비를 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안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운영하는 곳이 없느냐, 전국에 4개의 과학기술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그리고 수도권은 당연히 있고 강원권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겠다는 건데 이걸 못 해 주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위원님, 강원과학기술원은 학령인구 감소나 지역대학과의 관계 그리고 재정 소요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좀 고려해서 저희가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부랑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4대 과학기술원과의 기술 협력을 통한 지역대학 활성화 그리고 지역거점 대학원에 어떻게 보면 과기원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한기호 위원** 그러면 대안을, 이것보다 더 좋은 안이 있다면 내놓으시면 저희가 포함시켜서 그걸로 가겠습니다. 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부장관님, 지금 다목적댐과 발전용댐 두 개 댐에 의해서 실제로 우리 물을 저수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법에 담아서 우리가 좀 더 지역의 발전기금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반대하고 계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댐건설·관리법상 발전판매 수입금의 6%와 용수판매 수입금의 22%를 출연해서 댐 주변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를 돕고 있는데 이게 제로섬 게임이어서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취지는 동의합니다만.

○**한기호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지역 주민들이 댐이 있으면 이 댐이 다목적댐인지 발전용댐인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왜 발전용댐에 대해서는 다목적댐과 같은 수준으로 지역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도움을 안 드리는 게 아니고……

○**한기호 위원** 아니지요. 차등 해야지요. 지금 발전용댐에 대해서는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훨씬 적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부가 해야 됩니다. 한수원이 가지고 있는 댐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농어촌관리 댐과 한수원 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복지부차관님, 지금 우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때문에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에다가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연중무휴 점포가 12개 군의 30개 읍면에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24시간 운영하는 점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점포를 도지사에게 재량권을 줘서 특수한 상황은 운영하게 해 달라, 그런데 왜 안 해 주십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위원님, 그 24시간 기준 완화 필요성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강원도와 유사하게 단위 면적당 약국이 없는 곳들도 꽤 많기 때문에 발의해 주신 법안으로 하는 것보다는 약사법 개정이 낫겠다라는 저희 부처의 판단이었습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어느 세월에 합니까? 이걸 강원도한테 먼저 해 주고 약사법은 나중에 하면 되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저희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하는 점포가 없는데 하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공감합니다, 위원님.

○한기호 위원 다음, SOC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축구 할 때 4 대 2 대 4, 4-4-2 이런 전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한기호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실제로 4-4-2, 4-4-0……

그림을 제가 만들었는데 경기도 경계지역까지는 전부 다 4차선 도로, 철도, 전철 다 와요. 그런데 딱 강원도 경계 넘어가면 저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경기도, 수도권 장관님이 십니까? 아니잖아요.

다음 그림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끊어 놓느냐? 실제로 모든 도로와 철도를 도 경계를 넘어갈 때 다 끊어 놓습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장관님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전라북도입니다.

○한기호 위원 전라북도라서 모르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 그림을 보시면 국도 75호선, 포천-철원 고속도로도 포천까지만, 국도47호선, 국도43호선 또 연천까지 오는 전철, 전부 다 끊었지 않습니까? 딱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경계지역에서 다 끊어 버린 거예요. 끊어 놓으니까 경기도분들이 박수 치고 좋아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닙니다.

○한기호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세요?

그래서 계획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연천까지 철도가 들어온다 그러면 계획을 철원까지 하시라 이거예요. 하고서 거기에 따른 수요에 따라서 나눠서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포천까지 오는 고속도로입니다. 포천까지 고속도로를 만들고 아예 그 이후에는 계획 자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저걸 하기 위해서 강원도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지금까지 해서 이제 겨우 예타를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내년도 예타에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아니, 도로고 뭐고 다 끊은 겁니다. 이것은, 경기도는 서울지방국토청에서 하지만 우리 강원도는 원주국토청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2개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니겠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것은 부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알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다음 그림 한번 보십시오.

저 그림은 평균 철도역까지 가는 데 접근하는 시간입니다. 수도권은 통상 42분, 비수도권은 52분 이렇게 걸리는데 강원도는 81분이 걸립니다.

다음, 철도에 도달하는 지역의 비율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비수도권을 고려했을 때 62%인데 강원도는 31.3%입니다.

다음, 국가철도망 계획입니다. 이 철도망 계획도…… 우리 지역 자체가 18개 시군 중에서 12곳이 소멸위험지역입니다. 그래서 GTX-B 춘천 연장, 경원선, 총 10개 노선을 건의한 상황인데 이것도 실제로 예타 하다 보면 나오지를 않습니다. 용문-홍천 철도 그리고 강원도 국도·국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0분 내 접근할 수 있는 거리가 우리는 전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반도 안 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시지요.

그다음에 도로건설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2차, 3차, 4차, 5차 계속해서 강원도의 비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큼 떨어졌느냐? 물론 2차 연도에 9.5%에서 16.2, 13.4, 9.5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더 떨어지겠지요.

다음, 국도 차로 비율입니다. 2차로나, 4차로나 하는 건데 국도 자체가 강원도는 2차로가 이렇게 많습니다. 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과제인 5극 3특 균형발전 실현을 시킨다, 교통혁신 인프라를 확충한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말로만 하는 거지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닙니다.

○한기호 위원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한기호 위원 말로만 하는 게 아십니까? 저는 말로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기호 위원 농식품부장관님, 오늘 장관님이 안 나오셨군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한기호 위원 지금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을 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지난번 6개 지역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했다가 하나를 늘려서 7개 지역이 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런데 6 대 4, 지방비 부담이 6이고 정부 부담이 4입니다. 제가 7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총소요되는 예산을 나눠 보니까 1개 지자체당 299억—그냥 일반적으로 7로 나눈 겁니다—약 300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300억 돈을 내라, 이게 엄청난 부담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부담은 되는 것은 맞고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자체 지출 효율화라든지 세원 발굴한다는 것을 넣었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보시면 그렇게 큰 부담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기호 위원 지금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제가 특정 지역의 지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혜택을 받는 곳에 지금 주민등록이 막 들어가요. 들어가서 인구가 실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우리 지

역 같은 경우 주민등록을 옮기는 거예요, 인접지역이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지역 빼 오는 거 하려고 이거 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거는 아니고요.

○한기호 위원 아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한기호 위원 그다음에 왜 농식품부가 이 사업을 하면서 농민이나 아니냐 아무 구분도 없이 무조건 지역에 주민등록 있다 그러면 다 해 줘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기본소득은 재산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전……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게, 제가 1년에 수익을 10억의 돈을 번다 그래도 이 돈 받을 수 있지요, 해당 지역에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취지가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그러면 누가 이것을 동의하겠어요? 10억을 버는 사람이나 1년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똑같이 돈을 준다 이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국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69개 지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검토를 그때 가서…… 줬다가 뺐습니까? 주던 것을 그다음에 안 줘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니요,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2년 동안 받은 사람한테 그다음 해에 가서, 3년 차에 가서 ‘너는 해당이 안 되니까 안 준다’ 이런 말이 됩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어설피고 엉터리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이런 정책을 어떻게 만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이 사업은 6월 달부터 계획이 돼 왔었고요.

○한기호 위원 6월 달부터 나올 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 사업 내용을 보시면……

○한기호 위원 아무리 변명을 해도, 제가 말하는 것 대답을 해 보십시오.

10억 수익을 내서 내가 순수입이 10억이 되는 사람하고 1년에 겨우 1000만 원, 2000만 원 되는 사람하고 똑같이 돈을 준다,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게 기본소득의 취지고요. 그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나라에서는……

○한기호 위원 취지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는 안 하고 자꾸 변명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비슷한 사업을 실시하는 나라들에서도 그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게 앉아서 얘기하시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등록이 어디로 돼 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저는 지금 서울로 돼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서울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한기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도 주민등록이 거기 돼 있는 사람은 이 돈을 받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저희들이 거기 실제로 거주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돼 있다고 무조건 드리지는 않습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국회의원이 그 지역에 주민등록 두고, 서울에 와서 일을 하지만 실제로 주민등록은 거기 있으면 있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실거주지인지 아니면……

○한기호 위원 저도 그렇게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만약 위원님께서 거기에 거주를 하신다면……

○한기호 위원 그러나 여기에, 지금 국회에 일이 있으니까 주로 많이 오지요. 그러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실거주하시면 드립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국회의원도 돈을 받는다 이거예요.

군수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받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게 잘된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한기호 위원 뭐가 아닙니까, 아니기는. 다 준다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런데 뭐가 아니에요, 아니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 행정구역에 사시는 분 돈을 드려서 거기서 그 돈을 쓰시게 하고 그런 차원의 취지기 때문에 소득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호 위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음은 AI 문제인데 강원도는 AI 편성 자체가 없어요.

저것 한번 보십시오.

AI만 있으면 예산 다 준다고 하는데 강원도는 AI와 관련된 예산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의료 문제는 실제로 전국에서 2위 위치에 가 있습니다,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안 해 주십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것?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실제 의료 AI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는 강원도가 굉장히 잘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실제 과제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개 사업에 대해서 한 1151억 원의 과제가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강원의료 AX 실증 허브 조성 관련해서 논의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반드시 이번에 얼마라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의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 먼저 고용부에 여쭙 건데요. 오늘 차관님이 오셨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고민정 위원 얼마 전에 장관께서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 보호를 위해서 현장점검 다녀오셨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맞습니다.

○고민정 위원 보니까 환기시설 성능도 확인했고 잘못된 것들은 개선하라고 권고도 하고 오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러니까 조리시설들을 개선하고 이 예산은 고용부 예산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하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맞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런데 고용부가 가신 이유는 뭘니까, 그러면?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사실은 그 부분 관련해서 환노위 상임위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실제로 조리 종사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실태를 점검하고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서 장관님께서 직접 현장점검을 하셨습니다.

○고민정 위원 예산은 들어가지 않지만,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고용부에서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건강하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으려면 고용부가 전체적으로 반성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산재 신청 대비해서 승인 현황이 188명 중에서 157명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승인이 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폐암환자 발병률이 이렇게 높은 겁니다.

그런데 사망률은, 열다섯 분이나 사망하셨어요. 21년에서 25년까지 5년 치박에는 안 됩니다. 이것을 그냥 아주 단순하게 계산을 해 보면 3.6개월마다 한 분씩 돌아가고 계시는 걸로 나타납니다. 이런 심각성 때문에 고용부장관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서 메시지를 주시려고 한 거잖아요.

이 정도 되면 일반 다른 사업장들 고용부에서 많이 보실 텐데 저는 죽음의 사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런 산업현장에 가서 일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 가면 무슨 연봉이 높기를 합니까, 끝나고 나서 퇴직수당이 높기를 합니까? 돈은 돈대로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고 이렇게 산재 발병률이 높고 심지어 눈에 죽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뭐 하나 달라지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교육부거든요. 교육위 안에서 이 관련된 예산을 교육청이 매년 얼마나 집행하고 있는지를 계속 봤는데 그런데도 현장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이번에 따져 봤더니 제가 보니까 고용부의 잘못이 큰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

은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생각이요.

한번 들어 보십시오.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개선을 자체가 높지 않습니다. 그다음 것 보여 주시면 전체 총계가 오른쪽 맨 끝에 보면 42%만 개선을 했습니다, 전체 학교 1만 1000개 가운데. 이게 23년부터 지침을 만들어서 쪽 시행을 해 왔는데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절반 이상은 아직 개선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개선 속도를 높여야겠다, 피치를 높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라고요. 제가 왜 여기서 제동을 거냐 하면 서울·인천·경기, 가장 많은 학생들이 살고 있는 곳을 봤더니 개선 학교 비율이 12%, 33%, 제일 최저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서울·경기·인천이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알아봤더니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급식조리실에 대한 환경개선지침이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크다는 겁니다. 적용을 할 수가 없거나 적용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래서 자체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 현장하고 지금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3년도에 윤석열 정부에서 어쨌든 여야, 진보·보수를 넘나들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침을 만든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장하고 맞지 않다는 게, 가장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런 곳에서 이렇게 개선율이 떨어지는 걸 보면 고용부에서 뭐가 문제냐고 들여다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들여다보셨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300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조금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나면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고민정 위원** 23년부터 시작한 걸 25년 말인 지금에 와서야 하겠다고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민정 위원** 이제 새로 들어선 정부가 사실은 이렇게 질책을 받아야 될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고용부가 다르고 이재명 정부의 고용부가 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 정부가 잘못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고 개선해야 되는 건 이재명 정부의 몫이기 때문에 더 아프겠지만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과 맞지 않다. 그러면 뭐가 틀린 건지, 그 지침의 어느 부분이 잘못된 건지를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동시에 뭘 해야 되냐? 성능평가라는 걸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고용부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을 했는데 그 개선 이후에 실제로 급식 환경이 좋아졌는지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 평가에서 잘된 데가 있고 안된 데가 있고, 안된 데가 있으면 다시 개선해야 되겠지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2년 동안 무려 5000억이 들어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성능평가의 속도가 부끄러울 정도의 수준입니다.

지금 보시면 현장에서는 뭐라고 하나 하면, 제가 아까 보여 드린 100%의 학교들 중에서 42%만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선한 학교들 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곳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고용부가 어느 정도의 성능평가를 하셨는가 봤더니……

몇 %인지 아세요? 얼마나 하신 것 같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저희가 지금 300개가 올해 목표인데 현재 162개 정도를 했습니다.

○**고민정 위원** 틀렸습니다. 1년 목표가 300개였고요. 첫째 연도 300개 목표 못 하고 36개 하였고요. 두 해 연도에 300개 역시 목표였지만 78개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황 파악도 지금 안 돼 계시는 거잖아요.

2년 동안 1만 1000개 학교 중에서 교육부가, 교육청이 예산을 들여서 개선한 데가 4300개예요. 한 절반가량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고용부가 평가한 데는 2.6%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장관님께서 그리고 대통령께서 현장을 가셔서 메시지를 내시는 이유는, 그냥 가서 사진 한 장 찍으러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말라고 하시는 건데 그러려면 뭐가 문제점인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을 해야 달라지는데 현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정부가 끼면 될 것도 안 된다.

국회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법들이 너무 많다, 지침도 너무 많다, 너무 자세하고. 그래서 현장에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공무원들이 평가를 좋게 못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도 좋아지는 건 없고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고 자기네들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 100원, 1000원도 안 올려 주는 정부가 수천억은 그냥 막 쓰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개선을 했는데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면, 이게 현장의 목소리인데요, 아마 국감 때도 나왔던 것 같은데 전 페이지 보시면 배기팬이 역으로 돕니다. 이것은 부실 시공의 문제인 건지 이것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지요. 심지어 새로 걸었는데, 공간 문제겠지요, 공간이 생각보다 작았나 보지요. 소음이 너무 심해서 굉음 정도 수준이라 꺼놓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새 것 다 달아 놔는데. 그래서 지금 작동을 아예 중지시킨 곳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그때 상임위에서 저 문제 제기를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금년도에는 300개를 연말까지 다 마무리 짓고 그것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관련된 지침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속도감 있게 해서……

○**고민정 위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예결특위를 한다고 해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이 11월 한참 중간입니다. 이제 한 달여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 78개입니다. 나머지 200여 개를 한 달 만에 다 할 수 있는 것 왜 여태 안 했습니까, 그러면?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위원님, 제가 보고받기로는 10월 말 기준으로 163개를 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다 할 수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아, 올 한 해 동안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올 한 해 동안.

○**고민정 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런 수치를 보면 좀 더 정부가, 지난해 말에 있었던 계엄 이후에 국가가 그냥 다 스톱되어 버렸던 영향이 이런 데까지 다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조금이라도 숫자를 높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와서 남 탓하면 뭐 합니까, 우리가 해야지요.

보시면 24년도에 36개를 하였고 그다음에 25년도 100개 넘게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78개였는데, 뭐 숫자는 그렇다 하고요. 그 36개 중에서 통과한 학교가 있고 통과하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성능평가를 36개를 했는데 30개는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6개는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습시다. 그 학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들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장 보시면, 저 노란색 표시 줄 보시면 충남 아산과 천안에 있는 학교들은 전부 개선을 다 했습니다, 지침대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나온 지침대로 다 했는데 기류평가도 미흡이고요 배풍량 확인 결과도 부합하지 않는 걸로 나왔습시다. 그러면 이것 뭐 하러 예산 썼습니까? 이 학교는 억울하지요. 지침대로 다 했는데 평가 결과는 부적정으로 나왔다.

제가 이것을 고용부에 계속 따져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쨌든 이게 학교가 구축이나 신축이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규모에 따라서, 지상에 있느냐 지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환기 설비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침은 표준이기 때문에 그냥 평균치를 가지고 지침을 만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침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걸 빨리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지침을 바꾸든지 이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동안 고용부가 그 지침도 들여다보지도 않은 것 같고요. 뭘 개선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교육부나 교육청은 그 현장에서 조리급식사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하니까 빨리 환경 개선해라라고 재촉만 했습니다. 저도 재촉만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잘못된 지침이 계속해서 하달되고 있었던 걸로 지금 보여줍니다.

이것도 제가 분석한 결과는 그렇지만 직접 고용부가 뭐가 잘못된지를 파악해 주지 않으면 교육부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교육부가 산업안전관리를 하는 부처는 아니잖아요, 그 지침에 따라 잘됐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은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아까 올해 몇 개 하셨다고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163개소, 10월 말 기준으로……

**○고민정 위원** 10월 말 기준으로 163개. 꽤나 많이 하셨어요, 제가 파악한 건 78개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제가 고용부에 그 78개교가 어떻게 평가받았느냐 답변을 요구했더니 12월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답변이 왔습시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학교별로 기류에 대한 평가치는 나올 테고 배풍량은 얼마큼인지가 나올 텐데 전체 학교 300개를 다 해야지만…… 그걸 비교 평가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류 흐름이 적정하더라도 여러 가지 배풍량이라든지 후드면 풍속 이런 것들이 권고의 경계선에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전문가들 의견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침에 문제가 있다면 지침 개정까지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에게 조금 시간을 주시면 빨리, 올해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지 않도록 정리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300개를 최종적으로 취합해서 결론을 내는 게 맞지요. 그러나 각자의 학교들에게는 지금 당장 뭐가 문제인지를 알려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놓치신 게 뭐냐 하면, 지금 그 개선 권고사항 등을 학교 현장에서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있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시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에는 전혀 공지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예산은 교육청에서 나가니까요. 그러면 이걸 개선하는 예산도 교육청이 감당하든지 교육부가 감당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청은 몰라요, 어느 학교가 부적정이고 어느 학교가 적정인지.

이건 간단한 문제니까, 학교 현장에만 말씀하지 마시고 교육청 단위에서 이게 취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예산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알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일단은 신속하게, 성능평가가 좀 급합니다. 2.63% 너무 낮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데나 다 정해서 하지 말아 주십시오. 샘플 학교를 정해 주세요. 신축과 구축으로 나누든지 지상과 지하 여부로 나누든지 그 나름의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정한, 기준을 정하셔서 샘플 학교를……

왜냐하면 신축 학교들만 죄다 하면 다 결과 좋게 나오겠지요. 문제는 다 구축 학교들 이거든요. 그리고 지하일수록 문제가 더 심할 테니, 그러나 신축과 지상이어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걸 샘플링을 몇 개씩 배분할 것인지 일단 기준을 정해 주시고 성능평가를 최대한 빨리해 주셔야 되고 그 내용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급식실 환기지침 이것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고용부,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이 들어가 있는 학교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관계기관 TF가 있던데 지금도 운영이 되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고민정 위원** 그러면 이게 고용부끼리만 하면 교육 현장을 모를 수도 있고 또 교육청은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으니 그 TF 단위에서 이 지침을 어떻게 할 거냐, 때로는 지침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현장에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교육청한테 어느 정도 권한을 주는 게 나올지, 강한 지침은 고용부에서 짜되 교육청이 조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 주든지 그건 이 TF 안에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리고 식약처, 여기도 차장님 나오셨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예, 식약처 차장입니다.

○**고민정 위원** 11월 13일, 이번 주 수능이 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공부 잘하는 약, 수능·면접약이라고 불리는 ADHD 치료제와 심혈관질환 치료제 중독 관련된 건 잘 알고 계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예, 알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정도까지 왔는데 여기에 대한 감독 강화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콘서트하는 ADHD 치료제로서 오남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요. 특정 환자에 대해서 과다 처방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아니, 오남용되고 있는지 그건 그냥 조사하는 차원이고, 어떻게 예방을 하시겠다고요? 처방하는 것을 좀 강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규제하시겠다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일단은 오남용 조치 기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한 환자한테 과다하게 처방했을 경우에는 선별 점검하고 필요하면 수사도 의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올해 6월부터는 투약 내역 확인 성분에 ADHD 성분도 포함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찾게 되시면 일별백계를 하셔야 이 부분이 차단이 됩니다. 지금 학생들이 거의 두 배가량 계속해서 복용하는 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끝나기는 했는데 한 가지만, 질병청도 차장님이 나오셨지요?

○질병관리청차장 임숙영 예, 질병청 차장입니다.

○고민정 위원 약물 오남용에 관해서 교육을 하셨는데 평가가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만 답변 주십시오.

○질병관리청차장 임숙영 그 교육은 중독과 관련된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예산이 삭감되면서 같이 교육 예산이 삭감된 바가 있고요. 저희가 실태조사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재정 당국과 논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서울 마포갑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국민의힘 서울 마포갑의 조정훈입니다.

기재부장관님부터 시작해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주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덕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조정훈 위원 자리가 바뀌셨군요.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좀 어이없는 답변을 받아서요.

우리 주택청약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1977년입니다. 그래서 77년부터 주택청약 당첨자가 누적으로 얼마인지, 우리 국민 중에, 그거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했고 세대별로 좀 요구를 했는데 답변이 ‘모른다’입니다. 모른다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들었더니 2020년에……

지금 한국부동산원은 국토부 산하기관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조정훈 위원** 그런데 그 전까지는 금융결제원에서 했대요. 금융결제원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넘어온 게 2020년이었는데 그때 자료를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통계는 2020년 이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이없는 일입니다.

제가 만약에 특공, 생애최초 특공을 지원하잖아요. 제 주민번호하고 이름하고 어떻게 확인하나면 PDF 파일로 한대요. 문제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문제 있어 보입니다.

○**조정훈 위원** PDF 파일로 조정훈, 구윤철, 김윤덕을 다 검사해서 만약에 미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전자화된, 77년부터……

원래 생애최초 공급이라는 건 한 번도 청약 당첨 안 돼 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산화가 안 돼 있다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좀 시급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두 번째, 조금 심각해지는데 고발당하셨더라고요. 지난주에 천하람 위원하고 논쟁도 세게 하셨고 여러 가지로 하셨는데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다 밝혀진 거고 입장 차는 분명해 보입니다.

장관님, 이거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행정소송 하자고 하셨고 일부는 한 것 같은데 만약에 행정소송에서 국토부가 패소하면 아까 얘기했던,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몇몇 구, 서울과 경기 지역의 여러 가지 규제는 필수 생각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행정소송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졌다고 하는 것은 15일 공표된 부동산 수치에 대해서, 그 수치를 써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로는 그 지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 현재 드는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조정훈 위원**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만일 저희가 진다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위원** 금요일 날 마지막에 장관님 발언 제가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풍선효과 등등 문제인 정부 시절에 뼈저리게 부동산 정책 실패한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넓게 소위 마진을 잡았다라는 표현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의지도 법적 규제 안에서, 규정 안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초법적인 정책은 할 수 없는 거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럼요.

○**조정훈 위원**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행정심판 해서 소송에서 만약에 패소하시면 즉각 이거 해소하셔야, 풀어 주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조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재부장관에게 질의드리기 전에 적지 않은, 통계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번 규제와 함께 외국인 부동산 보유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온라인상에서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커피 자리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그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조정훈 위원 통계를 보니까요 외국인 보유율이 2020년에서 2024년 기준으로 5년 동안 78%가 증가했습니다. 한국 부동산이 꽤 인기네요, 외국 사람들한테도. 뭐 그거야 그냥 그러려니 했다가 이번에 규제가 딱 되니까 약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시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시는 주무 부처인 장관님, 외국인 부동산 소유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되십니까, 아니면 별문제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팩트 확인을 좀 하면요. 외국인 투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달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사실상 외국인들이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정훈 위원 아니, 큰 틀에서 우리 국가의 토지와 부동산 정책을 운영할 때 우리 주권의, 우리 자산의 핵심 중의 핵심인 토지·부동산이 외국인 소유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영점몇 %라고는 하지만 특히 중국, 주택 소유 중에 중국인 소유가 56%라고 통계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특정 국가와 특정 지역에 외국인이 집중해서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유럽 국가에서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민은 전체적으로 받지만 특정 지역에 외국인이 집중 거주하고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외국인이 집중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권 차원에서 규제를 하는 것은 저는 국익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제안을 드릴 테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한말씀만 드리면요.

○조정훈 위원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의원실에 우리 위원님에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문제에 대해 저희가 8월에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장관님, 10월 15일 또는 8월 정책에 외국인이 제외됐다 안 됐다가 아니고 큰 틀에서 지난 5년 동안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외국인 보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그 현상이에요, 장기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냥 ‘아무나 막 사세요’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정책적 제한을 두고 유럽 일부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상한선을 둘 것인가. 국적별 상한, 지역별 상한, 부동산별 상한을 두는 것도 저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도, 저는 외국인 이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특정 지역에 집중해서 인구가 한 20% 이상이 되는 지역이 많이 생기는 것은 여러 가지로 통합

정책에서 문제가 있듯이 부동산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당연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조정훈 위원 그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을 좀 마련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조정훈 위원 기재부장관님, 발표하신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얘기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나오셨던 김민석 총리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세 가지가 금리, 유동성 그리고 공급 부족입니다. 금리야 큰 틀에서 한국은행총재가 나오셔야 되는 문제니까 유동성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말이 좋아서 유동성이지 돈이 많이 풀렸더라는 것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갈 곳이 없으니까 부동산을 많이 사고 또 뭐라고 부르셨더라, 장기적인 투기 수요가 많아졌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면 돈을 많이 풀 주체는 누구입니까? 국가 아닙니까? 민간이 돈을 많이 풀 수가 있습니까?

유동성 공급과잉의 책임이 국민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정책적 결과 아닙니까, 장관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국민의 호주머니에 현금이, 유동성이 많아진 것은 국가가 돈을 많이 풀어서지 막말로 국민이 어디서 돈을 찍어 낸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과잉은 남 탓할 게 아니라고요. 이게 윤석열 정부든 이재명 정부든 문재인 정부든 누적돼 와서 지금 소위 M2, 광의의 통화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줄여야 되는데, 부동산 정책에 유동성이 너무 많은 것은 유리하지 않지요. 굉장한 가격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렇게 쓰신 겁니다, 여기다가. 맞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으로 돌아와 보면 이번 예산 계속 팽창예산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비교해 봤어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DSR이 뭐니까, 장관님? DSR, 부동산 하시는 모든 분이 다 알고 있는 DSR이 뭐니까? DSR이 뭐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어차피 그런 부분은 다 저희들이 부동산의……

○조정훈 위원 아니, DSR이 뭐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데트 레이쇼(Debt Ratio)……

○조정훈 위원 그래서 DSR 40%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러니까 자기들 능력에 맞지 않게 데트(debt)를 너무 많이 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담보에 비해서 40% 넘게 부채 내면 안 된다. 그리고 장관님께서 ‘자기 능력에 맞지 않게’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 DSR을 국가에 적용하면 지금 몇 %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십시오. 지금 38.6%입니다. 2024년은 40% 찍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임기 중에 516조를 추가 대출할 예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DSR이 40~45, 물론 모수를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45~50 막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 이율배반적 아닙니까? 국민들한테는 자기 능력을 넘어서 DSR 40%로 가되 두시고 국가는 이렇게 마음껏 DSR 자기 조정해도 되는 겁니까? 왜? 국가는 지불 능력이 있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좀 설명을……

○조정훈 위원 예,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국가가 이렇게 재정을 늘리는 부분은, 지금 대전환기입니다. 지금 시대 AI 대전환기 그다음에 초혁신경제로 대전환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 만약에 저런 식으로 해서 재정을 국가가 필요한 부분에 투입하지 않는다면 진짜 한국은 이 레이스에서 낙오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조정훈 위원 제가 백번 양보해서 그걸 인정해 드릴게요, 장관님. 그러면 개인도 진짜 사고 싶은 집이 저기 하나 있어서 조금 더 빚내서 DSR 50, DSR 60 받아서 집 사 놓고 그다음에 진짜 다른 일에 집중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까?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는 지금 대전환기라 다 해야 되고, 게다가 민생쿠폰, 소비지원쿠폰, 기본소득도 다 줘야 된다고 주장하시면서 마음대로 하면서 개인의 입장에서, 국가는 국가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가정의 입장에서 지금 한 집을 사느냐 마느냐는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장관님도 하셨고 여기 있는 분들 그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DSR 40%로 딱 막고 국가는 해도 되고 개인은 안 되는, 이것은 이율배반적이예요.

솔직히 말하면, 국가와 개인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좀 노골적인 얘기 할게요, 장관님. 이것을 보고 왜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이 이렇게 거칠게 비판하고 항의하실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장관님과 우리 모두가 성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은 성 밖에서 성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장관님처럼 강남에 아파트 하나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장치를 하나씩 촘촘히 해서 성 밖의 사람들이 성안으로 들어올 기회를 지금 막고 계신 거예요. 제가 통계 한번 내 봤어요. 민주당 의원님들, 우리 국민의 힘 의원님들도 실은 대부분 다 성안 사람들이예요.

우리나라의 자가보유율이 지금 얼마입니까, 장관님? 자가보유율 아십니까, 전국적으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자가보유율이 한 6 대 4 정도가……

○조정훈 위원 예, 60% 됩니다. 국회의원 290명 다 따져 봤더니 80% 넘어요.

여기 계신 국무위원님들 자가 한 채 없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나는 평생 무주택자다. 없지요? 100% 보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다 성안 사람이예요. 저도 그렇고요. 성 밖 사람을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빚을 조금 내서, 대출을 조금이라도 받아서 성안 사람 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특히 청년들 아무리 일해 봤자 미친 듯이 뛰어오르는……

제가 지난주에 김민석 총리한테 DSR을 70에서 40으로 낮추면 3억이 더 돼서 그게 10

년 치, 10년 동안 기다리게 만든 거다 그랬더니 청년이 저한테 댓글을 달기로 ‘집값은 가만히 있답니까, 10년 동안?’, 10년 동안 집이 올라가면 그 친구에게는, 그 부부에게는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평생 놓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좀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성 밖에 있어서 지금 노동소득으로, 근로소득으로…… 좋지요, 정직하게 벌어서 살자.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일정한 자본소득 없이 중산층 이상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세청장님 계신데 한번 고민해 봅시다.

지금 10대 대기업, 100대 대기업 대차대조표 한번 보십시오, 영업수익이 많은지 토지로서 땅값 올라가 가지고 얻은 자본수익이 많은지. 후자가 훨씬 많아요. 강남에 본사 하나 세우면 그 회사 망하지 않는 이 현실, 모두 다 부동산으로 자기 인생 마지막을 보장 받고 싶은 이 마음을 너무 우리 부동산정책은 무시했다 생각해요.

저는 진짜로 규제를…… 그리고 부동산 버블을 염려하셨으면 장관님, DSR은 푸셔야 돼요. LTV로 가는 게 맞아요. DSR, 좋은 담보 있다는데 정말 탄탄한 담보가 있는데 이 담보의 대출 비율을 왜 국가가 정합니까? 그것은 금융기관들이 각자 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신한은행에서 얼마까지 해 줄지, 국민은행에서 얼마까지 해 줄지 그것은 은행에 맡기면 되는 거지 왜 국가가 이것을 40%로 제한을 둬니까?

LTV는 좀 다른 얘데요. 왜냐하면 지불 능력이잖아요, 개인의. 그래서 개인의 지불 능력을 넘어서 하면 개인 파산의 위험이 있다, 그것은 저는 백번 양보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적으로 금융시장에서 했어야 될 DSR을, 그리고 금융시장마다 자신들의 대출 심사를 하는 노하우가 있고 기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일괄적으로 DSR 40으로 묶어 버리니 억울한 거지요. 좋은 물건 있고 지불 능력까지 있는데 이놈의 DSR 때문에 나는 집에 올라탈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 기다려라, 내년이 되면 그 후가 되면 기회 있다? 그때 제가 처음에 여쭙어봤지요, 김민석 총리에게도, 장관님에게도, 집값 정책이 뭐냐고? 내려갈 것은 기대하지 않고 앞으로 완만하게 또는 완만하게 상승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그 집의 가장 싼 가격이라고요. 그 가격이 지금 평생 그 사람에게 살 수 있는 가장 싼 가격이라고요. 그 가장 싼 가격을 놓치게 만드는 거라고요, DSR 같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정책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SR 좀 조정할 의사 없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실수요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매입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불편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조정훈 위원** 부분적으로 불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투기수요를 막지 못할 경우에……

○**조정훈 위원** 죽을 만큼 억울한 거예요, 장관님. 죽고 싶을 만큼 억울한 거라고요. 내가 돈 열심히 모아서 지불 능력도 있고 이 집 하나 사 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은데 10월 15일 날 내 인생을 바꿔 버린 거라고요. 그게 죽을 만큼 억울한 거라고요, 잠시 불편한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런데……

○**조정훈 위원** 이것을 이해를 못 하니까 우리보고 성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 밖

사람들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무주택자들에게는 규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LTV가 70%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금융대출 규제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정훈 위원** LTV는 지불 능력이잖아요. DSR은 담보 대비 대출 능력이라고요. 이것 2개 차이를 모르시는 것은 아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조정훈 위원** 이 2개 중에 어떤 게 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좋은 정책 수단인지 좀 그들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저는 LTV까지는 이해가 된다고요,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금융기관도 아닌데 국가가 이 담보물의 대출받을 수 있는 상한을 어떻게 정합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공감한 부분이 많고요. 저희들도 청년들의 주거사다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부동산시장을 좀 안정화시켜야지만 청년들이 어쨌든 과격한, 아까도 말씀하신, 지금이 가장 쉰 가격이고 10년 뒤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조정훈 위원** 오늘이 가장 쉰 가격이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래서 위원님,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시장은 안정화로 가는 게 저희들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정훈 위원** 장관님, 시간이 지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신 것은 안정화가 아니고요 거래 금지 조치예요. 이것 풀리면 풍선효과 정말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거래가 안 되는 거지 활발한 거래에서 집값이 안정된 것 아닌 것은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훈 위원** 지금 거래를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모라토리엄 얼마까지 할 거예요? 2026년 12월 31일 그 이전 또는 그 이후에는 풀 것 아닙니까? 그때 장관이실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신 있으세요?

○**위원장 한병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금년에 주택공급을 좀,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주택공급도 최대한 늘리고 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실 수요자들……

○**조정훈 위원** 그냥 자기 사고 싶은 집이나 사게 해 주세요. 돈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능력, 지불 능력 있는 사람들 집 사게 해 달라고요. 국가에 돈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정책 변화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의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근 위원 산업통상부장관님, 그동안 통상 업무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내 문제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국내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 중의 하나가 홈플러스 사태입니다.

홈플러스가 어느 정도 고용이 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김남근 위원 한 2만 명 정도가 고용돼 있습니다. 거기에 입점 상인들이 한 6000명 정도 있고 납품업체까지 하게 되면 한 10만 명의 종사자가 있고 가족까지 하면 30만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문 닫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만일 진짜 문 닫으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납품업체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분들, 이분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이 있어서……

○김남근 위원 실업 문제도 있겠고.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김남근 위원 사실 이 홈플러스가 전체 농산물의 한 20% 정도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김남근 위원 농촌 지역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김남근 위원 그다음에 대부분의 홈플러스가 도심에서 주요한 역전이나 이런 데 다 있어요. 도심의 한가운데 있어요. 부동산으로서는 목이 아주 좋은 데 있는 셈이지요. 그런데 거기가 다 문 닫고 그러게 되면 지역 경제에도 상당히 타격을 주고 주민들도, 거기가 문 닫고 횡횡한 상태가 되면 사회적인 여론도 굉장히 안 좋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김남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하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인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 이슈는 산업부뿐만이 아니라 기재부, 고용부, 금융위 다 같이 지금, 당도 마찬가지로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범정부 차원에서도 고민 좀 하고 계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 부는 주로, 저희 부의 역할이 납품업체와 홈플러스 간의 경영 거래 그쪽에 저희들은 좀 더 초점을 두고 보고 있고 각 부처마다 조금씩 다르게……

○김남근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게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잘 보이지는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홈플러스 종사자들이 용산 거기 앞에 와 가지고 농성을 하고, 그런 것들은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김남근 위원** 지금까지 저희도 한번 반성을 해 보니까 홈플러스를 인수했던 MBK라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말은 청산을 하지 않고 인가 전 M&A를 통해 가지고 인수자를 선정해서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 보니까 그런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인수자하고의 적극적인 교섭 같은 게 없었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시간을 질질 끌다가 인가 전 M&A 마지막, 법원이 준 시간이 11월 10일인데 11월 10일을 불과 한 이십여칠 앞두고서 갑자기 공개적으로 인수자 모집에 나섰어요. 인수자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 시간 끌기 하다가 청산 절차로 가려고 처음서부터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사모펀드들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특히 여러 범죄 혐의도 있으니까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와 함께 홈플러스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가 전 M&A 마지막을 앞두고 공개 매수를 했는데 2개 회사가 응모를 했어요.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저희들도 생소한 회사여서, 2개가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크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는 부동산 개발 회사고, 그러니까 그것은 노골적으로 홈플러스가 부동산이 목이 좋은 데 있으니까 부동산 매각해 가지고 청산시키려고 그러면서 부동산 이익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김남근 위원** 하나는 해외에서 대규모, 해외 사모펀드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또 해외 사모펀드가 인수하는 셈이 된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김남근 위원** MBK가 했던 것 또 그대로 이어져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회사에는 이제 말할 수 없다 그런 게 지배적인 여론이고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법원도 한번 방문을 했었고 이런 우려점들을 많이 전달을 했어요. 다행히 11월 10일에서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간이 연장된다고 이게 다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요. 그사이에 실제로 인수가 가능한 데들을 교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만들어야 되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김남근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MBK가, 홈플러스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잘 모르니까 선뜻 장기적인 유통 사업을 하려고 하는 쪽도 잘 못 나서는 거예요. 농협이든 하림이든 앓든 못 나서고 있어서 여기를 좀 더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 예를 들면 유암코라든가 캠프코라든가 이런 데들이 좀 나서 가지고 홈플러스 구조조정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장기적으로 유통 사업을 하려는 쪽들이 인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2개 나온 회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고 해서 그걸 담당하고 있는 관계부처들하고 긴밀히 논

의해서 홈페이지 정상화뿐만이 아니라 납품업체, 거기에 있는 고용 불안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금융위원장님, 관련된 행정기관 중에 금융위도 있을 것 같아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김남근 위원** 특히 구조조정을 하려면 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유압코나 이런 데들도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MBK 사태 관련해서 금융위는 일단 협력업체, 납품업체, 입점업체들이 사실 자금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은행권 중심으로 해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긴급자금 지원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이 부실채권 정리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부실채권은 부실 경영에 책임 있는 대주주인 MBK가 더 과감하게 책임감을 갖고 해결하는 게 기본이고, 그래야 인수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왜 그러면 MBK가 사기적 금융거래 한 거에 대해서 금감원은 지금 빨리 처벌을 안 하고 있나요? 금감원이 처벌에 나서면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위탁 선정 계약 취지상 바로 국민연금이 투자한 돈도 회수하게 되고 MBK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우리 사회가 제재를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회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텐데 왜 그 건 늦어지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아닙니다. 전단체 부분은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해서 검찰에 고발했고요. 나머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가능한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조사해서 엄중하게,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남근 위원** 아니, 저번에도 똑같은 얘기 하셨는데, 검찰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수사 끝날 때까지는 안 할 거예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아닙니다. 하여간에 금감원……

○**김남근 위원** 행정기관이 행정기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사기적 금융거래가 있었다 그러면 제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재를 해야지,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들도 금융적인 제재를 받은 그런 사모펀드 운용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투자를 못 하고 투자된 거 회수한다 또 이런 게 보여져야지, 제대로 단죄를 받는 모습들이 보여져야지 MBK도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을 더 내놓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부가 쭈뼛쭈뼛하고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못 해요, 금감원이 그 제재를? 그때 금감원장도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한다고 그랬는데 그러고도 지금 몇 개월이 또 지나고 있잖아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그렇지 않고요. 하여간 금감원을 통해서 더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래서 금융위, 금감원이 제가 보기에는 좀 제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온갖 부정 거래들에 대해서 그대로 눈 감고 덮고 하다 보니까 자본시장도 굉장히 혼탁해졌고 우리나라의 금융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많이 갖는, 그런 것 때문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도 있고 그랬던 거 아니겠

어요. 이 문제도 저는 그런 것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세세히 조사해 가지고 제대로 된 단죄 하는 모습 같은 것들을 좀 보여 주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또 유암코 같은 데를 통해 가지고 한번 좀 실력을 보여 주셔야 된다. 제대로 구조조정을 해서 이게 살아날 수 있도록,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자부장관님, 지금 계속 망가져 가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제 납품들을 안 해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그래도 중소기업들은 좀 납품을 계속하면서 거래를 유지해 나가는데 오뚜기, CJ, 농심 이런 큰 식품회사들이 현금을 갖고 와라 그래서 현금만 지금 2000억을 선납을 해 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홈플러스가 운영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자금들인데 그걸 다 하고 있고 MBK 측에서는 더 이상 돈 못 내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요 대기업들이 납품을 안 하니까, 물건이 제대로 없으니까 소비자들이 또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점점 더 악화되는 모습 아니겠어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김남근 위원** 그래서 MBK 측에서 사재도 출연하겠다고 그랬는데 적어도 자기들의 운용 수익 같은 걸 가지고 보증을 서라, 그러면 정상적인 납품들이 되면서 홈플러스가 정상적으로 좀 굴러가면서 새로운 인수자를 찾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도 신경을 좀 쓰시면서 필요한 그런 납품, 그러니까 주로 식품 그런 납품을 하는 대기업들과도 한번 잘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난주에도 저희가 납품업체하고 홈플러스 간에 같이 회의를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유념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보건복지부장관님, MBK 운용사와 같은, 주로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위탁 운용사가 제대로 된 그런 정상적인 운용을 하는 회사인지, 아니면 그냥 인수한 회사들 전부 다 자산 매각하고 그래서 그런 약탈적인 인수, 약탈적인 이익을 내는 회사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사하고 그런 거에 맞게끔 투자하는 이런 걸 보통 스튜어드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국민연금이 하도록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수탁자 책임활동 말씀……

○**김남근 위원** 수탁자 책임활동을 사모펀드에 대해서, 대체투자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다는 게 지금까지 답이었어요. 그런 걸 제대로 좀 파악을 하고 오셔야 돼요. 지금 예민한 때입니다,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대체투자 부분의 책임활동은 법안이 지금 계류 중이어서요 저희가 빨리 그 법안 논의를 하고요.

○**김남근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꼭 법안으로 해야 할 건 아니지요. 지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법안으로 했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아닙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7월에 대체투자 위탁사 선정할 때 그 수익의 질을 고려하도록 평가지침을 한번 바꾼 바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래요. 지금은 위탁사 선정지침 그걸 갖고 하는 건데 거기 안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맞습니다.

○김남근 위원 지금도 MBK가 그런 사기적 부정거래로 금융기관의 제재를 받으면 회수를 할 수가 있어요, 투자금을.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맞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런 의사를 정확하게 보여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국민연금이 2조 5000억 원을 MBK가 운영하는 사모펀드들에 투자를 했어요. 그중에서 지금 한 1조 3000억 원 회수를 했고 앞으로 집어넣어야 될 돈들도 한 5000억 있는 것 같고.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맞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다음에 회수해야 될 돈들도 한 7000억, 9000억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도덕한 사모펀드들에 대해서는 또 사기적 부정거래까지 해서 금융기관 제재를 받는 그런 사모펀드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민연금이 투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MBK 같은 건 퇴출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런데 그런 표시를 안 하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그런데 위원님, 아까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는데요 아직 금감원에서 위탁사에 대한 조치가 없어서 저희가 선정 취소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남근 위원 그러면 금감원이 이제 제재를 하면 바로 선정 취소 이런 걸 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다음에는 우리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우리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4000포인트 갔다가 다시 좀 조정을 받다가 오늘 보니까 다시 회복을 했네요. 5000까지 가려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д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이덕원 저희들이 자본시장 역시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세 가지 축인데요. 첫 번째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두 번째는 주주가치 중심 문화 확산, 세 번째는 수요 기반 확대 및 자금의 선순환,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추상적인 그런 것보다는 조금 구체적인 게 필요하고요.

4000포인트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물론 실물경제, 반도체 이런 게 뒷받침해 준 것도 있지만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이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 주주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지는 않는다 이런 신뢰들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것의 일련의 정책으로 지금 국회에서 자사주에 대한 의무소각 제도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이나 은행, 증권사와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활동들을 일 본처럼 강화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런 정책들도,

계속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는 것들도 코스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가겠다 그런 걸 좀 금융위가 보여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일본에서도 밸류업 정책이 성공했던 건 지배구조 개선을 하는 이런 법령을 고친 것만 가지고 된 게 아니고 그런 법령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를 잘 고치지 않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일본의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GPIF 같은 것들이 계속 독립이사 3분의 1 이상으로 바꿔라, 임원 보수 제대로,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 아니냐, 배당정책 좀 더 높여라, 이런 소위 말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게 한 10여 년간 쌓이면서 한 3배 정도 주식 가치가 올라간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

그런데 국민연금이 그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감사 때 제가 한번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하는 자료들을 좀 내 보라 그랬더니 자료를 만든 적도 없대요. 이행평가나 점검을 받아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몇 가지 자료들을 그 뒤에 받아 봤습니다마는 공개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본 게 딱 두 번 있었다고 그러고 비공개 중점관리 대상 기업으로 선정해 본 것도 몇 가지는 있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16년부터 시작했는데 매우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금융위원회한테 한번 그런 평가를 해 본 적이 있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맞지요? 국민연금이나 은행, 증권사들에 대해서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 금융위가 이행 점검이나 평가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시스템은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ESG기준원 통해서 이행 점검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은……

○**김남근 위원** ESG기준원이 그걸 하고 있는지는 점검해 보셨어요? ESG기준원은 안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운영을 하니까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본은 금융감독청이 매년 했던 말이에요,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성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적어도 이사회가 독립적인 이사 3분의 1, 2분의 1 이상으로 안 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그걸 다 바꿔 내도록 했고 PBR 2 이상으로 전부 다 배당성향 같은 것들을, 주주환원 정책들을 높이도록 했고, 그러니까 3배나 주식 가치가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이행 평가나 점검을 보건복지부가 한다면다는 것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것 같고, 지금까지 보여 주신 모습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일본처럼, 영국처럼 금융감독기관이 이행 점검과 평가를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침 18년에 도입하면서 계속했고 지금 중점 관리 말씀 주셨는데 의결권 행사할 때 배당이나 이사의 독립성 부분은 감안해서 프락시 보팅(proxy voting)을 하고 있고요.

○**김남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을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이행 점검이나 평가를 한 적이 있었냐? 없대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2018년 도입 이후에 전체적으로 평가한 적은 없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러면서 뭘 보건복지부가, 지금 10년이나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겠다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그런데 제 말씀은……

○**김남근 위원** 이제 국민연금이나 이런 기관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런 데들이 제대로 된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하는 것들이 우리 5000포인트,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밸류업 정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돼야 돼요.

내년이면 대대적으로 지금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5%, 10% 이상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그런 지배구조 개선이나 배당성향의 변화들을 내년 3월 주총을 앞두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부가 하라고, 또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나 점검을 하겠다고 그러지도 않고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위원님, 저는 두 가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연금이 투자자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금융감독원이 위탁사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투자자로서 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챙기고요, 금감원이든 금융위든 금융감독 규제 당국에서 해야 될 일들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부총리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을 활성화하는 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굉장히 우리 주식시장 활성화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하고 금융위에만 맡겨 놓지 말고 두 기관하고 잘 협의를 해서……

결국은 어떻게 이행 평가와 점검을 하느냐가 활성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일본도 금융감독 당국이 철저하게 이행 평가와 점검을 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는 것들은 세계적으로도 그런 예가 거의 없고 지금까지 해 왔던 걸로 봐서도 저는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융감독 당국이 제대로 된 스튜어드십 활동들에 대한 이행 평가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관 간의 협력, 소통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를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전남 여수시을의 조계원 위원입니다.

먼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조속한 구조 작업과 사고 수습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질의에서 여수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구조 개편 작업을 정부가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주도적으로 나서 달라, 그리고 그와 관련된 법적 장애물들 제거해 달라, 그리고 필요한 R&D나 이런 예산들 지원 그리고 세제 감면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요. 오늘은 고용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수시는 석유화학산업 위기로 지난 8월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체감이 되지 않는다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단순히 지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고용안정 대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는 곧바로 지역의 엄청난 고용 쇼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실업급여자 수는 44.1% 증가했고 그리고 보험가입 사업장 수는 6.3%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구인 인원은 30.2%가 감소했고 구직 건수는 오히려 44.8%가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미스매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이전 화면 다시 보여 주시지요.

그리고 특히 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 감소는 극적인데요, 2025년 7월에 조합원 수는 3411명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5356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즉 이는 산업 위기가 고용의 붕괴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장관님?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위원님.

○조계원 위원 다음 화면이요.

그리고 특히 여수산단의 화물운수 종사자 소득 감소도 심각합니다. 여기는 노동자로 분류가 안 돼서 이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는데 지난 8월 실태조사 결과 기존에 한 달 평균 20~30회 운행 회전 수가 4~10회 수준으로 급감했고 이에 따라 월수입은 100만원 이하 또는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협력업체 등 중간계층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주력 생산 인력과 상시고용 인력의 감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여수산단 고용위기 확산 시나리오인데요, 3단계에는 1차 원청 정규직 노동시장까지 고용의 위기가 올 것이다.

그런데 제가 여수의 지금 상황을 보면 롯데케미칼 등 이미 명예퇴직 신청도 많이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인 것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조계원 위원 이 정도로 심각한 고용위기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수는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는 지정되었지만 고용위기지역으로는 정량적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지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제가 결산 질의 당시에 ‘지정만 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고용위기를 겪지 않고 넘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장관님께 말씀드렸는데 당시 장관님께서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은 처음 실험하는 제도이고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부족함이 없는지 파악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검토와 대응 대책은 좀 마련되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그 이후로 위원님 잘 아시지만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야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1차 추경에 저희가 45억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데 홍보라든지 전달하는 체계가 조금 미흡한 면도 있는 것 같아서 그것 점검해서 계속적으로 집행을 많이 하도록 하고 또 저희가 계속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위원님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3단계 시나리오에서 조금 어려움이 가중된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석유화학산업은 고도의 장치산업이고 연속공정 산업입니다. 이 때문에 필수인력을 구조조정의 마지막 순간까지 유지하는 산업 특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지표가 완전히 무너진 뒤에야 고용위기가 공식 통계로 잡히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여수의 지표는 실업급여 증가, 구인 감소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용위기 지역 지정이 필요한 정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용위기 대응이 아직까지는 예산상으로나 실질적인 정책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흡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 노동자가 참여하는 공동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여수형 고용안정 및 지역상권 회복 패키지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도미노처럼,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서 지역의 상권이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동의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고개를 끄덕임)

○조계원 위원 마지막 화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에 머무르지 말고 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미 붕괴하고 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됩니다. 여수의 노동자와 지역의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추가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편성돼 있는 예산을 잘 집행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고 지역에 노사민정 이런 협의체들이 있으니까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협의체에서 한번 추가적인 방안들도 같이 공동으로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특히 노동자들의 요구 그리고 노동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화물·운송 업자들의 요구 이것들에 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구윤철 경제부총리님 그리고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에 국무총리님에 대한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계 최초의 수식어가 따라붙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막 D-300일 카운트다운이 어제 9일부로 시작됐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조계원 위원 전남 여수시는 내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2개월간 365개의 섬과 바다를 무대로 세계인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세계 각국의 섬 문화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섬 생태계와 지역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자리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섬박람회를 통해서 3000여 개가 넘는 아름다운 섬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섬 자산을 전 세계에 알리고 섬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소중한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전라남도과 여수시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한 국내 섬 보유 지자체 모두가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2026년 섬 방문의 해 지정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또 총리님에게도 말씀을 드렸고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하셨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희들도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요. 그 지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고마운 말씀이신데요 단순히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나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행정적 협조도 필요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상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부총리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내년이니까 올해 예산편성에 반영이 돼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재수 해수부장관님, 해수부에서는 금년 6월 1일부터 만 35세 이하의 내외국인이면 구매할 수 있는 연안 여객선 할인 이용권인 바다로를 판매하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일단 사업 초기라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다만 35세 이하가 대상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외에도 지자체 단위로 지역민 대상이나 특정 기간 동안 여객선 운임료를 할인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렇습니다. 명절 때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전라남도는 2022년부터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금방금방 재원이 고갈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전라남도가 관광자원이 풍부한 국외 향로의 섬을 찾는 외지 관광객에게 여객 운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은 50% 저렴한 비용으로 섬을 찾게 되고 그 섬에서 섬 주민들의 관광 소득 창출과 여객 선사의 수익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 알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관광객들이 섬에 가고 싶으나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비싼 여객 요금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래서 이번에 섬 방문의 해가 지정이 되면 35세 청년뿐만 아니라 전 세대로 확대해서 비싼 여객선 운임을 낮추고 섬 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섬의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공동화를 예방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위원님, 그동안 전례가 섬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는 명절 때 귀성객에 대한 지원은 있었는데 여객선을 이용하시는 일반인들에 대한 지원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특히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해 가지고 그런 방법을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 해수부에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특별히 내년에 여수세계섬박람회를 맞이해서 K-섬관광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이와 관련된 정책들을 실질적인 예산을 뒷받침받아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고요.

결국은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기재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사실은 조금 전에 해수부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섬 주민들에 대한 혜택은 저희들이 하는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면 재원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확정도 불가능하고 또 이런 선례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은 사실 굉장히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제가 지난 총리님 질의에서 관련 요금이 중앙정부에서 한 12억 5000만 원 정도 그리고 섬 방문의 해 관련 사업은 전반적으로 한 50억 원 정도 소요가 된다 이 점을 말씀드렸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부총리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때 총리님도 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셨는데 저도 사례를 살펴보니깐 이렇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례가 지역별로는 있다니까요. 그런데 한도가 있으니까 그 한도가 소진되면 더 이상 지원하지 못하고 끝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전남도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반값 지원하면 금방 소진이 되지요.

그래서 이번 섬 방문의 해를 지정하고 한 12억 5000만 원 정도 추가로 그와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섬 방문의 해가 K-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

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확인하고 검토해 보지만 선례가 없어서 저희들 고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시간이 2분 50초 남았는데요.

다음으로 송미령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차관입니다.

○조계원 위원 아, 장관님 안 나와 계시네요.

농식품부는 지난 20일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7개 군을 선정·발표하셨더라고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화면에도 선정된 지역인데요. 농어촌의 인구 감소, 고령화에 따른 농어촌 소멸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과거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는 2022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5개년 계획으로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 중간평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인구라든지 공동체 활성화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청산면 주민들에게 5년 동안 농촌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15만 원씩 지급했는데 그 효과가 엄청나더라고요. 사람들이 떠났던 청산면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걸로 검증이 되고 있고 농어촌을 되살리는 중요한 정책이 농어촌 기본소득이 아닌가. 그래서 그 사업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전국적으로 7개 군만 선정이 되고 충북에서는 단 한 군데도 선정이 안 됐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저희들이 6개로 사업량을 잡았고요. 평가를 해 보니까 충북 쪽에서는 순위에 들지 못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충북은 계속해서 방치하겠습니까, 아니면 방법을 찾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저희도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보면 예산이 국비가 40% 그리고 시도비가 40%, 군비가 30% 각각 예산 분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충청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좀 반대한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도와 군 간의 재정 부담 비율이 협의가 안 돼서 결국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과감하게 정부에서 50% 정도는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리고 시도비에서, 도와 군에서 나머지 50% 감당하는 그런 형태로 운용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재정 여력이 된다면 그렇게 해 준다면 시군 부담도 줄어들 테고요 또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계원 위원**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농촌 인구소멸도 막는 좋은 정책이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재부에 요청을 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장관님도 이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소위 논의 과정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좋은 정책이니까 한번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조지연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경북 경산의 조지연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연 위원**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정년 연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차관님 계시나요?

정년 연장, 65세 연장 연내 입법이 가능합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지금 당내에서, 여당에서 관련된 TF가 논의 중이어서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지연 위원** 고용노동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일단 입법 관련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장을 지금 내기에는 조금 걱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지연 위원** 일본 같은 경우에는 25년에 걸쳐서 65세 연장을 했었습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고용 연장 노력 기간으로 정하고 그리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선별 대상자 고용 연장 의무화 기간을 뒀고 그리고 2013년부터 2025년까지는 희망자 전원 고용 연장 의무화 기간 이렇게 차등화를 두면서 점진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게 노동계와 또 경영계 간에 어떤 입장 조율도 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업종별 상황들이 천차만별인데 이걸 일률적으로 입법으로 규정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우려의 지점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을 할 때 정년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정년 폐지라든지 아니면 재고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트랙들을 가지고, 일본과 같이 그런 선례를 가지고 논의가 함께 진행이 돼야 된다는 점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알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청년일자리의 감소를 최소화하는 건데 이게 여러 통계에서 이미 청년일자리가 감소됐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청년고용률이 역대 최악이고 청년일자리가 외환위기 이후에 최저치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2016년에 정년 연장을 60세로 의무화를 했을 때 청년고용률이 16% 떨어졌다는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한국은행 조사예요.

그리고 일자리가 대기업 관련해서는 더 많이 줄어들었는데 한 조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고령층 임금근로자는 약 8만 명이 는 반면에 청년층 임금근로자는 약 11만 명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안 그래도 기업이 고용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그런 지점에서 정년 연장 논의가 이렇게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그런 절차들 없이 연내 입법을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에 이 부담들이 청년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게 불 보듯 뻔하다 이 지점을 잘 참고하셔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알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리고요 환경부장관님,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1% 설정을 했더라고요, 감축목표를 세웠더라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53%에서 61%……

○조지연 위원 61%.

목표가 과감한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목표만 과감하게 세울 게 아니라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산업별로, 산업 부문에 탄소중립 이런 상용화 기술이라든지 이런 핵심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다 점검해 보셨습니까? 이것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기재부·기후부가 함께 한국 산업의 현실들을 고려해서 다른 감축 분야들과 상대적으로 완화……

○조지연 위원 지금 보면 산업 부문 탄소중립 핵심기술 중에 2030년에 상용화 가능한 기술이 7개밖에 없다, 그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철강업계 관련해 가지고 수소환원제철을 꼽고 있는데 수소환원제철 기술 역시도 상용화 시점이 2037년 아닙니까? 그런데 2035년에 이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 당연히…… 이거보다 목표 시점은 2년이 앞당겨져 있는데 37년에 상용화가 되면 이 철강업계가 감당해야 될 몫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기술적 대안 없이 목표만 상향할 경우에 결국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그런 상황도,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철강 분야에 수소환원제철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기는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37년에 사업화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번 탄소 감축 수단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2월에 산업부 산하의 국책연구원에서도 조사를 했던데 주요 다배출 업종별 탄소중립 추진현황 애로사항에 보면…… 그 조사 결과는 다 보셨습니까? 업종별로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지 다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대체로 다 점검했습니다.

○조지연 위원 대체로 다 점검했다고 하기에 목표치가 꽤나 높는데 저는 이 목표치

가 높고 안 높고를 떠나 가지고 이거를 실현 가능하게 하려면, 지금 기후대응기금이 기재부에서 기후에너지부로 관리가 전환되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내년 1월부터 전환됩니다.

○조지연 위원 저는 기후대응기금이 진짜 사실 과감하게 탄소 다배출 업종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동의합니다.

○조지연 위원 단순히 기업 지원이 아니라 그 기업들이 기술 상용화를 할 수 있게끔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기후에너지부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시고요. 특히 지난 3년간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에 대한 여러 가지 R&D 사업이 진행이 안 된 측면이 있는데 이 산업 부문의 탈탄소를 위한 R&D를 집중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잘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장관님, 12차 전기본 수립을 조기에 추진한다고 대통령실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니다.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겁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11차 전기본에 있는 신규 원전 2기와 SMR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금 묻는 겁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전기본은 2년 단위로 작성이 되고 있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또 NDC 계획이 확정된 만큼 NDC 계획 취지에 맞게 12차 전기본을 확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지연 위원 원전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원전 없는 에너지 믹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말씀하신 대로 탈탄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또 안전을 전제로 해서 원전을 주요 전력원의 에너지 믹스로 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원안위에서도 나오셨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예.

○조지연 위원 고리 2호기 연장 논의 재개가 예정대로 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13일로 하는 걸로……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이번 13일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조지연 위원 지금 연장 결정을 해도 7년 남짓 연장하는 거 아닙니까? 빠르게 조속하게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부장관님,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준비하고 있지요, 회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조지연 위원 거기에 SMR, 그러니까 소형모듈원전이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에서 빠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건 저희 부가 하는 건……

○조지연 위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과기부하고 기재부일 것 같습니다.

○조지연 위원 부총리님, SMR은 빠집니까? 어떻습니까? 답변을 빨리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SMR을 저희가 중요한 어젠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아니요, 중요한 어젠다로 생각하면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안전에 지정을 하셔야지요. 지금 AI 3대 강국을 논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매우 중요한데 원전도 조금 불투명해, 그런데 SMR조차도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겁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조지연 위원 아니, 중요하게 생각하면……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저희 검토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리고 환경부장관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조지연 위원 온실가스 감축하는 게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어떤 협의가 다 있어야 되고 최소한, 중국이 제일 많이 배출하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조지연 위원 탄소 배출을 30%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 지구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런데 중국은 몇 % 감축 목표를 세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중국은 2030년까지 최대 피크로 해서 2060년을 탄소중립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중국은 감축 목표를 7~10% 잡았습니다. 제가 그것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관께서도 우리가 이만큼 실천하는 만큼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내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당연히 내야 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중국에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조지연 위원 그리고 국토부장관님 혹시 계시나요? 차관님 계시나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기조실장 나와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기조실장입니까?

민노총이 심야시간 새벽배송 전면 금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택배 사회적대화기구 회의가 국토부 주관이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예.

○조지연 위원 제가 지난번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여쭙보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토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저희도……

○조지연 위원 다양한 논의 당연히 하셔야지요.

그런데 지금 노동자들이 정작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 그리고 야간근로 하시는 분들

이 새로운 선택지가 없으면 또 다른 야간근로 일자리를 찾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소상공인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맞벌이하는 부부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단순히 이것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 노동자들한테, 새벽 근로를 하시는 분들한테 휴식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그런 안전조치를 마련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국가가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겁니까?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들의 어떤 현실적인 수요를 감안해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예.

○조지연 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노후 산단을 리모델링하고 인프라 확충하고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데 지금 산업단지 포화에 따른 추가 조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이거는 장관님 소관 아닙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정은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아니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지정은 국토부에서 하고요 운영은 이제……

○조지연 위원 운영은 여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모도 산업부 산하의 기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산업단지관리공단……

○조지연 위원 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조지연 위원 최근 10년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후보지 선정을 보니까 선정 결과가 연간 한 곳 아니면 두 곳이에요. 그런데 2022년,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 올해까지 보면 한 개의 후보지만 선정을 해 왔거나 2025년 올해도 한 개 후보지만 선정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한 개밖에 안 되느냐 물어보니 이게 예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재부장관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전 국민 15만 원 이것 나눠 줄 게 아니라 기업 유치해서 지역정부가 산단 조성해서 지역 정주여건도 늘리고, 지역 정주여건의 핵심은 일자리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산단 조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전국에 한 곳만 선정한다는 게, 그것도 예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정말 안 맞고요.

그리고 산단 조성하는 데 대부분, 최근에 소요되는 기간들을 보니까 8년에서 대개 10년, 규모가 큰 거는 한 십몇 년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미 포화 상태에 있는 지자체도 있을 텐데 추가 산단을 요청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소, 이게 한 곳이 됩니까? 최소 두 곳은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재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거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가지고 수요가 어느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것은 또 어떤……

○조지연 위원 한 곳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저희들이 수요를 한번 봐서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예, 해 주시고요.

내일이 농업인의 날입니다, 장관님.

차관님이 계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런데 저는 농업·농촌의 현실이, 여력이 너무 녹록지 않아 가지고 사실 농업인들 뵈 때마다 얼굴을 못 들겠는데……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것 2개년 사업이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런데 올해 전국에 열두 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 영호남 할 것 없이 여러 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런데 이게 1개년 사업에는 예산이 반영돼서 잘 가다가 2개년 사업에는 기재부 소통하는 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돼서 지금 전국에서 난리예요. 아니, 이것 어떻게 조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예산은 살리셔야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삭감……

○조지연 위원 아니, 이게 계속사업인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삭감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 예산편성 단계에서 못 챙겼고요.

○조지연 위원 삭감이 돼서 지금 정부 본예산에 없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니요, 그 용어상으로는 저희들이 잘 편성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조지연 위원 현장에 혼선이 없도록……

정말 이것 다른 예산에 비하면 아주 적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농업인들 실망시킬 것이 아니라 기재부에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기질 비료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매년 추경 때 편성해 가지고 오는데 이게 국비가 매칭되지 않으면 지방비나 이런 게 다 붙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추경 때 썬짓돈 쥐여 주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충분히 소통해서 본예산에도 일부 반영이 돼야 된다는 입장을 밝혀 두고 기재부에서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농림부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리고 팔공산국립공원 얘기 좀 할게요.

이게 2023년에 지정됐습니다. 원래는 국립공원이 조성되면 5년간 집중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난해 감액 예산이 국회에서 이렇게 단독 처리되면서 공원시설에 대한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들어가야 될 기반시설들이 미흡해요.

예를 들면 관리소, 야영장, 생태탐방원, 주차장 이런 기본시설들이 지금 정비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 팔공산국립공원,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이게 국립공원 중에서는 세 번

제로 많이 탐방객들이 찾는 장소로 통계치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 너무 안 닦여져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고 시설 마련이 무조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탐방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생태탐방원 조성하는 것이 가장 핵심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보니까 속리산 그리고 후내년에 태안해안, 월출산 이런 게 준공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것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 소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이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 보십시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미조성된 것이 한 10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입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지 사전 협의 등을 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금 체불 대지급금 관련해 가지고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세 체납 절차로 환수를 신속하게 하는 조치인데 이게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부에서 아마, 근로복지공단에서 이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예산에 그게 담겨지지 않아서 시스템 정비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지급금 환수라는 것은 지금 누적 회수율이 27%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국비로, 국민 혈세로 기업을 대신해서 임금을 변제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회수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국세 체납 절차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시스템에 대한 예산도 논의해서 가지고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의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 민주화의 성지 그리고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 안도걸입니다.

저는 오늘 고용부장관님 그리고 금융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장관님께 퇴직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퇴직연금 가입자 수가 지금 714만 명, 적립금 430조. 우리 근로자를 위한 든든한 노후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머지않아 많이 축소가 되게 됩니다. 이를 대체해서 주력 공공연금의 위상을 빨리 확보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퇴직연금이 아직 이름값을 제대로 못 하고 있네요. 가입률이 지금 53%에

불과합니다. 연금 수령 비중 13%입니다. 모두 다 일시금으로 지금 찾아 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수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2% 초반대지요. 왜 이렇게 낮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자산이 예적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88%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결국은 자산운용을 지금 개인사업자나 또 근로자한테 맡겨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국민연금이 답입니다. 기금화입니다. 자금을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기금을 만들고 거기에 전문 자산운용기구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겠지요.

지금 국민연금의 5년간 수익률이 8%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퇴직연금을 기금화해서 이 정도의 수익률을 올린다고 하면 한 해에 적립금을 23조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입자당 322만 원의 소득이 늘 수 있는 겁니다. 이 소득이 지금 날아가 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기금화에 대한 시범을 우리가 해 봤어요. 그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지요. 푸른씨앗이라고 합니다. 이게 금년 연환산 수익률이 9.3% 예상되는 거거든요. 그건 입증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퇴직연금을 기금화해야 된다.

다행히 고용노동부에서 노사정 TF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를 좀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TF에서 안건이 두 개입니다. 퇴직연금을 의무화하자라는 게 있고 이걸 기금화하자라는 게 있는데요. 의무화 논의는 굉장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소기업의 수용능력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순서를 생각해 봐도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금화를 통해서 수익률이 높아진다고 하면 자발적인 가입이 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성도 없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금화에 중점을 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TF 구성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어떻게 하면 자산운용 수익을 늘릴 거냐, 어떻게 자산운용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만들 거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안의 구성을 보니까 퇴직연금 금융·연금 실무를 아시는 분들이 지금 없어요. 이런 전문가들을 조금 집어넣어서 균형 잡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용부장관께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 주시고 또 부총리께서는 국가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간단히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위원님, 노동부차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가 TF에서 논의할 때 기금형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잘 아시지만 연금특위 등에서 저희가 이걸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를 내서 검토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하여튼 연내에 권고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 우리 기간산업인데 지금 이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의 과잉 공급 그리고 중동에서 자립화를 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공급 과잉 문제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구조조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다행히 정부가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고 기업들도 사업재편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실제 상당수 기업이 아직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특별법 또한 굉장히 이견이 많아 가지고 너무 힘을 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급을 지금 다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기업들이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업재편 계획을 수립하려다 보면 서로 간에 필수적인 정보 공유가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위기 업종의 사업재편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공정위에서 해 줘야 될 게 기업결합심사 이것 빨리 기간을 좀 단축해 주시고요.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공동행위를 예외적으로 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이걸 별도 법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워낙 시급을 다투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있는 기업활력법을 개정해서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님 말씀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우선 현행법상에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특별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행법하에서도 관련 기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기업결합심사라든지 정보공유와 관련된 절차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왔고요. 그 요청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 중이고, 공정위도 지금 말씀하신 석화산업 구조조정 위기 상황 심각하게 공감하고 있고요. 진행 중인 절차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중이고, 지금 기업들이 좀 소극적인 것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공정위가 조만간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기업결합심사라든지 정보공유심사와 관련된 절차를 요청하도록 체계적으로 토론할 예정입니다.

**○안도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금 문제 해결에 임하고 계시다고 생각되고요. 또 법 개정에 있어서도 조금 융통성 있게 진행을 시켜 주시기를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 여쭙겠습니다. 우리의 미래혁신산업을 키우는 일이 시급하고 국가적인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펀드를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 펀드는 국민들이 다 참여해서 가지고 성장 과실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면 좋겠다라는 여망들이 모여서 성장펀드를 조성을 하려 하고, 금융위에서 저번에 기본적인 골격을 발표를 하셨지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안도걸 위원** 그리고 150조 중에서 절반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는 건데 이제 법안은 됐고 시행이 12월 10일 날 될 것입니다. 나머지 중요한 게 이제 민간자금을 활용한 75조 재원을 어떻게 조성하고 어떻게 제도를……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관련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1조 원이 반영이 됐네요?

○**금융위원장 이익원** 예.

○**안도걸 위원** 결국에는 이제 정부 재정이 후순위 출자로 들어가서 민간의 위험손실을 커버를 해 줘서 투자위험을 좀 낮춰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이게 빨리, 정부 예산에는 들어갔습시다라는 이게 시장에서 조성이 되고 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언제쯤 국민참여펀드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또 예를 들어서 1호 펀드 있잖아요, 자펀드가 될 수도 있겠습시다라는 언제 이게 출시될 수 있는지 한번 말씀 주십시오.

○**금융위원장 이익원** 말씀 주신 것처럼 첨단전략산업기금이 12월 10일 가동이 되는데요 그 전에 지금 벌써부터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성장펀드의 제1호 메가 프로젝트를 언제 빨리할 거냐,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빨리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참여형 펀드도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 따져 볼 것 따져 보면서 가능한 한 빨리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내년 상반기 정도면 첫 펀드가 아마 출시될 수 있다가 이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익원** 그런 목표로, 한번 저희들이 추진 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하는 걸 목표로 해 보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예,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국민참여형 공모펀드를 조성을 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성 실적이나 투자, 수익률, 모든 면에서 기대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된 게 정부가 바뀌면서 이 당시에 뉴딜펀드가 동력을 상실했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업정책과 긴밀하게 연관이 못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가 산업정책 차원에서 긴밀하게 연결시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좀 합니다.

그리고 펀드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인센티브가 좀 충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국민 참여를 시키려고 한다면 ISA라든가 퇴직연금 등 이쪽에 넣어서 디폴트옵션으로 추천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구체적인 맞춤형 투자 채널이 마련돼야 된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되고, 또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투자에 대한, 출자에 대한 규제라든지 또 그거에 대한 리스크 가중치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도 정비가 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금융위가 해야 될 일이고 또 부총리께서 해 주셔야 될 일은 이 펀드에 투자할 때 거기에 대한 소득공제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여기에 배당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분리과세 하는 이러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연기금 투자풀에서 이 펀드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길을 좀 열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부총리님 말씀 주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결국에 투자라는 게 위험과 수익 이것을 어떻게 잘 구조화하느냐의 문제인데 위험은 재정이 후순위로 들어가면서 위험을 낮춰 주고 수익은 말씀하신 대로 금융위가 규제 완화라든지 최고의 자산운용사를 선정해서 잘 굴리고 그다음에 수익 중의 한 부분이 수익이 났을 때 세제 부분을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까, 기재부랑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기재부도 국민성장펀드가 하여튼 우리의 전략산업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에서 자원을 지원해서 후순위로 깔아 주고 하는 그런 노력 또는 세제 지원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국민들이 하여튼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펀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부총리님이 AI 3대 강국에 진짜 가장 큰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시고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간판 프로젝트가 국민성장펀드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통화 시대로의 전환을 끌고 가는 엔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급결제수단으로서도 압도적인 효율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존 결제 시스템을 보완하고 또 대체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또 이 결제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새롭게 창출되는 거래 영역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결제 시스템을 뺀 게 아니고 기존 결제 시스템에서 놓치고 있거나 또 미처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시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건대 이런 영역이 어떻게 될까,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전 세계적인 공급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금 결제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해 환전 비용만 해도 1400억 원에 달하더라고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들어온다면 이런 걸 대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조 원에 달하는 외국인근로자 송금 시장이 있고요. 또 23조에 달하는 해외 관광객들의 국내 소비 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요즘에 환호하고 있는 K-콘텐츠 구매액이 연간 20조에 달해요. 저는 이 부분들이 바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서 우리가 개척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만히 있는다 해서 우리 손해 안 본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게 확산돼 있고 전 세계의 98~99%를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통화가 불안한 나라에서는 기축통화 역할을 사실상 해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이미 지니어스법을 통해서 제도화를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뒤질세라 지금 다른 나라들도 경쟁적으로 이것을 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새로운 변화에 가장 신중한 나라가 일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본이 스테이블코인법을 이미 제정을 하고 지난 10월 27일 날 첫 스테이블코인을 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뒤져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이익원 저는 스테이블코인에 관련해서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글로벌 정합성을 가져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혁신의 기회를 열어 줘야 된다는 그런 측면 하나, 마지막은 이게 그래도 처음으로 도입하고 여러 가지 금융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고 도입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도결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하여튼 저희가 자칫 우리 통화 주권을 뺏겨 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통화 주권을 지키고 또 어떻게 보면 디지털 통화 시대에 우리가 기축통화의 역할도 일정 부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저희가 담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 논의와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게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들이 일어나요. 통화 문제에 관련해서도 이게 통화량이 너무 팽창하지 않느냐, 인플레이가 되지 않느냐 또 예금은행의 그런 신용창조 기능을 대체해 버리지 않느냐,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게 빠르게 통화를 대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충분히 발행량과 유통량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두면 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걱정하는 것도 외환시장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스테이블코인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블록체인의 기술 기반이 있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거래를 추적하고 사전에 지금 결제 중지 같은 이런 장치도 둘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KYC라든가 AML 이런 것과 같은 제도적 예방책을 강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혁신의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발행을 하는 데 지금 관건이 되는 게 누가 주체가 될 거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은 CBDC를 발행하고 그에 기반해서 예금토권을 중심으로 하자라는 거고 금융위는 민간 스테이블코인 중심으로 하자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CBDC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잖아요. 프라이버시 문제도 좀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수요처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공공 스테이블코인하고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할 거냐? 서로 조화를 하면 될 것 같아요. CBDC가 잘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가되 민간 분야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자금 결제시장에서 저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운용 주체에 있어서 굳이 이것을 은행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예상되는 그러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아까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다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은행과 비은행기관이 협업하는 그러한 방식이 바람직할 것 같고 또 모델도 여러 개를 두어서 저희가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서 어떤 모델이 가장 잘 통하는지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시장 테스트를 하면 된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한번 주십시오.

○**금융위원장 이억원** 항상 깊은 통찰력과 전문성으로 저희들한테 좋은 제언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 주신 대로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라서 예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저희 관계 부처랑 다 짚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는데 그 협의 해 나갈 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그것을 다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결 위원** 그러니까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제도 도입을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혁신성을 확장하되 안정적 운용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원칙하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도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왕진 위원** 오래 기다려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는 경제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지난주 종합질의 때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요. 김민석 총리께서 세원의 확충과 시장 활성화 양자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부총리님께서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어제 정부·민주당 간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최고세율을 25%까지, 현재 정부안이 35%지요. 25%까지 추가로 낮추는 안으로 상당히 의견이 모아진 것처럼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얘기는 되지 않았습니다.

○**서왕진 위원** 현재 정부안이 35%인데 뭔가 조금 더 이런저런 고민을 한다 함은 올리는 건 아니고 내리는 쪽으로 아마 고민을 하는 걸로 언론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요. 그래서 기왕에 제기됐던 25% 안이 아마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질의 때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낮추는 것이 현재 정부안만 놓고 볼 때도 첫 번째로 상당한 감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특히 일반주주에 대한 배당의 증대효과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세 번째로는 사실상 부자감세와 같은 자산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부총리님,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최고세율을 현재 정부안인 35%로 낮췄을 때 감세효과가 연간 2300억 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최고세율을 25%로 더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올 건지 혹시 그런 예측치를 들어 보신 바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지금 그런 감세효과에다 또 배당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입까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졌을 때 저희들은 한 1700억~1900억 정도로……

○서왕진 위원 추가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서왕진 위원 아마 기재부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걸 추산해서 숫자를 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략 추산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25%로 최고세율을 낮추게 되면 연간 약 4600억 원 정도로 감세 규모가 추정된다고 이렇게 분석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5년간으로 계산하면 2조 3000억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이걸 아까 배당이 또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세율에 따라서 감세 규모도 상당히 커지는 거지요. 그래서 배당 결과에 따라서 숫자가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감세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35%보다 25%로 낮춰서 거의 한 2배 정도 감세 영향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감세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재정대책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인해서 일반주주들에 대한 배당 증대효과는 또 얼마나 될 건지 혹시 이런 분석을 해 보신 게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낮춤으로 인해서 세수감이 발생할 것이고요. 또 아마 배당소득 세율을 인하함으로 해서 진짜 배당이 활성화돼서 또 25%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으로 되는 게 한 2000억이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은 이렇게……

○서왕진 위원 그 부분은 완벽한 예측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기재부의 능력을 생각해 본다면 감세 영향에 대한 예측 또 실질적인 배당효과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이 좀 더 분명하게 정리가 돼서 정책에 대한 제안설명과 설득이 국회 내에서도 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시행했을 때 실제로 그 효과 부분에 있어서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46%, 상위 1%는 67.5%를 차지하게 됩니다. 1%가 67.5%를 차지하고 나머지 99%에게 약 32% 정도를 배당을 하게 되는데 이런 구조라고 한다면 특히 세수 정상화가 아주 시급한 지금 상

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이런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 때 부자 감세라는 지적,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부자감세 아니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또 전반적으로 배당이 일반적으로 보편화됨으로 인해서 일반 투자한 분들이 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이루어진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도 위원님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사실은 이를 통해서 전체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전체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나온다는 점, 이 점이 기대 요인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기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조로 볼 때 사실상 배당의 효과는 상당한, 자산 분야에 있어서, 주식 분야에 있어서 1%, 0.1% 부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간다면 이 구조는 뭔가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적 방안도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기재부도 좀 더 그 고민을 해 주시고, 적어도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정책을 합시다마는 윤석열 정부하고는 좀 다른, 부자감세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수준을 뭔가 완화하는 방안이라든지 그 효과 자체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인 어떤 긍정성이 있다든지라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어서 설득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서왕진 위원 이와 관련해서 감세 규모가 어느 정도 나올지 아주 정교하게는 힘들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분석을 하시고 또 배당소득 효과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증대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 당 차규근 의원이 제안했던 대안적인 배당 과세의 방안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분석된 의견을 저희 의원실에도 제안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우려와 또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최종 결정할 때까지 신중한 검토를 조금 더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논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도 분석하고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가컴퓨팅센터 광주 유치의 건 관련해서 과기정통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국가AI컴퓨팅센터 공모 과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유치를 하겠다고 그랬던 대선 공약 또 그 이후에 후속 국정과제로 분명하게 채택되었던 그런 상황들로 비춰 볼 때 그 비전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국가 정책의 혼선을 야기하는 것이고 또 특히 지역주민의 상실감 이런 상당히 중대한 문제를 드러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장관님께서 지난 국감에서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불발에 대해서 ‘민간 주도 사업이고 민관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공개입찰 건이었고 민간이 여러 조건 따져서 결정한 사항으로 정부가 개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서왕진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어쨌든 국가에서 추진하는 국가 추진 사업입니다. 국가 추진 사업이고, 국가가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대통령의 공약이 있었고 국정과제라고 하는 정부의 약속이 분명하게 설정돼 있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하고 약속하고 상당한 어떤, 그것을 일치시키는 작업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던 건데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에서는 공약이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과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현재도 광주시와 협력해서 AI반도체 실증 및 검증체계 구축사업 검토도 하고 있고 광주와 여러 가지 AI 인프라 측면, 모빌리티랑 에너지 측면에서의 미래 AX 협업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 어쨌든 공개적인 입찰에 따른 민간기업의 참여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과 다르게 기존에 진행돼 왔던, 광주시와 협업해 왔던 이런 사항들을, 실증사업들을 잘 체계화해 나간다면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왕진 위원** 그 부분은 조금 더 뒤에서 그러면 이야기 나눠 보기로 하고요.

문제는 어쨌든 이 국가AI컴퓨팅센터 설치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애초에 대통령 공약이나 정부 국정과제에서 광주 유치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해 왔는데 실제 실행 과정에서 지금 부총리님 설명을 들어 보면 정부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뭔가 영향을 미치거나 그 방향을 잡아 가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애시당초 공약과 국정과제 채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업의 특성하고는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괴리된 사업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광주 지역에서는, 심지어는 제가 가장 중요한 책임자인 시장님을 만나서 말씀을 나눠 봐도 그 과정이나 상황 자체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정부가 지난 9월에 기업 참여 부진을 이유로 해서 사업 구조를 대폭 수정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서왕진 위원** 그때부터 사실상 이 사업을 대통령 공약이나 국정과제 이행이라는 목표에 설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업 구조 자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 목표 자체가 실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판단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특정 지역을 선정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작업을 했다고보다도, 두 차례 유찰이 되면서 민간사업자들이 국가AI데이터센터 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조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광주도 유력 후보지 중의 하나였지요. 그런데 사실 그 결정사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간사업자의 결정사항이었습니다.

○**서왕진 위원** 그 당시 9월에 사업을 수정한 내용을 보면 총리님께서는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공 51%, 민간 49% 이렇게 원래 설정했던 구조를 민간 70% 초과로 바꾸고 또 민간의 매수청구권 삭제를 했고요. 또 30년까지 국산 AI반도체 50% 도입 의무 이것도 권고로 바꿨지요. 그래서 이 사업의 운영과 투자의 주도권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완전히 옮겨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관 협력 강화라고 하는 필요한 조치의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원래 이 사업은…… 민간사업은 SK가 오픈AI하고 사업을 하는 거라든지 다른 것처럼 민간 자체적으

로 하는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정부가 이 사업을 나서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국가가 공모를 한 이유는 국가 주도의 또 공공의 목표를 위한 사업의 취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그런 취지 자체가 너무 약화되거나 상실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정책 목표 자체가 오히려 상당히 후퇴한 그런 조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하고 또 대통령 공약하고 잘 연결이 되지 않으면서 그 시기에도 정부 여당은 광주에서 ‘광주 1호 공약을 이행하겠다’ 이런 약속을 현지에서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걸 보면 실제 사업구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 구조 변화의 본질적 성격이라는 것과 기존에 약속했던 또 기존에 정부가 설정했던 국정 목표라는 것의 괴리 자체를 정부 내에서 원만하게 잘 조정하고 정리해서 질서 있게 가져가지 못하고 각각 따로따로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정부를 신뢰했던 광주 시민들이 상당한 혼란과 상실감을 겪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제기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더 본질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국가가 AI 생태계 성장을 지원해서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지요. 지금도 그런 의지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원래 추구하고자 했던 원칙 자체가 좀 희미해지고 민간기업한테 다 맡기고 민간기업이 알아서 잘해 주겠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정부가, 과기정통부가 밝혀 놓은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공모지침서를 보면 국가AI컴퓨팅센터란 AI컴퓨팅 자원을 집적시켜서 운영·관리하고 산업·연구계 등에 공급하는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컴퓨팅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거대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그 사업이 잘되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일인데 그것에만 맡겨 놓지 않고 가장 중요한 지금의 인프라를 스타트업이라든지 공공연구소라든지 또 작은 민간기업들에서도 이것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다양한 AI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취지 이런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정부가 초기 마중물 투자도 30%지만 30%도 하는 것이고 또 특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중에 그것 수요를 창출해 줘서 수요 연계하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결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정부의 주도성이나 그 공공의 목적을 제대로 관철하는 것을 뭔가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고 기업의 선택이고 기업이 알아서 잘하기를 그냥 기대한다, 마치 그렇게 변한 듯한 인상을 주게 되면 애초 이 사업의 취지나 목표 이것 자체가 상실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점과 관련해서 장관님의 확고한 정책 의지, 이 사업의 국정목표로서의 원래 원칙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지, 이렇게 사업구조 자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장관님이 분명하게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애초에 학계 그리고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이 목적 자체에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민간에서 실제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적자를 보거나 여러 가지, 또 매수청구권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중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가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장치들을 두고 민간

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하면서 관에서도 정부에서도 이런 사업자,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자들을 선택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 민관 SPC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민관이 협력하는 SPC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애초에 목적하고자 하는 바를 저희가 훼손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을 잘 운영하고 좋은 레퍼런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위해서 정부가 계속해서 기업과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추가질의로 또 여쭙보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국토부장관님, 지난주에 일부 야당 위원들께서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요건을 판단할 당시에 9월 통계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고성 이 본회의장에서, 이 장소에서 좀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이 규제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때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표되어 있는 가장 최근의 가격 통계를 활용해야 하고 만약에 이것을 판단할 당시에 해당 달의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달의 통계를 활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맞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통계법에는 누구든지 통계가 공표되기 전에 이를 제공하거나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명확히 있더라고요. 이것도 맞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9월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는 15일 오후에 공표가 되는데 규제지역 지정 여부 판단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는 9월 13일에서 14일 날 열린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9월 통계가 발표되기 이전에 열렸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위원들에게 9월 통계를 제공하거나 이를 활용해서 심의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통계법 위반으로 보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야당이 통계법 위반을 종용하는 거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현재 9월 13일 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미 회의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국토부에서는 다음 달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실제 그 전월인 8월 이전 통계를 가지고 주거정책심의위를 진행했고 또 그 결론에 따라서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의 규제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통계 문제 제기도 사실 명확한 법적 해석은

덮어 두고 아니면 말고, 조작, 위법 이런 선동적인 말들로 계속 의혹만 부풀리는 식인데 이걸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대중을 선동하고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매우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저희 국토부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 행정소송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소가 제기됐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행정소송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행정소송에서 어떤 게 과연 법적으로 분명하게 옳은지에 대해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 저는 오늘 실용적 ODA 예산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7월 22일 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기 나와 있어요. ‘연간 수조 원이 들어가는데도 납득이 가지 않는 해외 원조 사업이 많다. 국위 선양과 외교상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 이런 말씀 하셨는데 기억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임미애 위원 지난 9월 언론보도에 따르면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씨와 그리고 통일교 사이의 청탁을 통해서 캄보디아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수사를 받고 있는 ODA 사업이요 기재부 소관 사업이요.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EDCF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사전에 절차를 좀, 여러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5년도에 13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식량원조 말씀하시는 거네요.

○임미애 위원 이게 수사를 받고 있는 개도국 대상 차관 사업은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보니까 늘었어요. 예산이 2000억 원가량이 증가됐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검에서 캄보디아 등 아시아 개도국 차관 대외협력기금 관련해서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도 오히려 개도국 대외협력기금은 2000억 원이 증가되었다는 게 저는 좀 놀랍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그 부분 계속사업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민간 전대차관은 아예 그냥 집행도 하지 않았습시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전대차관은 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임미애 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국익에 연계된 실용적 원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ODA 예산 중에 저희가 올해요, 올해 유엔세계식량계획에다가 1900억가량, 그러니까 쌀 15만t……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15만t이요.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에는 규모가 확 줄었어요, 3분의 1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이제 5만t으로 이렇게……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신인도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당초에 저희들이……

○임미애 위원 공여국의 입장에 따라서, 쌀이 조금 남아돈다고 해서 어느 해는 15만t 그냥 갑작스럽게 또 5만t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이건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2018년도부터 저희들이 연간 5만t을 했었는데……

○임미애 위원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2024년, 25년 하면서 이게 10만t, 15만t으로 확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24년, 25년 늘었는데 갑자기 26년도에는 국내 사정에 따라서, 그 사정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준 거예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가질 그 신인도에 끼칠 영향을 조금 걱정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잠깐만요.

(제품을 들어 보이며)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이게 영양강화쌀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진에도 나와 있어요. 이것은 크래커예요. 이것은 영양실조 아기들한테 짜 먹이는 영양식이예요.

세계식량계획에서, 이 지구에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 조달시장을 통해서 물건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농림부에서 그동안 장벽으로 여겨졌던 여러 가지 장벽들을 해소해 내면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이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납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쌀이라는 것이 15만t, 그전에 10만t 이렇게 공여가 되면서 우리도 유엔 식량기구의 조달시장에 참여를 하게 된 거지요.

이 조달시장의 규모가 식량의 경우는 3조 원대고요, 식량을 포함해서 나머지 다 합치면 45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모로 치면 굉장히 큰 시장인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 시장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나 기술력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행정에서의 절차 그다음에 이게 인증 이런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큰 시장에 한 번도 접근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농식품부가 올해 아주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유엔 식량 조달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인 거지요.

그런데 저는 이 조달시장에 대한민국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대한민국 정부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원조를 해 나가는 국가—공여국—입장에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2년간에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너무 많이 늘었고요. 저희들이 5만t 하더라도……

○임미애 위원 3분의 1이 아니라 좀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이 460억 정도를 국제 FAC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633억이니까 내년도에도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내년도 ODA 예산이, 그동안 너무 많이 늘다 보니까 이게 효율화, 내실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일단은……

○임미애 위원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원조를 주면서도 우리가 국익에 도움이 될 만한 영역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맞느냐, 바람직하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게, 국제사회에서 위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위상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원조는 원조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우리가 노릴 수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조달시장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접근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시장에 왜 대한민국 기업이 접근을 못 하느냐 하면, 사실은 국내 시장이 없기 때문에 대기업 입장에서 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이 시장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은데,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이 부분에 관심이 없다 보니 이 기업들이 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벽에 대해서 ‘기업 스스로 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하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 조달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대외 원조를 바라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참고로 유엔에서 사용하는 차량이요 3만 대래요. 내년에 모두 다 친환경 차량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대체로 일본 차량이라고 합니다. 지금 준비를 한다면 그 시장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런 부분도 관계부처하고……

○임미애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임미애 위원 보건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임미애 위원 자료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우리나라에서 17개 시도 중에 땅덩어리가 가장 넓은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아마 경북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경북이요, 1만 9000km<sup>2</sup>.

그다음이 어디인지 아세요? 강원도 1만 6000, 전남 1만 2000.

저희가 이런 걸 외우고 다녀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지역 시군의 인구가 몇 명인지 다 외우고 다녀요. 이상한 일이지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굉장히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치료 가능 사망률을 한번 보면요, 전국에서 가장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은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아마 말씀하신 경북이나 전남 지역이 취약합니다.

○임미애 위원 강원도하고 경북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치료 가능 사망률 얘기가 나왔으니, 서울 강남에 사는 분하고 경북 영양에 사는 분하고 비교를 하면요 3.6배나 높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영양군의 군민들은 정시에 도착하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그래서 사망하는 인구가 110명가량이 됩니다. 반면에 강남에 사는 사람은 29명 정도입니다. 3.6배가 높습니다.

이러니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 그걸 피하고자 자꾸 수도권으로 몰리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답답한 건 경북에 상급종합병원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아니네, 올해네요. 국정과제에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 경북에 국립의대를 설립해야 된다는 것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서 무지 애를 썼는데요. 경주에 있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도 한번 보실래요? 상급병원 현황 나와 있는 지도 보여 주세요.

지도를 보면요 중간이 뺨 뚫려 있어요.

지도가 없군요.

경상북도 북부권하고 강원도 남부권까지 해서 상급종합병원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뿐만 아닙니다. 경북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도 17개 시도 중에 꼴찌예요. 표를 보면 세종시가 꼴찌인 것처럼 나오지만 세종시는 대전 안에 있기 때문에 세종을 제외하면 경북이 꼴찌입니다. 필수의료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내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는 당당하게 꼴찌고요. 대놓고 꼴찌입니다, 이걸.

22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이 응급의료 분야 의료 취약지에 해당됩니다. 전남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분만 취약 지역은 경북이 가장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 국정과제에도 지역 필수의료 강화 대책이 들어가 있고 현재 공공의료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 계획 수립 때 이러한 취약 지역에 대한 의료 공급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희가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있으니 국립의대 설립하는 거 어렵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동국대 경주캠퍼스를 2018년부터 22년 사이에 졸업한 학생이 519명이예요. 이 중에 딱 17명, 3.3%가량이 지역 의료 인력으로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나갔어요. 그러니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지역 내에 의료 인력을 공급해 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저희도 지역의료의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의사제 도입 입법을 지금 상임위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의료 사관학교도 만들어서 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안 등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 방안이 저는 경북 북부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립의대를 통한 의료인력의 양성과 지원이, 그러니까 배출이 되려면 저는 경북 지역에 국립의대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제 굉장히 오래된 주제인데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의사인력과 또 병원이 좀 같이 검토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력 확보에 대해서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를 검토하고 있고 또 의료기관에 대한 부분은 공공의료 종합계획에서 병원에 대한 육성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들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북에는 상급병원도 1개도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의료 환경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은 장관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역별 의료체계를 짜는 데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것과 동시에 저희는 저희 지역에서 제대로 된 보건의료인력이 양성되고 공급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국립의대의 설립이 매우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정부 내에서 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 주신 거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경남 창원 마산합포의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 최형두입니다.

오늘 법무부장관 안 나와 계시지요? 안 나와 계시지요?

법대 나오신 분들, 국무위원들 많으시지요?

법경제학이라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법경제학? 저도 법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겠습니다만 부총리님께 내가 OECD의 우리나라 부패 문제에 대한 인식을 여쭙볼 테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빚을 내어서 미래를 준비하고 민생을 보살피기 위한 재정을 준비하는 그 예산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누가 이것 답변하실……

부총리님, 이번에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김만배·남욱 등의 일당이 채기게 될 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700억입니다, 5700억. 그리고 남욱 1000억. 무려한 8000억가량 되는데 국가가 이것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법이 곧 경제고 정의가 곧 경제인 나라에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국가에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둬서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공무원 월급도 주고 법 집행도 하는데 세금을 거두어서 이런 특정 개발이익을 가로챈 사람들에게 개발이익을 모조리 쥐여 주는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약탈경제입니다, 약탈경제.

그래서 법무부장관이 나는 이것……

우리나라가 바로 서려면, 재정을 마음대로 퍼붓는다고 경제가 성장하겠습니까? 부총리님, 그렇습니까? 재정을 많이 퍼부으면 경제가 막 성장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돈은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형두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막 달러를 찍어 내는 나라니까 엄청난 재정 적자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한 해에 갚는 국채 이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규모 모르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말해 봐도 몇천조 되는 단위니까 실감이 안 날 테고, 미국 연간 국방비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사는 나라도 재정을 투입해서는 그 경제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에서는 그만큼 줄여야 되고 어딘가에서는 그만큼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법질서입니다, 법질서.

그런데 이렇게 대장동, 단군 이래 최대 수익, ‘화천대유 하세요’라는 말을 냈었던 그 대장동 수익을 검찰이, 국가가 최선을 다해서 환수해도 모자랄 판에 포기했습니다. 범죄수익도 추정 못 하는 나라, 이게 이제 어떤 인식을 주겠습니까?

말하자면 이것이야말로 국민 세금 거둬서 공무원 키우고 검찰 유지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키우는데 대장동 개발이익 가진 사람들에게 몽땅 몰아주는 것을 방치하고 외면하고 그것을 추인해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은 약탈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세금 거둬서 개발업자들에게 이익 몰아주는 나라, 이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중추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국채를 발행하고 국민 세금을 더 거두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법무부장관 안 나오셨는데 법무부의 역할이라는 게 단순히 기소하고 이런 역할이 아닙니다. 나라의 기둥을 잡는 것이고…… 법무부가 영어로 뭡니까? 여기 외교부장관님도 오늘 안 나오셨네. 법무부가 영어로는 DOJ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Department of Justice). 정의부입니다, 정의부. 왜? 정의가 서야 국가 기본질서가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법경제학, 제가 챗GPT에 조금 전에 물어봤습니다. ‘공정한 법 집행과 우리 경제에 대해서 논하십시오’, 공정한 법 집행은 시장경제를 보호하고요, 법적 예측가능성은 장기 투자를 유도합니다. 또 법은 사회적 역할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거둔 사람들을 처벌도 하지 않고 그 범죄수익도 추정하지 않는다면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게.

법무부장관님 안 나오셨으니까…… 이 문제는 OECD에서 따집니다.

OECD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다음 사건이요.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검찰을 무너뜨리니까 지금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사건 무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7년입니다. 2017년 이른바 검수완박 논의가 있기 전의 우리 검찰은 소매치기 잡고 이런 데 잡는 것 아닙니다. 경찰이 할 수 없는 지능형 범죄, 경제범죄를 때려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나라가 바로 서겠지요.

미국에서 한때 대통령후보까지 올랐던 줄리아니 같은 사람도 원래 검사 출신 아니니까. 그래서 줄리아니가 뜨면 월스트리트가 벌벌 떤다 그러고 그것이 월스트리트의 부정

과 부패와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본시장법 위반, 법률신문에서 제가 그래픽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게 2023년만 잠깐 떨어졌어요. 그때 갑자기 어느 대통령께서 그냥 검찰 수사도 강화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지금 다시 늘어났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이것은 검찰이 공연히, 자본시장법 위반 이것은 더욱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보다도 금융위원회, 그렇지요?

금융위원장님 안 계시는구나. 오늘 경제 다……

금융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고발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즉 국가기관에서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수사해서 기소해 달라 그랬는데 지금 검찰의 기능이 약하니까 자본시장법…… 그러면 개미들만 죽는 겁니다.

자본시장법이 뭐니까? 국세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자본시장이라는 게 그런 것이지요? 그렇게 건전하게 시장이 돌아가야 국세도 많이 거둬지고 그러지요? 그런데 부당한 수익 얻고 불법 주식거래 하고 그런 것을 처벌하지 못하면 어떻게 세금 내는 사람들이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OECD 보십시오. OECD가 이런 문제도 평가합니다. OECD 자료 보실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경제부총리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에서, OECD 국가에서는 투명성, 반부패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검수완박을 했을 때 OECD에서 검수완박이 우리나라 부패 수사 역량을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 부패 수사 총량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할 정도입니다. 왜? 아니, 검찰이 큰 도둑놈들 잡지 않는데 어떻게 땀 흘려 일해서 세금 내 가면서 그렇게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습니까?

국가라는 것은 이런 법의 질서를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 비경제 분야 때 또 많이 따지겠습니다만 지금 검찰이 윗선의 지시를 받아서 대장동 사건의 1심을 포기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700조, 800조 쏟아부으면 뭐 합니까, 이 큰 도둑놈들은 빠져나가는 데. 국가가, 대한민국이 국민 수탈 경제 국가로 되어 가고 있는데. 국민들의 세금 거둬서 이런 범죄자들 수익도 추정 못 하는 나라 만들었는데.

저는 이 문제가 OECD라든가 트랜스패런시 인터내셔널(Transparency International)—국제투명성기구—같은 곳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도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제시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답해야 될 것을 갑작스럽게 책임지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커럽션(corruption), 부패, 범죄 수익……

우리나라 몇 순위입니까? 지금 보십시오. 아시아·태평양에서 44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반부패 하려고, 그래서 김영란법도 하고 온갖 것 다 하지 않았습니까, 반부패수사부도 만들고? 그런 게 한순간에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의 거래는, 한국에서의 계약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아, 저기 뒤에 금융위원장 계시는구나.

아까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것은 금융위원회에서도 고발하고 그러지요?

○금융위원장 이익원 예, 금융위에서 조사해서요……

○최형두 위원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이익원 예.

○최형두 위원 그러니까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 말처럼 없는 죄를 만들어서 기소해서 저렇게 무죄가 난 게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이것은 시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조사해서 기소권 있는 검찰에 줬는데 지금 무죄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사 역량, 검수완박 때문에 경제범죄를 수사해야 될 검찰의 역량이 떨어지고 있고 그 수사를 가로막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2심에서 항소도 못 하도록 만들어 놔습니다. 이게 어느 정부가 그랬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혈세를 모아서 미래를 논의하고 민생을 두텁게 하는 예산 논의하는데 이렇게 정말 맥 빠지게 무너뜨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부패지수 보십시오, 부패인식지수입니다.

자, 이런 범죄수익도 이렇게, 화천대유와 같은 이런 엄청난 단군 이래 최대 범죄수익을 얻은 사람이 추정금도 안 내는 나라가 되었으니 외국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이것 우리 두산하고 거래하고 뭐 거래할 때, 마스가 이런 거래 할 때도 한국은 대충 후려치면 되고 뒷돈 오고 가고 권력자가 봐주면 기소해야 될 것도 기소하지 않고 항소해야 될 것도 항소하지 않는 그런 나라라는 인식이 들어서면 어떻게 우리가 국제사회랑 떳떳하게 거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스가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아니, 앞 슬라이드요.

이 GDP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때려 박은들 경제가 성장해야지요. 그런데 부패한, 부패하다는 나라에서는 GDP 성장도, 이것은 그냥 깨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경제학 전공하신 분들 알겠습니까만 왜 소련 경제가 무너집니까? 폴 크루그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시아식 투입 경제의 실패가 대한민국…… 그냥 이게 생산성이 높아지고 법적 투명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창의성이 높아지고 그래야 승수효과가 나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지 세금 많이 거두어서, 국채 많이 발행해서 그냥 AI…… 말만 AI 투자도 얼마나 많습니까? 해서 돈 때려 박으면 엉뚱한 데 새는데, 그리고 이런 범죄수익은 추정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런 나라가 성장을 하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15번 슬라이드 보십시오.

GDP와 법과 질서 지표 간 상관관계 그래프입니다. 이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검찰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길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참, 오늘 공수처는 나왔습니까? 공수처는 이런 수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해야 될 일을 가로막은 사람들, 범죄수익 추정 못 하는 나라 만든 이 사람들을 지금 당장 인지수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수처장 어디 계세요?

보십시오, GDP와 법과 질서.

우리가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부채만 늘어나고, 그 거대한 미국도 국가부채를 마구 늘릴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왜……

부총리님, 미국에서 왜 우리한테 관세를 막 매깁니까? 자기들도 부채율 때문에 국가부채 줄이려고 저러는 거거든요. 미국도 선거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국가부채 비율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관세를 가지고 국세 수입을 높이려고 우리 목을 조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미국도 마구 부채를 늘려서 할 수가 없는 나라인데 우리 부채 늘린다 그러고 그런 사이에 이렇게 범죄수익은 빠져나가고, 매우 심각한 사태입니다.

국무위원들께서 국무회의에 조만간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대통령님, 이것 공수처에서 인지수사 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대한민국에 대한, 법에 대한 신뢰가 쌓입니다. 오늘 법무부장관도 없는데 내가 부총리님 상대로 너무……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OECD 같은 그런 국제기구에서도 우리 법의 질서, 룰 오브 로(rule of law)…… 그리고 처음에 챗GPT를 돌려 봐도 이제는 삼척동자도 법이 엄하게 적용돼야, 법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경제가 성장한다, 그래야 계약의 기본 질서가 잡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히 항소해야 될 사건을 항소를 못 하게 하는 나라, 그래서 범죄수익이 추정 안 되는 나라,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24번 슬라이드 볼까요.

성장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장려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게 나라 지표를 가지고서, 지난번에 우리 국회에서 예결위 열리기 전에 예산토론회 공청회 때 했던 연세대학 교수가 나라 지표를 보고서 저렇게 분석한 겁니다.

기업이 일하도록 해 줘야, 즉 주 52시간 노동제 같은 것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정말 대한민국 1000만 인구를 먹여 살릴 만한 천재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52시간이라는 그 테두리에 갇히지 않고 중국이나 실리콘밸리나 대만이나 일본이나 이런 연구자처럼 밤을 새워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고 해서 이제 파업이 어디서 생길지 모르는, 도처에 파업의 지뢰를 묻어 두는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25번 슬라이드 볼까요.

정부의 연구개발비, 우리가 연구개발비 많이 늘렸습니다. 많이 늘렸는데, 이 효과를 보십시오. 정부의 연구개발 늘린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이렇게 성과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 예산심사에서 이것을 면밀히 따질 겁니다.

참 시간이 이제 다 끝나 가는데…… 지금 산업부장관님도 안 나오셨고.

부총리님, AI 경제를 하려고 그러면 전력 인프라가 아주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최형두 위원 그러면 원자력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스가 다음에는 마누가(MANUGA)라는 것도 거론되고 있지요. 미국과 한국이 뉴클리어(nuclear)로 협력하는 시대,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원자력발전소 짓는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원자력 공부하는 학생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원자력공학……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생들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원자력 기술도 원천기술을 우리가 못 갖게 생겼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살펴야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달 탐사하는 원대한 계획이 지금 좌초될 위기에 있다는 것도 준비했는데 이것은 보충질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검찰이 항소 포기한 것이 오늘 국무위원들께서 며칠 밤을 새우면서 예산을 짜고 논의한 것을 한꺼번에 수포로 만드는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의 중대함에 대해서 논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를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 저는 경제부총리님, 고용노동부장관님, 중기부장관님, 금융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은 편히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혹시 부총리 되시고 나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에게 선물 같은 거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고개를 저음)

○김한규 위원 혹시 그러면 제가 저희 지역 예산 반영이 돼야 되는데 부탁드리기 위해서 장관님이든 장관님 사모님께 명품 가방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한규 위원 그렇습니까? 일은 그렇게 해야 되지요?

세계 부패지수는 어떻게 정해지냐면 그 나라 국민들이 공무원과 정부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최근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 여당 당대표 부인이 대통령 부인한테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이런 일들을 보고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정해지는 겁니다. 자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높은 비중이 되는데요.

다행히 우리 부총리님께서 명품 가방 안 드려도 질의해도 된다고 하시니까 마음 편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고위 당정대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논의하신 걸로 언론에 나왔는데요. 기사들을 보니까 강훈식 비서실장님하고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하신 발언들을 보면 기존 정부의 입장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오늘 뉴스를 보면 배당소득 최고 세율을 25%로 정하기로 합의가 됐다고 나오는데,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것은 아니고요. 그냥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데 저희들 플렉서블(flexible)하게 자본시장 활성화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기로만 했지 무슨 특정한 숫자를 가지고 정부가 합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김한규 위원 플렉서블하게라는 것은 기존의 정부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저희들은 변화가 가능합니다, 변경……

○김한규 위원 물론 법은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정합니다만 그래도 주무부처인 부서와

또 정부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국회의 논의에 진중하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소영 의원님이 내신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에 공동발의를 했는데요. 당연히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소득이 많으면 누진세율에 따라서 과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금은 목표가 아니고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시점에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그 수단은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같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관심이 많아서 제가 부총리님께 계속 문의드리겠는데요.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은 활용도가 낮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최근에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으로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담은 종목들을 보면 미국 ETF가 대부분입니다. 언론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 이 PPT도 보시면 순매수 한 20개 ETF를 보면, 1분기 때 보면 우리나라 ETF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19위 정도 되지요. 그다음에 3분기 가장 최근에도 이렇게 주식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ETF는 미국 ETF를 국민들이 사고 계십니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도 부총리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왜 우리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고 자꾸 미국 시장으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희 한국 주식시장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장의 어떤 지배구조라든지 그리고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신뢰를 주는 측면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한규 위원 예, 맞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은 시장이 정하는 거지만 결국 정부의 의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본시장이 저평가됐다고 돼 있는 나라는 정부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 저평가 요인을 제거하느냐라는 의지를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해서 정부가 국민들이 미국이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을 보니 상당히 높습니다. 올해의 경우 10월 말로 벌써 연 20% 수익률을 냈는데요. 운용 규모도 그러다 보니까 200조 이상 늘어났습니다. 부총리님, 이렇게 수익률이 높게 되면, 좋게 되면 국민연금 적자 시점이나 연금 고갈, 이 시점도 자연스럽게 늦춰지는 거지요?

(한병도 위원장, 이소영 간사와 사회교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많이 늦춰질 것 같습니다.

○김한규 위원 제가 알기로 연 4.5% 수익률을 전제해서 연금 고갈 시점을 계산했었는데요. 기금의 수익률이 평균 1% 오르게 되면 5년 내지 6년 정도 고갈 시점이 지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금개혁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 논의는 하더라도 이렇게 수익률이 좋게 되면 우리 고갈 시점이 더 미뤄지기 때문에 더 여유를 갖고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연금의 수익률이 매우 중요한데요. 연금 수익률 확대 국민연금에

그냥 맡기시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정부 차원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일단 국민연금은 워낙 자체적으로 투자에 대한 지배 구조가 잘 확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맡겨도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한규 위원 높게 나오지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배고픈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더 나와야 된다……

○김한규 위원 예, 성장성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대상이 있는데 이거를 좀 조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또 두 번째 방안은 운용역들이 있는데 지금보다 더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고 우수한 인재들이 유출될 수 있지 않는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최근에는 많이 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기재부차관님이 운용위원회에 들어가는데, 기금운용계획이 매년 나오니까. 지금 보시면 내년도 배분안이 나오는데 14.9%에서 14.4%로 조금 떨어집니다. 아마 국내 주식이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조정하려고 투자비율이 14.4%로 나오는데요. 보시면 해외 주식이 38.9%나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국민들한테는 미국으로 가지 말고 국내에 투자하라고 하면서 우리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는 15%밖에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우리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전 세계 시장이 다 올랐으니까 국내도 오른 겁니까?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우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의 어떤 수익률 제고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그리고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조치 그리고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외국에서는 과거보다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최근에 외국 투자, 외국인 자본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예, 맞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 증시 상승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전 세계 시장이 다 좋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특히 더 좋았다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그런 요인들이 다 반영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봐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부의 노력도 계속될 거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시 활성화 대책들이 있다면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 페이지에서 보셨겠지만 이 정부는 종합주가지수 5000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국내에서 가장 큰손인 국민연금의 투자비율을 이렇게 낮추는 게 맞는 방향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에서 자율

성을 가지고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김한규 위원** 아닙니다. 운용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복지부장관님이 위원장이고 기재부 차관님을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당연히 돼 있는 기금운용위에서 이 한도를 정합니다, 그 한도 내에서 운용하는 건 기금운용본부에서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 한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은 다 변동성이 높은 투자 대상이라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설사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해외 주식을 국내 주식의 2배 이상 투자하도록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요.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투자 격언 때문에 여러 나라에 투자를 배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종합주가지수 5000이라는 목표를 생각하면 이런 부분도 유연하게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한규 위원** 매년 정하니까요, 최소한 내년은 힘들더라도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간 계획을 세울 때 투자비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운용 인력 관련해서, 저는 운용 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올해 보면 대체투자팀장이 민간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포함해서 매년 이렇게 운용 인력의 유출이 문제되고 있는데 혹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지금 정부도 운용 인력들에 대해서 성과 보상을 기본급의 한 1.5%까지 이렇게 확대하도록 늘렸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 성과급 산정 기준을 적용해서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확대했고……

○**김한규 위원** 올해 몇백조를 버는데 얼마 정도 인센티브로 나갑니까, 여기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저희들은 일단 한 100억 좀 못 되는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한규 위원** 인력도 많고 그런데 저는 1%는 어렵고 0.1%도 어렵고 0.01% 정도만 국민연금에서 성과급이라든지 아니면 숙소비 지원이라든지 출장비를 좀 늘려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성과가 있을 때만 운용할 수 있게, 아까 말씀하신 플렉서블하게 하신다고 하면 훨씬 기대가 큰 직원들의 사기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간에서 이 정도 수익을 냈으면 이분들은 조기 은퇴를 고민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런데 너무 많이 주면, 또 은퇴해 버리면 문제지 않습니까?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요. 그것도 중요하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우리 정부가 원했던 원하지 않은 종합주가지수 5000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지표 중의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주목적으로 두고 다른 원칙들은 적절하게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고민을 해 봐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관계 부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노동부차관입니다.

○김한규 위원 퇴직연금이 벌써 400조가 넘어섰습니다. 퇴직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바꾸려는 논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논의가 시작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실제로 다른 연금에 비해서 낮고 그다음에 노후의 안정적인 보장 측면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와 그다음에 노동계, 경영계가 같이 참여하는 TF를 만들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예, 맞습니다. 수익률이 2.9%지요. 아까 말씀드린 국민연금은 주식 말고 다른 대체투자도 있는데도 10월까지 20%였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지요.

이유는 아시겠지만 대부분, 82.6%가 예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퇴직금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용을 해야 된다. 저는 이 고정관념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제가 퇴직금을 퇴직하고 나서 운용하고 개인연금도 들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퇴직연금 중에서 주식에는 한 15% 정도밖에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2배 정도만 늘어난다 그러면 60조 원 정도가 추가로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고 해외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이 있고 갈수록 확정기여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이 운용 방안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70%까지 주식형에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적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식이 변동성이 있지요. 하지만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의 장점은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버티기 투자가 가능하고 변동성이 있어도 개별 주식과는 달리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이것을 감내할 수 있는 시간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안정적으로 가겠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노후 수익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이것 외에는 투자 시드머니가 없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투자한도 70%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올리거나 없애는 방안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퇴직연금의 은행 예금에 국한된 투자 방식을 바꾸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인 방안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위원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퇴직금이 후불임금적 성격,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감안해서 저희가 TF에서 다양하게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부총리님, 어제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이야기를 강훈식 비서실장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본시장법에 정작 자본시장에 대한 정의는 없거든요. 자본시장이 뭔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좀 확장 개념이겠지만 딱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주식시장 이런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김한규 위원 주식, 채권입니다. 자금을 조달하는 게 자본시장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상장회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상장회사도 자본 조달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상당히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PPT를 보시면 벤처 투자 건수와 금액이 모두 줄었는데요. 특히 초기 투자에 대한 비중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연간 벤처 투자 규모가 12조 원 정도인데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벤처 투자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40조입니다. 갈 길이 아주아주 멉니다. 종합주가지수 5000은 목전에, 사실 어려운 목표입니다만 이 비상장회사에 대한 벤처 투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분은 대통령께서 정하신 목표하고 실제 현재 투자하고 차이가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벤처 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또 고민을 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때 이 부분은 더 하고요.

아까 다른 분들, 금융위원장님하고 중기부장관님 기다려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소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조배숙 위원 조배숙 위원입니다.

국토부장관님하고 금융위원장님께 질의 예정이고요. 오늘은 경제 분야 질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난 8일 역대 최대 권력형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가 있었습니다. 워낙 중대한 사건이라 국민들 앞에 잠깐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총리님께 그냥 간단하게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7000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지요. 그렇지요? 그게 추징을 해야 되는데 추징을 못 했다, 국고 손실 아닙니까? 그런데 당연히 항소를 했으면 그것을 다튀서 7000억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포기해서 그 기회를 놓쳤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본론으로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번 항소 포기는 검찰 78년 역사에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검찰에 있어서 저는 아주 치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세상의 이목이 집중된 초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또 일부 무죄가 됐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더욱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기계적 항소 자제를 지시한 직후에 첫 적용 사례가 자신이 몸통으로 지목된 대장동 사건입니다.

국가적 비리 사건, 그것도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에서 검찰이 상급심 판단 포기했습니다. 우연입니까, 아니면 윗선의 지시입니까?

원래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검사, 공판검사는 만장일치로 항소 의견을 냈고 중앙지검장도 그리고 대검도 당초에는 항소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마감 7분을 남겨 놓고

뒤집혔습니다. 나중에 대검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 중앙지검과 협의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사후에 중앙지검장은 합의되지 않았다, 의견이 달랐다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검사들은 지금 내부에서 반발이 아주 극심합니다.

누가 도대체 항소 포기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법무부장관이십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입니까?

검찰은 사법 정의를 세우고 공익을 대변하는 준사법기관입니다. 이 검찰이 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약화시키는 도구로 전략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대통령을 위한 공소 취소를 위한 정지 작업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항소 포기하라고 해서 완전히 수사는, 재판은 무력화됐습니다. 항소 포기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지요. 그러면 이제 피고인들은 검찰 눈치 볼 것 없이 거짓 진술도 막 할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또 오늘과 관련해서 할 것이, 추정금 7814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이 핵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을 공소시효 7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소했다면서 면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검찰이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해서 7814억 원의 부당이익 추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시효 기산점을 2015년 8월 19일로 봐 가지고 그냥 시효 만료됐다 했는데 검찰은 2014년부터 2023년 1월까지 계속 범행이 됐다 해서 검찰로서는 시효 기산 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항소를 해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 항소심은 이 판단을 뒤집을 중요한 기회였는데 이걸 못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7800억 원 중에 단 473억만 인정됐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저래서 지금 김만배의 경우에는 부당이득 추정액이 6111억이었는데요. 일심에서 8년 확정하면 그게 없어지니까 하루에 2억 얼마로 산정이 됩니다. 상급심에서 6년으로 감형되면 일당 3억 얼마 그리고 또 4년 감형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사면 하면 하루에 4억 원짜리 초대형 고액 알바가 됩니다.

다음 것 넘겨 주세요.

보세요. 추정액이 한 7800억 되는데요. 이것은 전남 영광이나 신안이나 영암이나 화순이나 함천이나 지방의 기초지자체 1년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소를 못 하게 한 사람이 국가지도자급이라는 게 참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항소 포기 과정에서 본인과 대통령 관여 여부에 대해서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본인이 개입했거나 대통령 입김이 작용했다면 분명한 헌법 위반이고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시 물러나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책임을 회피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즉각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탄핵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항소 포기가 이 정권의 몰락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장관님,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지자채장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조배숙 위원 사전에 이 회의를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서면으로 하셨어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로운 규제 지역에 포함이 되는데 왜 이 중요한 사안을 서면으로 급하게 했는가. 그렇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어떻게 서면만으로 끝냈는가.

두 번째는 규제만 있고 공급 대책은 없어요. 그래서 청년, 무주택 서민층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공급 계획이 없다.

그리고 또 셋째, 주거사다리를 끊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비판이 이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책 실패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가 없습니다. 단지 지난 정부와 오세훈 시장 잘못이라는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통계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9월의 집값 상승률 통계를 배제를 했다. 원래 직전 통계인 7·8·9월 통계를 반영해야 되는데도 6·7·8월 통계만 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 네 가지 전체적으로 다 답을 하면 되는가요?

○조배숙 위원 예, 그러면 우선 서면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주거정책심의회의를 서면으로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서면 심의하지 않고 회의를 해서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일면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중요한 사안……

○조배숙 위원 그렇지요. 중요하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우리가 서면 회의를 한다는 건 회의 규칙상 법을 위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회의를 열어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좋았겠지 않느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일부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말씀 올리겠고요.

다만 명절 전부터 부동산 상승폭이 상당히 커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국토부에서는 부동산 상승에 대한 대책을 그때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좀 보고말씀드리고요.

○조배숙 위원 두 번째.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규제만 있고 공급대책은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실제 공급 대책은 저희가 9월 7일 날 먼저 수도권 지역에 총 135만 호를 착공하겠다고 하는 발표

를 이미 진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좀 더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들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규제 일변도가 아니고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진행해 나가면서 그 와중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에 대한 일정한 정부 차원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10월 15일 대책을 세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조배숙 위원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체감이 안 돼요. 청년들하고…… 그리고 또 이분들은 자기들이 살고 싶은 데가 있잖아요. 살고 싶은 데에 지어 주는 것을 좋아하지 전혀 살고 싶지 않은 데에 많이 지어 봤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통계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조배숙 위원 통계인데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지금 통계가 항상 15일 날 나오지 않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15일 날 2시에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 하루 더 기다렸으면 어땠을까요, 그 대책을 발표하실 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러니까 정책적인 문제에서 하루 더 기다리든지 아니면 며칠 더 기다려서 13일 날 회의하지 않고 그 통계가 나온 이후에 대책을 발표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저는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다만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당시 저희 1차관과 주택실이 명절 전에 규제지역 발표에 대해서 저에게 제안을 해 왔을 때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급하다는 이유로 부동산 대책을 조금하게 발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국토부와 또 기재부, 금융위 등이 종합대책 형식으로 발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자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조배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장관님이 그런 의견을 제시했어도 결국은 그날 발표가 됐고 결과적으로는 9월 달 통계는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되냐면 9월 달 통계를 넣으면 서울 지역의 5개가 빠져요. 그렇지 않아요? 도봉구, 은평구, 중랑구, 강북구, 금천구 빠지고 경기도의 성남시 중원구·수정구, 의왕시, 수원시 팔달구·장안구 이게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서울시 전역을 다 묶기 위해서 이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조금했다, 왜냐하면 딱 하루니까.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물론 15일 날 나오지만 그 이전에 통계 나온 게 반영이…… 국토부는 받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루 전이니까. 충분히 9월 달 통계를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런데 공표되기 이전에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문제는 엄격히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요. 그 문제 때문에 현재 국토부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고 또 재판을 받고 있고 징계를 하라는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실제로 공무원들이 거기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통계 문제를 공표되기 이전에 활용하는 것은 국토부 공무원들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루를 좀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장관님께서도 본인도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명절 전에 저는 얘기했고요.

○조배숙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장관님께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러니까 약간 십머칠 동안 준비해 온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정도 기다렸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이 저는 꼭 틀린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주장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국토부는, 저는 명절 전부터 준비해 온 그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표했다 이렇게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배숙 위원 그런데 장관님, 그렇게 되면…… 장관님이 결국은 그 부처의 장 아니십니까? 그러면 장으로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걸 또 관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실무자한테, 그 의견에 이렇게 좌우되시는 게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아니요, 명절 전에 긴급하게 발표하자는 것을 제가 거절했고요. 명절 내내 저희들이 준비해서 여러 가지 자료 분석해서, 약 15일 동안 준비해서 발표한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기재부와 금융위와 협의해서 10월 15일 발표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배숙 위원 이왕 그렇게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하루라도 좀 두고,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더라면 이런 불만이 없지요, 그리고 기초단체장도 반발이 없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청년들의…… 뭐랄까, 반감이랄까 이런 게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융위원장님 어디 계세요?

금융위원장님, 새도약기금이라는 게 있지요?

○금융위원장 이익원 예.

○조배숙 위원 새도약기금 이거 보니까 지금 개인 채무 탕감 정책 중에 역대 최고네요. 그렇지요?

지금 보니까 새도약기금이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5조 4000억 원 규모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이랬거든요.

○금융위원장 이익원 예, 맞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될 때…… 지금 성실하게 빚 갚은 사람 있거든요. 그렇지요? 학자금대출 때문에 학생들은 알바 해서 빚 갚고 그리고 또 막노동해서 빚 갚고 그리고 또 간병인 해서 빚 갚고 꼬박꼬박 해서 자기 몸이 부스러지라 일을 하면서 빚 갚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빚을 갚고 낸 세금이 이런 악성 채무자, 고의적 연체자, 이 무책

임한 소비자 빚 갚는 데 쓰인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어떤 뭐랄까요, 도덕성이랄까 모럴리티(morality) 그 부분에 있어서, 금융질서의 부분에 있어서 좀 부작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방지할 정책이나 방책이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악성 채무라든지 고의적인 채무 이런 게 아니고요. 7년 이상 장기 연체하셨고 금액도 5000만 원 이하의 소액, 7년 동안 계속해서 추심을 당하셨는데 보면 진짜 어려워서 더 이상 갚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상환 능력을 심사해서 진짜 파산에 준하는 분들만 탕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채무 조정을 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철저히 그걸 봐서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 다시 사회생활로 재기해서 그게 결국은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른 장치들을 다 마련해 뒀습니다.

○**조배숙 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캠코 사장한테. 캠코 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도박 자금인지 투자 자금인지 구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랬습니다.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금융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선별할 수 있어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유흥업이라든지 증권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간 빚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걸러 낼 거고요. 하여간에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소영**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인천 부평갑의 노종면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노종면 위원**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 노종면입니다.

한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는 무관하지만 앞서서 정치 공세에 해당하는 얘기들을 너무 거리낌 없이 하셔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2023년 3월 2일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을 때 검사들 다 어디 있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어디 있었습니까?

2023년 12월 29일 윤석열 정계처분 취소 났을 때 법무부가 상고 포기했습니다. 검사들 뭐 했습니까?

2024년 10월 2일 김건희 명품백, 온 국민이 영상으로 다 봤는데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김건희 불기소, 모친인 최은순도 불기소. 정외로운 대한민국 검사들 그때 뭐 했습니까?

2025년 3월 10일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 여기에 대해서 대검이 뭐 했습니까?

즉시향고 포기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좀 나아졌을까요?

2025년 8월 19일 김건희의 그 유명한 복수 발언의 단초가 됐던 허위 경력 사건, 검찰은 역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온 국민이 부정하다고 얘기해도 그저 정권 눈치 보기 급급했던 세력들이 지금은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조직적으로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하다 하다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립니다.

이번 항소 포기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 할 수 있지요. 따져 봅시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정무적인 정합성에 대해서도 판단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정치적인 호기로 판단하고 들쭉시고 여론을 호도하고, 이것은 내란 세력의 막판 몸부림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그때그때 입장이 바뀌는 검찰이라는 집단에 조금의 여지도 남길 필요가 없음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저 개혁의 대상일 뿐입니다.

김윤덕 장관님께 여쭙보겠습니다.

우리가 빈 건축물이라고 부르는 여러 개념의 건축물들을 여러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이거 통계 내기도 매우 어렵다고 하던데 우리 정부에서 통계를 냈더군요. 빈집이 13만 호가 좀 넘고요 주택을 제외한 건물도 6만 동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률에 잡히는 것이 이 정도인데 사실상 빈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극히 일부는 용도가 있는 그런 건물들도 흙물로 방치되는 사례들이 적지 않은데 이것까지 다 포함한다면 우리 경제적인 자산의 방치 내지는 손실이 심각한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래서 지난 10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열었던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노종면 위원 그러면 법도 만드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노종면 위원 보도자료, 설명자료를 보니까 새로 관리대상이 되는 그런 빈 건축물, 사실상의 빈 건축물인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도 관련 법안을 몇 달 전에 발의하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한 가지, 설명자료에 보니까 그런 대상물들을 잠재적 관리대상이라고 적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잠재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명확하게 정리를 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 건축물이 있고 그다음에 관리 대상 건축물이 있고 이 관리 대상 건축물은 실제 건물이 거의 다 비어 있는데, 그러니까 80% 이상 비어 있는, 일부만 쓰고 있는 사실상 빈 건축물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건축물도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빈 건축물, 관리 대상 건축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을 만들어서 진행하자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면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동일하게 인식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률 대상이 되고 있는 빈 건축물과 동일한 수준의 정비·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런 입장에 서서 진행하는 겁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이 오해의 소지 없도록 법에 잘 반영되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노종면 위원 같은 맥락에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등재를 하게 되도록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관리 대상으로 추가적인 법률 규율을 하니까 그 대상을 소유주 또는 지자체가 등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떤 일정한 조건을 만족했을 때 자동으로 등재할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체계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요. 일단 자동등록 하자는 방안도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대상 건축물로 등록할 경우에 여러 가지 자발적인 등록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거고 저희들이 대책을 세울 때에도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폭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등재할 수 있는 요건과 또 자동등록이 돼야 되는 요건을 구분하겠다는 그런 뜻이군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구분한다는 표현보다는 그 범주를 정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면 방치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고 또 용도 사용이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그렇게 되는 게 일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건 좀 더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해 왔던 입장에서 이게 자율에 맡겨지면 정책 효과가 반감되겠다 이런 취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관리 대상,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율하게 되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노종면 위원 혹시 건물의 용도, 활용 비율, 어떤 기준에 대해서 고민을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퍼센티지로? 특정 건물의 사용 용도의 비율이 10%라든가 20%라든가, 그러니까 80~90%는 사용이 안 된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렇지요. 80% 이상이……

○노종면 위원 80% 이상으로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빈집인 경우에 대해서 관리되는 건물로 만드는 거지요. 저희가 등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게 되는 거지요.

○노종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과 제도를 만들면 결국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행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두 가지 점이 좀 우려가 됩니다. 한 가지는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조치들이 있는 것인지, 그게 법에 담기는 것인지, 정부는 어떤 수준까지 지자체에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좀 더 구체적으로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화될 거라고 생

각하는데요. 일단 만약에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이런 조치들을 시장·군수 등이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든가 직권 철거한다든가 이런 권한들을 주는 걸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 주어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어서 일단 이런 빈집들 또 관리 대상 건물들이 좀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노종면 위원** 인센티브는 제가 이어서 여쭙보려고 했는데……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중에 제가 생각한 바로는 먼저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포괄적인 의무를 규정하는 문구가 법에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해 봤습니다.

관련해서 예산 문제 몇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이제 방치 건물들이 새로 추가될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정부의 의지가 지금 공표된 것인데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 있나 봤더니 2억밖에 없어요. 물론 이게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따른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준비하는 예산일 텐데……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래도 실태 점검도 해야 되고 용역도 줘야 되고 또 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아 보이는데 그 정도로 철저한 준비가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증액하려는 의지는 있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증액안이 만들어지면 의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님 어디 계신가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여기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안녕하세요.

천안기업 사익편취 의혹 사건에 대해서 여쭙보려고 합니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거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꽤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천안기업이 속해 있는 유진그룹의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고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사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노종면 위원** 저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조사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현장 조사도 9월에 이미 했는데 연내에는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말씀대로 천안그룹은 유진그룹 계열사입니다. YTN을 인수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조사 대상인 천안기업이 원래는 유진그룹 유경선 총수의 개인 회사였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노종면 위원 그런데 개인 회사면 그 자체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안 될 텐데 총수 일가의 지분 비율이라든가 또 계열사로 편입된 뒤에 지분, 계열사 지분 등의 기준에 걸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은 조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에 좀 제약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사안의 요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들어 주시지요. 혹시 사실과 다른 점이 있으면 나중에 여쭙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알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천안기업이라는 유경선 총수 일가의 개인 회사가 어떻게 유진그룹의 계열사가 됐는가, 유진그룹은 어떻게 천안기업을 키웠는가.

원래는 자본금 3억 원짜리 개인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자본금 3억인 상태로 750억 원짜리 빌딩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본금 3억짜리 회사가 여의도 요지에 있는 750억짜리 빌딩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때는 유진그룹 계열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진그룹의 대표 회사인 유진기업이 보증을 섰습니다.

그렇게 빌딩을 매입하고 그리고 유진그룹이 거기를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면서 임대사업을 몰아줍니다. 그래서 그 업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총 760억 원의 임대수익이 천안기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총수의 지분이 법적 기준을 넘어서거나 계열사 지분이 높아졌을 때, 그 기간이 3년 6개월인데 그동안의 임대료가 285억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저렇게 모아졌을까, 정상적인 임대사업을 했던 것인가.

해당 빌딩이 있는 여의도 블록입니다. 빙 둘러서 모든 비슷한 규모의 건물들, 오히려 유진빌딩보다 늦게 건축된 건물들인데 임대료가 다 쌉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고의로 높게 쳐줘서 천안기업을 키웠다는 의혹이 들고 그렇게 추산되는 부당이익이 9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아까 유경선 회장 일가의 개인 회사였다고 했는데 이 지분을 유진그룹에서 매입해 갑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매입합니다. 1차 매입, 2018년도 7월 이때 유경선·유창선 형제 일가 지분 43%를 유진기업이 매입해 가는데 취득가의 약 2배 가까운 돈으로 사 갑니다. 그때 차익이 유경선 회장만 놓고 보면 9억 원이 넘었습니다.

2차 매입은 지난해 있었습니다. 2차 매입은 지분율로는 19% 정도에 불과했지만 주식평가액이 취득가의 16배에 이릅니다. 그래서 유경선 회장 혼자 차익 본 것이 2차에서만 139억 원, 1·2차 합치면 150억 원 가까이. 유 회장 일가가 1·2차 지분매각을 통해서 얻은

차익은 260억 원에 가깝습니다.

구조를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개인 회사를 총수 일가가 설립을 했는데 유진그룹이 회사를 키워 주고 회사의 지분가치가 상승하니까 주식을 고가에 매입해 준다. 임대료 수익을 주고 지분을 비싸게 사들이고, 물론 공정위에서 판단하는 부당이득의 산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과는 좀 다르겠지만 본질 또는 구조는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요약한 내용의 사실관계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전반적으로 잘 요약하셨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제 공정위 결과를 차분히 기다려야 될 텐데요. 어떤 조치들이 가능하지요? 가능한 조치만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지금 유진그룹은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사익편취 규제의 대상이 되고요. 부당거래, 부당지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과징금과 고발 조치도 가능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소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충남 천안율의 이재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재관 위원**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을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입니다.

구윤철 부총리님, 송미령 농식품부장관님께 농업기본소득 그리고 중기부장관님과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님께 홈쇼핑 산업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기본소득입니다. 월 15만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사업이 핵심입니다. 일부에서 포퓰리즘 복지사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송 장관님,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종의 사회실험 방식으로 저희가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재관 위원** 이 농어촌기본소득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그러한 복지 시혜사업 아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이재관 위원** 농어촌기본소득은 기후위기 그리고 식량안보라는 그런 농어촌의 공익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이재관 위원**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면서 그를 통해서 소멸 위기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시행되는 시대적인 그러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재관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사전 시범단계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2년간의 시범사업으로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재관 위원 전국적인 시행을 전제로 해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전국적이라고 하시면……

일단 저희는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재관 위원 인구감소지역, 그러니까 그것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이재관 위원 어느 특정 지역, 특정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방자치법상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구분하는 기준에 의하면 이 사업은 국가사무가 맞습니다.

부총리님,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래서 하여튼 국가도 하고 또 지방도, 지방사무 성격이 완전히 없는 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관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사무의 비중이 큰, 어떻게 보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혼재돼 있는 복합사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시범사업의 성격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제도의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의 성격이 분명한 것이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이재관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말씀하셨던 지역이 69개 지역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69개 군입니다.

○이재관 위원 69개 군이 있고 그중에서 신청한 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49개 군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중에서 7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재관 위원 그러면 49개 신청한 지역에서 선정됐는데 포기한 지역이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직 없습니다.

○이재관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 대상을 국비와 지방비 40 대 60의 비율로 시행을 합니다. 전남 신안, 경북 영양, 충남 청양, 경기 연천, 강원 정선, 경남 남해, 전북 순창, 이 7개 지역입니다.

이 7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보시다시피 6%대, 8%대, 재정자립도가 도저히 이 80%의…… 지금 현재는 40 대 60, 60%의 비중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버거운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 7개 군수의 합동 건의문이 저희들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내용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총액으로 지금 현재 1703억 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40 대 60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 재정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그 자치단체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시범사업의 성격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주변의 인구 유입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재정 부담을 위해서 기타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이것은 시범사업의 어떤 성격상으로 저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하고 또 시범사업의 성격을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40 대 60의 국가·지방 재정의 부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와 또 기초자치단체의 부담 비율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시범사업의 과정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대해서는 그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률을 고려할 필요가 역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역과 기초, 지방비 내의 광역과 기초의 부담 비율은 일정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야 될 것이고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그 판단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상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범사업의 결과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유의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말씀 잘 새기고요. 부총리님과도 의논을 하고 위원님들 말씀 경청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꼭 한번 그런 차원으로, 집행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유의 깊게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다음은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직무대리님께 TV·데이터 홈쇼핑 산업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어렵다는 거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예.

○**이재관 위원** 그리고 또 TV홈쇼핑을 통해서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개척하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방미통위에서도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라든지 홈쇼핑 판로 지원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 진출 그 사업도 주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내년도에 774억 원의 정부안이 반영이 돼 있고요. 중기부장관님,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774억 맞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글로벌 OTT의 국내 방송시장 잠식이라든지 또 방송 시청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V홈쇼핑 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을 지금 현재 앓고 있습니다.

한번 자료 보시면 최근 5년간의 TV홈쇼핑 산업 매출액이 20년에 309억에서 24년 264억 원으로 감소합니다. 영업이익 역시 23년까지 적자를 기록합니다. 침체 국면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TV홈쇼핑 7개사에서는 중소기업의 의무편성 비율을 상당 부분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을 의무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편성돼 있는지를 사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 재승인 심사 시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도 합니다. 맞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예, 그렇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런데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방미통위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어떤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은 확보해 줬지만 그 안에서 소프트하게 매력 있는 어떤 콘텐츠의 발굴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그것을 일반 국민들한테 마케팅을 하기 위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 있나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내년도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있었나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없었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렇습니다. 방미통위에서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중기부의 소관이 다라고 단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TV홈쇼핑의 어떤 영역을 중기부예다가 차라리 넘기든지요. 그것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을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저희 방미통위는 홈쇼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규제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소기업 의무편성 비율이라든지 이런 어떤 규제 부분에 대해서 홈쇼핑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저는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머무를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요. 이것은 정부의 어떤 영역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해서 저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데이터홈쇼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홈쇼핑 잘 아시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예.

○이재관 위원 리모콘을 활용을 해서 모든 상품을 검색도 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주문, 결제도 가능한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영역들이 지금 현재 소비자들한테 많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직무 유기라는 그런 과격한 표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그 영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부분은 저는 그것은 지적을 꼭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예, 알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리고 혹시 트웰브랩스라는 기업 들어 보셨나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예, 영상을 요약하고 분석하는 AI 모델을 개발한 스타트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이게 21년도에 과기부에서 이 사업, 즉 1인 미디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하면서 발굴된 사업 맞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예, 21년부터 23년까지 2년 동안 1인 미디어 콤플렉스에 입주했던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과기부에서, 정부조직 개편하면서 그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된 것 맞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예, 맞습니다. 10월 1일 날짜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 예산이 있나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올해 41억이었고 내년에도 41억이었는데 저희들이 정부예산안에는 지역 1인 미디어센터 구축하고 선도기업 육성 쪽으로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재정 당국하고 협의하면서 예산 사정상 증액은 되지 않고 지금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유지되었습니다.

○**이재관 위원** 1인 미디어 시범사업의 성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부터 추진된, 과기부에서 있을 때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물리적 공간인 스튜디오를 조성을 하고 또 입주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23년, 24년에는 연간 3억 원의 예산으로 뉴미디어 창업기업들에 대해서 해외 진출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71개의 스타트업을 지원을 했고 입주기업 누적 매출이 약 360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가 1500억 원이 넘습니다. 신규 고용 창출이 232명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했던 여타의 사업과 비교했을 때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만한 사업입니다.

이 트웰브랩스라고 하는 기업은 말씀하셨던 대로 영상, 사진, 음성이라고 하는 디지털 정보를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 주는 아주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또 이 사업의 주최자가 90년대생의 청년 대표 기업가가 맞고요. 그런데 이 기업이 AI 스타트업이 실시된 이후에 처음으로 엔비디아로부터 지난해 약 106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예.

○**이재관 위원** 그리고 24년 국내 전체 스타트업 중에서 투자 규모가 두 번째입니다. 이런 성공적인 사업의 루트를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 아주 어렵습니다. 많은 정부 사업들이 있지만 그 정부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까지 초기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적인 사업 그리고 이 사업, 트웰브랩스뿐만이 아니라 기타 많은 사업들이 아주 성공적인 하나의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과기부에 있다가 기관이 바뀌면서 사업 자체가 이렇게 백지화가 된다면 그동안의 상당한 매몰비용도 아까운 것이고 기존에 해 왔던 노하우도 사장되는 것이고 정부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이게 예산이 물론 늘지는 않았습시다만 하여튼 금년도에도 한 42억 원 반영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이재관 위원** 어떻게 지금 현재 차이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금년의 41억 정도 그 수준으로 내년도 했는데 이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성과가 있다면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심의 과정에서 이 사업의 성과에 맞게끔 사업의 규모가 정리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크리에이터 미디어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22년 1만 개의 규모에서 23년 한 1만 3000개 규모로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또 이 사업체들을 보면 5인 미만의 영세업자가 한 83%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영역에서 청년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바로 스튜디오입니다. 그런 스튜디오의 공간인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이 사업도 아주 나름의 성과가 있는, 또 청년들한테는 매우 기회의 장으로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센터가 있는 곳이 강릉, 대구, 부산, 세 곳뿐입니다. 물론 이곳에서 그러한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한 것은 있지만 전국적으로 최소한 권역별로 한 군데 정도는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총리님 한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총리님 한번 꼭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소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서울 서초갑 조은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조은희 위원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사가 기소한 배임 이득액 7800억이 결국 400억 원 이하로 확정될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 검찰이 항소했다면 법원이 7800억 원을 배임 이득으로 인정해 추정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항소 포기로 그 기회를 스스로 날려 버립니다. 결국 국민에게 돌아와야 될 수천억 원의 국고 환수 기회를 포기한 겁니다. 이건 직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겁니다. 법무부는 항소를 포기한 이유로 형량이 충분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형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돈, 배임 이득의 확정 아닙니까? 특경법 배임에서 이득액 입증 어렵다고 항소를 포기한 전례가 없습니다.

부총리님, 죄인 김만배는 감옥에서 하루 2억 원에 해당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셈이고 결국 6000억 원 정도를 꿀꺽하는 겁니다. 남육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억을 꿀꺽하는 겁니다. 부총리님께서도 국가의 부채를 가지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에게 돌아가야 될 칠팔천억이 범죄인의 입에 들어가는 것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전 국민 칠팔천만 명이 1년 내는 세금과 맞먹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자 재정의 입장에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저희 재정 당국 입장에서야 수입이 극대화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은희 위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줄 알았습니다. 7000억~8000억이 국고에 들어와서 내년 예산에 편성돼도 좋을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이렇게 배임죄를 저지른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또 제가 지난 6일에 이찬진 금감원장에 대해 ‘땅 투기가 아니냐?’ 이렇게 여

줬더니 ‘따져 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따져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

○조은희 위원 따져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따져 보지는 못했습니다.

○조은희 위원 아직도 따지고 계시는 건지, 대통령비서실장도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문제 있어 보인다 수궁했는데 이러한 명백한 투기인데도 부총리님은 따져 보겠다 하고 두리뭉실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고 대통령의 변호인이라서 이찬진 원장 앞에 가면 부총리님의 존재가 작아지는 겁니까?

명백한 부동산 투기, 땅 투기 아닙니까? 도로에, 대지인데 그게 9200억 원에 경매를 받아서 지금 재개발이 되면 30배 넘는 부당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2020년 6월에 주택 공개념을 주장하면서 다주택자는 고위공직 임용에서 제외하라고 주장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다주택자에, 도로를 땅 투기로 한 것이 확실한데 금융감독원장을 맡았습니다.

부동산감독원이 처리되면 이런 분이 1호 처리 대상 아닙니까? 따져 보시겠습니까, 다시요? 제가 여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제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오해를 받지 마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이런 사람은 땅 투기하고 다주택을 갖고 모든 잘못을, 경매를 받고 이래도, 부동산감독원이 설립돼도 처벌 대상이 안 된다는 것 어느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부총리님 소신을 갖고 따져 주세요.

김윤덕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내년에 전북지사 출마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조은희 위원 앞으로도 생각 안 하실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럴 것 같은데요.

○조은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1차관도 지금 자리에 없어요. 나는 집 사도 되는데 너는 집 사지 말라 이렇게 한 1차관 지금 사실상 경질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번 예결위 때 2차관한테 뭘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국토부장관까지 마음이 내년 출마, 쿵발에 가 있으면 엉망 됩니다. 그래서 출마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조은희 위원 전재수 장관님, 출마하실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지금은? 다음은, 내년 6월은?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오늘발 기사예요 전 장관님이 내년 부산시장으로 출마하고 그 자리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출마한답니다. 이렇게 하면 해수부 직원이 일하겠습니까? ‘저 장관 가면 다른 장관 올 거야’ 이러지요.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조은희 위원 나중에 시간 남으면 더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조은희 위원 10·15 부동산 대책이요 지금 강남권 벨트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주거안정을 꾀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강남권 벨트라고 지역을 한대기보다는 수도권 전체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시장이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강남권, 수도권…… 서울 집값 잡겠다 했는데 강남권 집값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10·15 대책 전후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역대 최고이고요.

그런데 집값뿐만 아니에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강남 3구에만 전체 거래량의 76%가 쏠려 있습니다. 반면 노원·강북 거래 제로, 관악·성북·영등포 1건, 도봉·중랑 2건에 불과합니다. 거래가 실종됐습니다.

장관님, 이게 서울 투기수요 잡겠다더니 집값도 거래량도 모두 강남권에 몰려 있는 통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핵심은 부동산 거래가격이 사실 굉장히 폭등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으로서 저희가 세 번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조은희 위원 다 실패잖아요.

지금 장관님이요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말씀은 청산유수. 그런데 저는 말씀이 아니고 일을, 정책을 청산유수로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급대책, 국민이 못 믿잖아요. 그리고 10·15 대책은 수요억제 정책이잖아요.

(이소영 간사, 한병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지금 제가 장관님께 너무나 아쉬운 게요 강북은 ‘정부가 집값 비싼 동네를 사라고 떠미느냐’. 노도강·금관구는 ‘전월세 급등으로 비명이 난다. 결국 강남 집값만 더 올리겠다는 정책이나’ 이렇게 청년, 서민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서명운동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장관님 태도가 저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한번 동영상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지난번 예결위 질의 때 통계조작 이렇게 했는데 ‘소송하라. 소송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세요. 지금 이 통계조작의 원인이 뭐냐? 이 사달이 난 원인이 뭐냐면요 하루만 늦게 발표하셨으면 구제될, 우리 서울 지역의 5개 지역이 구제됩니다. 경기도 세 군데고요.

그런데 지금 그쪽이 전세는 없고 월세만 오르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 하루 차이로 그렇게 괴로우면, 그게 지적을 하면 ‘나도 그건 미처 생각 못 했네요’라든지 ‘잘못됐네요’라든지 ‘그 지역은 빼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소송해. 소송해’ 이렇게 하시면 주무부처 장관인데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과연 금관구·노도강 주민 그리고 서민, 청년들이 장관님 잘한다고 박수 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조은희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청산유수처럼 하시지 말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까 조배숙 위원님 지적에도 제가 부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 올렸는데요. 하루만 늦게 발표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정책적인 의견이라면……

○조은희 위원 잘못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는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판단은 다를 수도 있고요. 다만 마치……

○조은희 위원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잘못하셨다 말씀하시고 지금이라도 그 부분은 빼겠다 말씀하셨으면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라는 말이 진실성이 있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핵심적 요지는 그게 아니겠습니까?

○조은희 위원 뭔데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제가 소송이 필요하다고 했던 핵심적 요지는 공표되지 않은 통계를 국토부가 사용했고 목살했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요.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다 장관님이 그냥 출마나 하시고 장관 안 하시면 좋겠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월세 있잖아요. 제가 국토위 국감을 자세히 봤습니다.

장관님, 지금 월세가 급등하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실제 전세의 월세화를 지적하시는 거지요?

○조은희 위원 전세가 월세화되면서 월세가 급등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냐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전세가 월세화되는 주요한 과정을 보면……

○조은희 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것은 단기적으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전세사기 이후에 시장의 트렌드가 변화하는 굉장히 중장기적인 변화……

○조은희 위원 제가 그 말씀을 국토위 국감에서 하시는 것을 보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9월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율이 65.3%,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10년 만에 월세 비율이. 그리고 서울 평균 월세가 144만 원, 노도강도 200만 원입니다, 노도강 저 외곽이.

그런데 장관님은 이게 정부 탓이 아니고 전세사기와 주거 선호 변화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PPT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지금 월세 가구의 주거비용은 전세 가구의 주거비용보다 2배나 많습니다. 특히 서민들, 소득하위 20%는 지출의 19.7%, 20%가량이 주거비로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꾸 월세화 돼서 그 주거비의 20%에 곱하기 2가 되는데 그러면 뭐 먹고 삽니까? 그런데 누가 시장에서 그것을 선호합니까? 전세사기는 빌라 전세사기입니다, 아파트 전세사기가 아니고요. 좀 알고 말씀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좀 별도로 찾아뵙고서라도 전세의 월

세화의 지난 몇 년간의 시장 동향 추이……

○조은희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그런 말씀을, 대화를 해 보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그러시지요.

저는 정부의 각종 규제가 월세화의 촉매제가 됐다고 봅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봐요. 대출 규제를 조이고 전세대출을 축소하고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니깐 전세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월세화되면서 월세가 급등하고 그러면서 소득 20% 하위는 20%가량이 주거비로 되는데 그게 월세화되면 곱하기 2가 되니까 먹고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장에 따라서 그렇게 선택하는 거라고 그렇게 태연히 말씀하시면 역장이 무너지는 주민들이 많지요. 청년들이 많지요. 서민들이 많지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장관님께 대안으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서울이나 경기도 하루만 늦었어도 규제대상지역이 안 됐던 여덟 곳을 포함해서 노도강·금관구 지역은 3중 규제 좀 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월세난 때문에 주거사다리가 꺾이고 생활비도 부족한 사람들, 그런 청년이나 서민들에게 생애 첫 주택을 공급할 때는 대출 규제 프리 또 토허제 등 3중 규제를 없애 줘서 최소한 현금부자들 말고 잘사는 사람들 말고요,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 옥죄는 규제를 풀어 주실 생각 없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일단 답을 하고 설명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생애 최초 구입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LTV를 70%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제가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장관님, 국토부가 얼마나 믿지 못할 정책을 하느냐면 LTV 70%에서 40% 규제했다가 악 소리 나니까 다시 70% 돌렸어요. 그랬다고 지금 잘했다고 그 말씀 하시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러니까 바로 수정을 한 겁니다, 저희가.

○조은희 위원 또 전세퇴거자금 LTV도 40% 규제했다가 바로 고쳤어요. 이렇게 국민 전체가…… 집은 그냥 사는 집이 아니고 내 인생이에요. 국민들의 인생이라고요. 그거를 이랬다가 뭐 있으면 바로 뒤집었다가 이러니까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저희가 조정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조은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전체적으로 대출 규제를 프리 하고 토허제 등 3중 규제 프리 할 생각이 없냐고 여쭙보는 거예요. 두 가지 여쭙어요. 답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 LTV를 70%로 현재 하고 있는데 다만 그 발표가 중간에 수정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번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실수가 있었다고 저는 시인했고요. 그것 시인했기 때문에 바로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제가 겸허히……

○조은희 위원 LTV 70%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수용하겠고요. 다만 규제지역을 푸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일정하게……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안 하시겠다고 고집 피우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표적인 게 수요와 공급이지요.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조건에서 저희들이 일정하게 수요 관리를 해내는 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판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은희 위원 그 판단이 틀리면 어떡하실래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 판단이 틀렸으면 저는 제 장관직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조은희 위원 장관은요 장관 그만두셔도 국회의원이시잖아요. 국회의원직도 거실래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조은희 위원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요 지금 피눈물 흘리는 서민들, 하위 20% 서민들 그리고 규제 대상에 포함 안 돼야 될 마땅한 사람들이 규제지역에 포함돼서 부글부글 끓는 것 이것을 해결하셔야 돼요, 책임감 있게. 안 그러면 ‘전북지사 나갈 생각에 마음이 콩밭에 있어서 국민들은 뒷전이다’ 이런 비판 면하기 어렵고요 문재인 정부의 시즌2 그 장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핵심이라는 비판 면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내주십시오.

다음에 또 여쭙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까 말씀드렸던 전세의 월세화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가능한 한 위원님 직접 찾아뵙고 제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30초만 안 되지요?

○위원장 한병도 죄송합니다. 추가로……

○조은희 위원 그런데요 저한테 자료를 가져오시겠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닙니다. 굉장히 겸허한 마음으로 찾아뵙고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조은희 위원 대책을 내놓으세요, 대책. 저하고 의논하실 것도 없어요. 잘하시면 제가 왜 물어요, 여기서? 잘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구갑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 반갑습니다. 울산 남구갑 김상욱 위원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오늘 국회로 오기까지 저는 울산발전소 붕괴 현장에서 희생자·매몰자가족들과 함께했습니다.

폭파 해체 전문업체 직원들이 리프트를 타고 접근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그런 현장에

서 소방관들은 며칠째 밤낮없이 진입해서 수색에 임했습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은 헌신적으로 작업자들과 가족들을 위해 봉사했고 고용노동부, 기후환경에너지부, 건설교통부, 울산광역시, 경찰청, 남구청 등 유관기관은 하나가 되어 구조와 현장 대응에 전념했습니다. 사고 관련 기업들도 노력을,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비통하고 참담한 현장이었지만 진심으로 함께하는 우리를 보면서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구조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 또 너무 아프고 힘든 상황임에도 이웃 가족을 더 염려하고 손잡아 주고 있는 희생자와 매몰자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존경과 감사를 올립니다.

예결위 대정부질문은 국가 예산 배정에 관하여 국민적 관심과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공론화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울산발전소 붕괴 현장에 함께하면서 첫 번째로 산업현장 안전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점, 둘째 구조 결함이나 화학 등 전문안전영역에 전문인력을 추가 확보하고 R&D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 셋째 소방대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소방안전장비 확보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 넷째 적십자, 의용소방대 등 재난에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단체의 명예를 지키고 지원하면서 체계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함께 공론화하고 예산 확보에 부족함이 없게 해야 함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경제부총리님께서 특별히 산업안전……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특히 전문역량이 필요한 그런 분야의 안전 전문가와 R&D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어제는 소방의 날이었습니다.

재해 시마다 소방 장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방안전교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한 것은 겨우 올해 1월 1일 법률에 배분 비율이 명시되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일회성 관심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 준비가 필요함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

아, 지금 장관님 안 나오시고 차관님 나오셨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고용노동부차관입니다.

○김상욱 위원 장관님은 현장에서 본부장님으로 계시고요.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2025년 현재 사고 사망자 수 827명, 질병 사망자 수 1271명 또 전체 재해자 수 14만 2771명, 여전히 많은 산업재해가 우리 일상인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해 유형별로 볼 때 화재·폭발·과열 이런 사고의 사망자 수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89.7%나 늘었습니다. 질병 재해자도 1000인 이상 사업자는 줄었지만 그 밑의 소규모나 중규모 사업자는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유기화합물 중독 재해자가 전년 동기 대비 22.2%나 늘어났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산업 고도화에 따라 거대 복합 구조물 또 화학 등 전문지식과 R&D가 전제되어야 하는 전문안전 영역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번 울산발전소 붕괴 현장 역시 철골 구조물의 안전진단, 폭발물을 이용한 해체 등

이런 전문 영역에 대한 전문안전진단 영역 부족 또 이를 감독하는 관리 역량 부족 또 폭발 해체 전 취약화 과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부족, 이런 전문역량의 부족 때문에 이러한 매물 참사가 벌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지방고용노동관서비, 인건비 예산 많이 늘렸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맞습니다.

○김상욱 위원 30.5% 대폭 증대시켰는데 특히 산업안전감독관을 대규모로 충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성은, 지금 이런 현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내린 방향성 결정인 건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맞습니다. 그간 저희 근로감독관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보통 근로기준이나, 노동안전이 아닌 근로기준 분야 감독관이 있고 산업안전 감독관이 있는데 저희가 비중 자체도 앞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을 좀 더 늘리는 방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기존의 산업재해와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의 유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산업안전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국가경쟁력일 뿐만 아니라 추후에 경우에 따라 우리의 수출을 할 수 있는 기술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절대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감독관을 채용한다고 하지만 이분들의 역량 강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전문 분야에 대한 R&D 연구가 더 수반되어야 하는데 안전보건공단에서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맞습니다.

○김상욱 위원 그런데 이 안전보건공단 예산을 보면 안전보건연구개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공단 전체 예산을 봤을 때에 25년 같은 경우에 1482억 원 중에 안전보건연구개발 예산이 33억 원에 불과했고 올해 예산안을 보더라도 1600억으로 공단 전체 예산은 올랐지만 안전보건연구개발 예산은 32억 원으로 도리어 줄었습니다.

전문역량이 필요한 산업안전기술 분야라면 당연히 R&D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어야 할 텐데 안전보건공단이, 즉 R&D에 집중해야 하는 그 공단이 왜 이렇게 안전보건연구개발 비용이 적은 겁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조금 설명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영역의 예산은 좀 줄었는데 과거 정부하고 다르게 이번 정부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산업안전 분야 연구개발 신규 예산을 정부안으로 편성해서 한 15억 정도, 물론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가 받을 디딤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간 저희가 R&D에 부족했던 부분이 사실이고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재해도 거대화되고 있고 또 재해 판단과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역량 그리고 또 학계와 기업체의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 구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산 붕괴 참사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체계적인 계획을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장관님과 함께 잘 협의해서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어서 우리나라가 산업안전기술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산업 현장에

서……

산업 현장은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 현장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우리 가족들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그 현장이 더 이상 위험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국회에서 또 어떤 일을 하면 산업 현장의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먼저 위원님 좋은 지적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위원님이 현장에서 많이 소통하면서 또 많은 위로도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히 좀 전에 말씀하셨던 학계나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런 틀도 필요할 것 같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산업안전 분야 연구개발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여야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안전보건공단에서 R&D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기관에서 혼자 다 감당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 국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학계와 기업체에 포진해 있는 전문가 집단들을 분야별로 체계화시키고 구조화시켜서 재난 상황에 즉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와 관련된 기획과 또 예산 배정 요구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차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맞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민간 역량을 동원할 수 있는 예산사업들이 좀 있는데 이 예산사업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같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더 안전한 대한민국 염원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분명히 줄일 수 있습니다.

울산 붕괴 참사를 보면서요 이것도 우리가 구조물 진단에 대한 전문 역량 또 구조물 진단에 대한 감독 역량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 아울러 전문가들을, 학계와 기업계에 포진해 있는 여러 전문가들을 바로 동원해서 자문을 빨리 얻을 수 있었다면 조금 더 구조에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여러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될 때마다 우리에게 아쉬움을 남기는데요. 미리 준비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앞장서서 지키는 우리 정부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기후부1차관 나와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차관님께 여쭙보겠습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관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결국 발전과 판매 겸업 금지의 예외를 인정해서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직접 거래를 허용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맞습니다.

○김상욱 위원 그러면 결국 전력 생산자와 수요자 간의 거리를 단축하고, 전력이라는 것이 송전선에 따라 낭비가 많이 될 텐데 이걸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의 생태계가 잘 구성이 될 수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예,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부 정책 방향이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분산에너지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욱 위원 물론 분산에너지가 재생에너지의 참 좋은 체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정해서 볼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말씀처럼 전력을 생산하는 곳과 전력을 수요하는 곳의 물리적 거리가 가깝고 그 안에서 생태계 구성이 가능하다면 재생에너지가 아닌 다른 에너지라도 적극적으로 권장함으로써 기업 경쟁력과 전력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특히나 지역 같은 경우에 지방 지역, 저희 부산·울산·경남지역 또 호남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이나 이쪽에 보면 원자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이곳 주민들은 이미 엄청난 위험을 온전히 안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지역에서 위험을 안고 살고 있는 분이 거기에서 생산된 전기요금이 서울과 똑같다면 과연 공평하다, 합리적이다, 공정하다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스러운데요.

지금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 특히 풍력 같은 경우는 에너지의 질이 좋지 않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변화가 심해서 그런 건데 재생에너지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함께 서로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성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원자력처럼 위험을 온전히 안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 또는 그 지역의 기업들이 전기, 전력 생산에 관해서, 그걸 쓰는 것에 관해서 혜택을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정함의 문제라는 생각도 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금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곳은 서울과 가장 멀리 떨어진,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위기와 기업 이탈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분산에너지특구를 굳이 폐쇄적으로 적게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차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 자체가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비용을 줄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한정해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욱 위원 물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에 더 많은 촉매제를 투입하고 더 많은 유인을 넣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굳이 막지 않아도 될 지역까지 막아서 그 지역의 경쟁력까지 떨어뜨리는 것은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울산의 경우에 전기요금 차등제가 적용되면 기존보다 전기요금이 10% 정도 인하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울산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80% 이상이 산업용입니다. 2023년 울산 기업들의 전체 부가가치액은 77조 5700억 원 정도로 예상되었는데요. 전기요금 10%만 인하돼도 기업들은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기업들의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전력은 멀리 가면 손실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만 조성된다면 생산자와 수요자가 붙어 있을수록 좋고, 이런 것이 활성화된다면 더 많은 전력 생산이 민간에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AI 개발에 많은 국가 자원을 쓰고 있는데 AI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도 엄청난 전력을 소비합니다. 결국 우리가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분산에너지특구 이런 구상, 굳이 폐쇄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현재 울산에 대해서는 보류 결정이 났습니다. 보류 결정이 난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보류 결정을 해제하고…… 울산뿐만 아닙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이나 여러 가지, 여러 지역에 분산에너지특구를 더 활성화할 계획은 없는지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울산을 포함해서 일부 지역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일단 보류가 된 지역이 있는데 그 당시에 당초의 분산법 취지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우려사항들을 위원님들이 제기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대로 에너지위원회에서 조속한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결국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이런 부분 때문인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법 취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봤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생에너지에 한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후에너지부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를 더 추가적으로 확보한다는 기획에서 관련 취지 해석이나 아니면 관련 법 개정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수 있는지, 그럴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검토가 있었는지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어쨌든 분산에너지법의 충분한 취지를 살려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만찬을 위해서 오후 회의는 천하람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개혁신당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구윤철 부총리님, 이번에 구조조정에서 사상 최대치 27조 원을 하셨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열심히 정말 제대로 불필요한 부분을 구조조정하신 거 맞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저희들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

**○천하람 위원** 저도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한테 보고하셨을 때도 성과 중심으로 저성과 낭비성 지출 해서 27조 원 구조조정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구조조정 내역을 쭉 다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태그 같기도 너무 많고 실제 구조조정이 아닌 건데, 지출 구조조정이 아닌데 구조조정이라고 해 놓은

것도 많고요. 또 이걸 구조조정 하는 게 과연 맞나 싶은 부분들도 있는데 차례차례 조금 보겠습니다.

우선 국토부장관님, 혹시 국토부 구조조정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국토부의……

○**천하람 위원** 예, 재정구조조정 실적, 이번 예산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구체적으로……

○**천하람 위원** 모르실 수 있지요. 6조 7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셨더라고요, 부처 중에. 그런데 이 구조조정 실적 중에 액수가 가장 큰, 많이 삭감된 사업이 혹시 뭔지 아세요?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제일 삭감이 크게 된 게 3조 7556억이 삭감된 디딤돌대출하고 버팀목대출입니다.

장관님, 디딤돌대출·버팀목대출이 개괄적으로 어떤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러니까 집을 구입하거나 또 전세 대출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대출의 성격입니다.

○**천하람 위원** 그렇지요. 디딤돌대출이 주택 구입, 무주택자 할 때 또 버팀목대출이 전세자금 융자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PPT 혹시 떠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전체 예산 중에 3조 7556억, 그러니까 27%나 삭감이 됐어요. 지금 어쨌든 10·15 부동산 대책 때문에 전세 시장도 굉장히 어렵고 또 국민들의 전세난도 더 심각해지고 그런 상황인데 버팀목대출을 저런 식으로 삭감을 많이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러니까 정책대출이 서민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이라든가 또 주택 구입할 때 지원해 주는 역할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긍정성이 있는 그런 대출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 정책들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정책들이 커짐에 따라서 오히려 유동성이 커지고 또 실제 집값이 상승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되게 되고 또 집주인이 전세를 내놓을 때나 또 이런 과정에서 그런 대출이 있는지를 아니까 상대적으로 전세가를 올리는 등 이런 식의 약간의 후과가 있다는 점에서 일부 삭감하는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게 된 겁니다.

○**천하람 위원** 그런데 장관님, 이번에 정부가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관되게 이야기하신 게 실수요자, 서민들에게는 불편이나 이런 것들이 가중되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디딤돌대출이나 버팀목대출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소득요건도 갖춰야 되고 실거주나 실제 수요 이런 부분들을 갖춰야 되지요. 그런데 이런 정책자금들까지 줄여 버린다고 하신 거는 지금까지 말씀해 오신 정말 실거주 목적의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확보하겠다는 거랑은 좀 모순된다는 걸 저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있으니까 또 같이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두 번째로 구조조정 실적이 큰 게 뭔가를 살펴보니 공공분양주택 용자 관련한 예산이거든요. 이게 1조 4000억 정도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LH나 지자체 이런 데에서 공공분양주택 하는 건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분양, 공급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지연이 된다 그러면 어쨌든 공공성 있는 분양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해당 예산을 71%를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저희들이 LH에 지원하는 자금이, 자금을 지원하는 패턴이 일부 변경된 것도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런데 저도 아는데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너무 공공임대 위주로만 생각하시다 보니까…… 공공분양에 대한 수요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맞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래서 정권 바뀔 때마다 이게 솔직히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다는 것 저도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공분양 예산을 이제 한 해 바뀐 건데 71%를 삭감해 버린다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러니까 이 자금이 전에 좀 남아 있는 것도 있고요. 또 패턴을 바꿔 준 것도 있고, 그런 데서 오는 차액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천하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일부 긍정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책대출이라든가 또 특히 공공 주도를 강화하는 게 공공임대만을 강화하는 패턴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LH 개혁위원회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안을 곧 내놓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아무튼 제가 지금 여러 차례 10·15 부동산대책 관련해서도 이야기드리고 있지만 어쨌든 10·15 대책 때문에 서민들의 전세 문제 또 월세가 상승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 예산에서마저 정책대출, 전세에 대해서도 줄여 버리고 공공분양 예산도 너무 많이 깎아 버리고 이런 것들이 정책뿐만 아니라 예산에서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너무 역행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참고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천하람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많아서, 죄송합니다. 국토부만 제가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른 부처도 많아 가지고요.

지금 구조조정 내역이 한 55개 부처에 한 4000여 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되게 열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태그 같이 이런 게 있어요.

먼저 기재부부터, 주무 부처인데도 이런 게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공공건축물 리모델링하는 예산 이런 것 지적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1145억을 전액 삭감했다, 구조조정 실적으로 공표하셨거든요. 그러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아예 안 합니까, 부총리님? 이것 너무 디테일한 사업이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 보면서 재밌었던 것은요, 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구조조정 했다고 해서 전액을 실적으로 반영해 놓고 바로 뒤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2.0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2012억으로 2배 가까이 증액이 됐거든요. 2.0이라서 2배 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뭐가 다른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마 제가…… 위원님, 좀 살펴봐야겠는데 아마 업그레이드하는, 그러니까 기존 사업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은 폐지하고 약간 제도개선해서 아마 조금 더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천하람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업그레이드되는 게 뭐 획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 거면 기존 사업을 일부 손봐서 기존 사업을 계속하는 거지 1.0은 폐기시키고 2.0을 해서 이것은 구조조정 실적이니까 예산을 더 증액시킨다, 이 본질은 그냥 기존 사업 예산 증액입니다. 이것을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제가 태그 같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고.

부총리님, 이것 한번 진짜 살펴보십시오.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금융위원장님, 여기도 지금 배드뱅크 예산 중에 새출발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금융위원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조정을 했다고 해서 5000억 구조조정 실적이라고 반영을 해 놔습니다.

이 새출발기금, 배드뱅크 사업 이것 안 하실 거예요, 올해?

○**금융위원장 이익원** 아닙니다. 합니다.

○**천하람 위원** 하잖아요.

○**금융위원장 이익원** 예.

○**천하람 위원** 이것 왜 사업 우선순위 조정이라고 해서 5000억 실적 반영해 놓으신 겁니까?

○**금융위원장 이익원** 추경에 이미 반영이 돼서 내년까지는 그 돈으로 갖고 가고 이게 장기니까 순차적으로 그것에 따라서 앞에다 놓기도 하고 뒤에다 놓기도 하고……

○**천하람 위원** 그렇더라고요. 저희도 내역을 보니까 실제로는 지난 6월 추경 때 7000억이 이미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어졌다고 해서 한 건데 이런 것도 다 그냥 지출 구조조정 실적이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이것 이재명 대통령 관심사업 중의 한 개인데 배드뱅크 사업 줄이는 줄 알겠어요. 이런 게 너무 많고요. 27조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 이런 것 하나씩 빼면 진짜 많습니다.

또 하나 볼게요.

과학기술부총리님, 지금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5개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91억을 구조조정 했다고 실적 반영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 저희가 내용 봤거든요. 올해 끝나기로 돼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올해 끝나기로, 이미 종료되는 사업인데 당연히 종료되는 사업을 지출 구조조정 대상 사업이다라고 실적 보고해서도 되는 겁니까? 이것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가데이터처장님, 여기도 점입가경인데 어디 계시지요?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예.

○천하람 위원 인구주택총조사 사업 있잖아요. 이것 저랑 그때 기재위 국감에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5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그렇습니다.

○천하람 위원 이번에 했으니까 앞으로 5년 있어야 하는 거지요?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예.

○천하람 위원 그런데 내년에 어차피 안 할 조사인데, 왜 올해 한 사업인데 내년에 안 한다 그래서 이걸 지출 구조조정에 넣어 놔습니까, 어차피 5년 있다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17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필요 없다 그래서 16억 원 안 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을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넣어 놔어요. 이런 것은 지출 구조조정에 넣으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처장님?

물론 기재부에서 실적 내라고 이렇게 해서 취합하고 나름의 압박도, 실적 압박 같은 게 있었겠지만 조금만 보면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내년에 어차피 안 하는 것을 구조조정 했다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 다시 한번 봐 주시겠어요, 처장님?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리고 지금 고용노동부차관님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차관입니다.

○천하람 위원 차관님, 고용노동부도 똑같습니다. 실업급여, 이것도 저는 진짜 무슨 말장난인지 모르겠는데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예산보다 6200억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무슨 2300억 구조조정 실적이 있대요. 그래서 ‘뭔 소리인가, 이게 증액이 됐는데’라고 보니까 원래 더 늘렸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이것밖에 안 늘었으니까 이 차액분, 원래 늘리려다가 이만큼만 늘린 차액분이 구조조정 실적이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아니, 이런 식이면 제가 만들면 구조조정 실적 100조도 만들지요. 100조가 됩니까? 1000조도 만들지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게…… 제가 지난번 결산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 지금 적자가 심각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아니, 실제 지출되는 돈을 줄여야 이게 뭔가 구조조정인 것이지 작년보다 늘려 놓고 ‘우리 더 늘리려고 그랬는데 이만큼 아꼈어요’ 이것은 아니지 않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위원님,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증가할 수 있는 것들을 줄여서, 효율화한 부분은 효율화하고 해서 이렇게 좀 줄였기 때문에……

○천하람 위원 어쨌든 작년 예산보다 늘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여기 계시는 다른 장차관님들은 그러면 ‘우리도 더 늘어날 뻔한 것 줄였다’라고 할 만한 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예산 처음 시작할 때 총리님도 그렇고 부총리님도 나오셔서 가지고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출 구조조정 했다, 성과 위주로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뜯어보니까

부풀려 놓은 게 너무 많아요. 이러면 이것을 성과라고 어느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겠느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토부장관님, 다시 한번 제가 여쭙볼 게 있는데요.

국토부 건설사업 중에 34개 정도가 내년도 예산을 줄이겠다라고 해서 구조조정으로 넣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총사업비는 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지출비가 줄어들었어요, 34개 건설사업이. 그런데 건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집행이 천천히 되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천하람 위원 요즘같이 물가 오르고 건설비 오르고 하면 이게 느리게 집행되면 될수록 간접비 부담도 늘어나고 해서 총사업비가 오히려 늘어날 위험이 있는데 당장 내년에 지출하는 것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원래 같으면 예산집행 왜 이렇게 느리냐라고 질책받아야 될 만한 일을 ‘우리 성과입니다’라고 해서 넣어 왔거든요. 저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이것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그린리모델링 사업, 저희 국토부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천하람 위원 예,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린리모델링 민간은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 정부에서 폐지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깎여 있고요. 다만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영역을 확대했기 때문에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린리모델링 민간 부문에서의 이자지원 사업은 부활시키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번 국회 예산 증액 단계에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아무튼 제가 오늘 죽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압니다. 장관님들, 차관님들, 지출 구조조정 실적 내라 하면 압박 느끼시고 내야 되는 것 다 이해하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조금만 한 꺼풀만 뒤져 보면 이게 지출 구조조정 아닌 것까지 마구잡이로 태그 같이 하고 뒤섞어서 넣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근본적인 제도 관련해서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대안을 좀 생각해 보자면……

구윤철 부총리님,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매년 성과평가를 하기는 합니다만 지출 구조조정에 관한 법령이나 아니면 내부 지침 같은 게 따로 있지는 않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저희들이 집행 부진이라든지 생각하는 것은 있지만 이게 딱 규정화해 가지고 이렇게 한……

○천하람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OECD 이 내용 저희도 한번 찾아봤어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

다른 나라가 지금 보면 OECD 35개 중의 한 22개국 이상은 미리 설정된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한 규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이런 것 하기 전에 미리 이런 규범에 따라서 어떤 것에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의무화된 규범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저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이게 그러면 지출 구조조정이 맞냐 아니냐, 넣어도 되는 거냐 아니냐

이런 약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자꾸 논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도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침이라도, 그러니까 법령이 처음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지침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부총리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들이 지출 구조조정이라 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완전히 무슨 혁신을 하는 것까지 하면 좋겠습니다만 내년도의 지출, 내년도의 저성과 부분에 갈 예산을 해서 고성과 부분으로……

○**천하람 위원** 그렇지요, 또 다른 데로 이렇게 옮기는 면도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옮기는 면도 저희들은 구조조정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이 전체 예산 전반을 가지고 완전히 진짜 이것은 제대로……

○**천하람 위원** 부총리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봐 주시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천하람 위원** 이게 제가 걱정인 게 또 기획예산처도 떨어져 나가고 정부 재정 지출관리하는 기능도 그쪽에서 가져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예산을 짜는 쪽에서 또 정부 재정관리까지 한다 그러면 더 이게 브레이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예산처랑 재정부 따로 있을 때는 사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정부에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식으로 이게 지출 구조조정이 맞나 아니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좀 제대로 된, 불필요한 예산 지출에 브레이크를 제도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에 진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사실상 새 정부가 들어서고 좀 짧은 동안에 어쨌거나 저희들은 저성과 부분을 건어 내서 고성과로 가자,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국채 발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체계적이고 또 누구나 봤을 때 진짜 이것은 ‘아, 진짜 제대로 한 거구나’ 하는 그런 측면의, 또 이렇게 감안해서 저희들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경남 통영·고성의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위원** 정점식 위원입니다.

저는 국토부장관님과 해수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종합정책질의 과정이라든지 이번 경제부처 예산 관련 질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로부터 질책도 많이 받으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점식 위원 국감 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

○정점식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정부가 불과 몇 달 사이에 내놓은 세 번의 부동산 대책의 결과를 조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완전히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잡겠다는 집값은 다시 오르고 보호하겠다는 실수요자는 집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부동산 통계자료 장관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10월 전월 대비 한 달 만에 1.46%가 급등해서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전세 중위 가격은 3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4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서울 전세 매물 수량은 -23%로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54.1%로 급감을 했습니다. 전국 전셋값은 앞으로 한 4% 정도 상승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물론 장관님께서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잘될 거다라고 답변하실지는 모르지만 시장은 장관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정부의 소위 방향성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 정책 역시도 잘못됐습니다. 신생아 특례라든지 디딤돌, 버팀목 등 정책금융 한도 축소로 인해서 청년, 신혼,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사다리가 사실상 끊어졌습니다. 물론 비판이 일자 금융위원회는 10월 15일 정책대출의 DSR 규제를 제외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이는 심사 방식만 완화한 조치로 실수요자가 실제로 더 빌릴 수 있는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출산 장려를 말하면서 정작 출산 가구의 주거 기회를 줄이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하는 비판이 있다는 건 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실수요자의 대출 길이 막힌 상황에서 정부가 내세운 135만 호 공급대책이 과연 현실을 반영한 것이냐 하는 많은 질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주택 문제의 진원지는 바로 서울입니다. 그것은 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점식 위원 그런데 135만 호 중에서 서울 물량은 25%, 33만 4000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는 75%, 101만 5000호가 몰려 있습니다.

도심 핵심의 공급은 미미하고 외곽 중심의 숫자 부풀리기에 불과하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는 일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 공급대책 발표할 때에도 실제 수도권의 공급대책이 중요하지만 특

히 서울 대책에 집중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 서울 내 어디에 집을 지을지에 대한 그런 매우 구체적인 것들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떤 지자체라든가 내지는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범했던 오류처럼 성급히 발표해서 결국은 용두사미로 끝나고 마는 그런 우만큼은 범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하에 이번에 국토부 차원의 주택공급본부를 만들고 또 LH에도 만들어서 곧 현판식도 하고 본격적으로 주택 공급을, 특히 서울 지역 내에서 밀도 있게 진행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아마 그런 것들은 이번 연말 안까지는 구체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도심은 15만 호, 공공부지 8만 호는 구체적 부지나 사업성 검증이 불투명한 숫자상의 계획이다, 물론 연말까지는 구체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국은 확실한 물량도 아닌 상태에서 성급히 발표를 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희들이 발표한 건 착공 기준을 일원화해서 발표했고요.

○정점식 위원 잠깐만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좀 더 추가적으로 밀도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점식 위원 더구나 서울 도심에는 이미 활용 가능한 공공 유휴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철도 차량기지라든지 정수시설, 국철의 상부 등 입체적으로 개발하면 최소 2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차량기지 열 곳, 물재생센터 두 곳, 광운대역 등은 잠재력이 이미 검증된 부지들이더라는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비판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 국토부는 현실적 대안을 외면한 채 왜 외곽 중심 계획만 고집하냐, 도심 수요가 물리는 곳에다가 공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시장 안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게다가 장관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고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은 인허가에만 10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점식 위원 대치 은마나 잠실 5단지 같은 단지들 경우에도 200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정부가 말하는 신속 착공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의무가 과도하게 부여가 돼서 민간 참여가 위축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 주도의 그런 정비사업은 서울시와 협력을 통해서 좀 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인허가 지원센터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서울시와 대립하는 방식이 아니라 협력하는 방식으로 적극 모색해서 문제를 풀어 가는 게 서울 내의 도심권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점식 위원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서울시와 정부가, 국토부가 대립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점식 위원 그리고 장관님, 아까 착공 기준으로 말씀드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장관님 말씀처럼 시기도 문제입니다. 135만 호 중에서 LH 공공물량 55.6만 호, 그러니까 55만 6000호 중에서 35%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2030년 착공으로 다 집중되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결국은 공정 차질이나 경기 변동이 생기면 전체 계획 자체가 흔들릴 위험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예비물량 확보나 분산 계획 이런 거는 세우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현재 소위 말하는 경기에 영향받지 않고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는 공공 주도의 어떤 주택공급이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또 기타 예비물량에 대해서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LH 그다음에 국토부에 총동원 체제를 갖추라고 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에 두 번씩 주택공급 문제에 대한 보고를 직접 받고 있고 진행할 예정이고요. 노후청사라든가 공공부지에 대한 대책회의도 이번 주 내로 가능하면 직접 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진행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030년도 착공 기준으로 후반부에 배치되어 있으면서 좀 늦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번 새 정부에서는 매우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주택공급 문제를 진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장관님께서 너무 답변을 잘하시니까 장관님 말씀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야가 힘을 모으고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장관님이 지난 국감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공공 주도 정책입니다. 전체 공급 중에서 공공 비중은 48%입니다, 민간이 52%고. 이는 최근 5년간 LH의 공공 착공 비중 약 20%의 2배 이상입니다. 공공이 시장을 선점을 하면 민간의 창의성과 투자 여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장관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 자율적 개발 여건을 복원을 하고 공공 주도, 공공 중심 구조를 완화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님 역시 거의 동의는 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공공 주도와 민간

주도가 상호 대립하거나 상충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기에 매우 민감한 민간 주도가 자칫값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약점에 대해서는 공공 주도가 많은 것을 메꿀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다만 공공은 또 민간이 할 수 있는, 아까 말했던 인허가가 너무 길어지고 또 다양한 형태의 제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허가 지원센터와 같은 방식과 또 지원을 더 강화하는 걸 통해서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점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공공의 비중이 너무 높다, 48%라는 게. 그 부분을 걱정을 하니까 그 걱정을 완화시켜 줄 대책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적극 동의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정점식 위원 그리고 결국은 많은 언론에서도 비판을 했듯이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 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투기성 자금이 물리는 준주택은 방치하면서 실거주 목적의 서민주택만 옥죈다, 이게 과연 공정하냐라는 비판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지금까지 많은 비판들이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안정이 아니라 왜곡과 실패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결국은 규제는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를 누르고 가격을 자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공급은 숫자 부풀리기다, 대출은 실수요를 배제했다, 규제지역 지정은 통계 선택 논란으로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라는 굉장히 다각도의 비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과 굉장히 많이 비판적으로 그렇게 서로 언성까지 높여 가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0월 15일 날 주택통계가 발표된다는 걸 알면서 그 전전날과 전날 주정심을 개최하고 일방적으로 15일 날 발표가 되면서 15일 날 발표된 주택통계를 활용했다면 제외되었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의 비판은 장관님께서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통계 논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그러니까 통계에 관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좀 늦게 해서 그걸 포함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결국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을 조은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해수부장관입니다.

○정점식 위원 장관님께서도 부산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 지역인 통영과 고성도 수산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지난해 우리 바다 수온과 관련해서, 소위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평균 표층수온이 18.74℃, 지난 57년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경남 연안의 고수온 피해액이 2023년에는 207억 원이었지만 24년에는 659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어획량은 2010년 기준으로 해서 25만t에서 올해는 17만t까지 줄었습니다. 기후

변화가 더 이상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수산업의 생존 문제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도 동의를 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동의합니다.

○정점식 위원 그런데 해수부에는 기후변화대응센터, 기후변화 대응 전담기관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렇긴 하지만 저희들이 기후, 고수온에 강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다든지……

○정점식 위원 수산과학원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여러 가지 노력들 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노력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게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제 계속 수산업의 중심인 경남지역, 특히 통영에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센터 신설안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우리 부총리님께서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올해도 해수부에서 내년도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원 정도 반영 요청도 했다가 무산됐다는 소식도 들리고 저희들도 증액 요청도 하고 했는데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에는 이 2억 원조차,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원조차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해양수산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적극 동의를 하실 거고 지금은 경상국립대 통영캠퍼스에서는 만일 이 기후변화대응센터가 이루어진다면 자기들 캠퍼스 내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을 하겠다라는 제안까지 해 놓고 했기 때문에 여건은 어느 때보다 굉장히 성숙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농림부라든지 환경부 이런 데 기후변화대응센터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해양수산 분야에도 기후변화대응센터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도 더 신경을 쓰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총리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주도에서도 이런 요구가 있고 경남에서도 이런 요구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 제대로 잘 반영이 된다면 해수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할 거고 또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바다 수온이 올라가서 진짜 심각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회 소위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만찬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2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20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국혁신당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기재부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늘 청년을 국가의 미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026년도 예산안을 보면 해외든 국내든 청년 보호 체계가 사후 대응 중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지역 청년 문제를 여쭙겠습니다.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 청년의 정착과 고용을 위해 추진된 핵심 정책인데 행안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은 2023년 1985억 원에서 2025년 195억 원으로 3년 만에 90% 이상이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상 사업이 일몰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PPT 보시면 이 사업의 현장 성과가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2023년 정규직 전환율은 59.5%에서 2024년에는 79.9%로 상승하며 고용 안정성이 강화되었고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의 지역 정착 촉진 등 정책적 파급효과 역시 뚜렷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장관님, 성과가 확인된 사업이라면 축소가 아니라 개선과 지속이 필요하겠지요.

해외 취업과 관련된 문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외 취업 사업 K-Move입니다. 청년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지만 사기, 감금, 착취, 임금 체불 등 각종 피해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PPT 보시면, 사업평가 항목을 보면 안전관리 배점은 100점 중에 고작 2점에 불과하고요. 사기 방지 항목은 아예 없습니다. 결국 예산이 단순 실적 중심으로 편성되어 청년 보호라는 본래의 정책 목적이 반영되지 않은 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장관님, 해외 취업 예산은 단순한 취업 실적 중심이 아니라 위험 예방, 기업 검증, 사후 보호가 연계된 청년 안전망 중심으로 전환이 돼야 합니다. 기재부가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이런 예산 구조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K-Move 사업 구조 개편을 해서 안전 관리 그다음에 사기 방지 등 관련 평가 항목을 신설·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외교부 예산을 보면요, 영사 조력 및 해외 안전여행 홍보 강화 사업이 전년 대비 1억 47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특히 사전 예방 영역이 가장 크게 줄었는데 해외 안전정보 제공 서비스와 해외 안전여행 홍보 비용이 삭감됐습니다. 해외의 사건은 단순히 여행 사고를 넘어서 스캠, 감금, 인신매매, SNS 표적 범죄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필요한 것은 사고 후 대응이 아니라 사고를 막는 사전 예방입니다. 1억 5000만 원 삭감인데요. 이것이 국민 생명 보호 체계에는 해아릴 수 없이 심각한 공백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장관님, 기재부가 예산 조정하실 때 이러한 사전 예방 예산이 구조적으로 후순위로 밀

리지 않도록 편성 기준과 우선순위를 재검토할 의지가 있으신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은 유튜브 채널로 하는데 이게 성과가 없어서요. 그래서 YTN을 활용해서 직접 송출하는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반영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살피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재원 위원 이어서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 청사 건립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1층 한쪽에 98평 남짓한 협소한 공간에 위치해 있는데요. 열람 좌석도 점자 자료실도 보조기기도 부족하고 장애인 접근로조차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현재 이용률이 낮다는 평가도 있지만 수요 부족이 아니라 공간도 협소하고 미비한 접근 환경 이런 구조적 문제에 따른 한계가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설 환경이 미흡해서 이용이 어려운 현실을 단순히 이용이 적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행정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침해하는 것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지식 격차 해소와 문화 복지 실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전국 장애인도서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지금의 98평 공간의 열악한 환경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장애인 복지는 국가의 품격입니다. 장관님, 이 사업은 선심성 건축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기재부가 이를 단순한 건물 신축이 아닌 국가의 책무로 인식하고 예산 반영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재원 위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고갈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재원 위원 PPT 보시면 예술 창작과 보급을 위한 법정기금임에도 관광기금에서 이관된 한스타일 육성지원, 공예문화산업 육성 같은 산업 진흥성 사업들이 여전히 문예기금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기금 성격과 맞지 않는 사업이 그대로 편성되니까 정작 예술인 창작 지원과 복지 예산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정리를 하고요 일반회계나 관련 기금으로 재이관해야 됩니다. 문예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가 정한 본래 취지대로 창작·보급, 복지 중심으로 정상화돼야 됩니다.

동시에 기금 재원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문예기금은 복권기금 공익 배분금하고 정부 출연금에 의존해서 매년 규모가 들쭉날쭉한 상황입니다. 대안을 드리자면 공연·전시 등 문화 소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일부를 문예기금으로 전입을 하거나 복권기금의 법정 배분 대상으로 문예기금을 추가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안은 조세 저항 없이 법 개정만으로도 가능하고요. 복권기금 배분율을 35%에서 43%로 상향할 경우에 약 2800억 원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가 됩니다.

장관님, 문예기금 성격에 맞지 않는 이관 사업 정리하고 회계 재조정을 추진해 주시겠

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지난번에 문화부장관님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화부 내의 기금을 통폐합하는 등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복권기금 법정 배분 전환과 부가가치세 전입 등 재원 안정화 조치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난번 추경 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범죄수익 환수 재원화 추진 방안 역시 함께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예기금 구조적 정상화는 결국 현장에서 창작하는 예술인들한테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술인들이 실제로 제도와 복지 혜택을 체감할 하기 위해서는 행정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K-콘텐츠 성공의 중심에는 현장에서 묵묵히 창작을 이어 가는 수많은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술인 복지의 기초가 되는 예술인활동증명시스템이 2012년 구축 이후에 한 번도 전면 개편되지 않았어요.

PPT 한번 보시면 2012년 첫해에는 불과 792명이 등록한 이 시스템이 2025년 현재 20만 명을 돌파해서 2012년 대비 약 2만 5200%의 폭발적인 증가율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기 버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노후화로 보안 패치도 불가능하고 사업별로 별도의 시스템이 운영되기 때문에 신청·지원 이력 정보가 분산돼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통합적으로 예술인 이력 관리조차도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또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자료제출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요. 오류도 잦고 예술인들이 복지사업이나 공모 때 제때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술인활동증명은 복지재단의 각종 지원사업, 지자체의 기회소득, 사회보험료 지원 등 모든 예술인 복지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그런 핵심 기반 제도로 이게 원활히 작동하지 않으면 예술인 복지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한병도 위원장, 박형수 간사와 사회교대)

PPT 보시면 2026년 예술인정보시스템 개선에 관한 정부안에는 6억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 금액만으로는 단순 유지·보수밖에 못 합니다. 최소 15억 원, 즉 9억 원의 증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기초 작업과 함께 AI,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도입해서 예술인 경력 관리, 정보 보안, 이용자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그런 금액입니다.

지역 간 격차도 해소가 시급합니다. 현재 10개 지역 협력단체가 예술활동증명 심의를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역예술인 복지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9억 원의 지역 협력 지원 예산도 함께 반영돼야 합니다.

장관님, K-컬처 300조 시대를 얘기하면서 기본이 되는 자격증명시스템이 12년 전 기술에 머물러 있다는 것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술인활동증명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증액 적극 수용하고 예술인 복지 행정 디지털 기반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할 의지가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소위 과정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지 38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유산위원회를 국내에서 개최를 하게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서 이번 총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문화강국 이미지를 한층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정부안에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관련 해외홍보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PPT 보시지요.

단순한 행사 진행을 넘어서 주요 해외도시 옥외광고나 글로벌 인플루언서 홍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 이미지 제고와 문화유산 관광 수요도 창출을 해야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 종묘 일대 개발 논란으로 세계유산 등재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우리 유산정책의 신뢰가 흔들릴 우려가 있는 이런 마당에 적극적인 국제홍보를 통해서 보존 의지와 관리 역량을 보여 줘야 할 때입니다.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통한 국제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해외홍보 예산 증액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장관님, 다년간 국회 문체위 활동을 하셨잖아요. 지금도 자리가 있으신데요. 서울 세운4구역 재개발이 종묘 바로 앞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묘는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유산이자 세계유산협약 가입국으로서 유네스코의 보호의무를 지고 있는 상징적인 유산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재원 위원 현재 유네스코가 우리 정부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법제화하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부처 간 이견으로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을 막는 제도가 아닙니다. 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방안을 함께 찾자는 사전 조정 제도입니다. 서울 종묘 일대뿐 아니라 조선왕릉 등 국토부 소관 지역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합니다.

장관님, 국토부가 국가유산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완료되고 향후 도시교통개발사업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국토부도 국가유산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세계유산법 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지키는 일과 또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 균형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감사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님 어디 계십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예.

○김재원 위원 2024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보면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사업이 미흡으로 평가가 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그래서 8.1%, 약 11억 7000만 원 감액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런데 평가 결과를 보면 사업 실질 성과와 무관하게 소

관 불일치, 즉 행정적 분류 문제를 이유로 낮은 점수를 부여한 정황이 확인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평가를 깎았습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처리하는 조정 사건의 90%가 방송과 인터넷 매체 관련 분쟁입니다. 즉 기금의 목적과 실제 기능이 충실하게 부합하고 있는데도 행정상의 분류만으로 미흡 평가를 내린 겁니다.

방통위가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닌데요.

다음 PPT 보시지요.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매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때마다 방통위는 자체 수행 사업이나 직접 연관된 사업은 우수·보통 등급을 주면서 정작 외부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타 부처 성격이 강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미흡 평가를 내렸습니다. 2023년과 24년에는 아리랑TV와 국악방송이 연속적으로 미흡 판정을 받았고 3년 연속 미흡일 경우 사업이 폐지된다는 규정이 부담이 되자 올해는 언론중재위원회를 새로운 미흡 대상으로 삼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님, 단지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근거까지 명확한 사업에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것이 타당합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사업계획의 적정성, 성과 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그 금액은 1억 3700만 원 감액됐는데 지금 과방위에서 그 부분을 다시 복원하는 부분을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복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불공정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재부장관님, 미흡 평가에 따라서 예산을 감액하는 제도는 성과 중심 예산제도의 일환이지요. 그런데 이번 건은 성과 외의 요인, 즉 행정적 분류와 법률 해석상의 차이로 감점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집행률은 최근 3년 평균 97% 이상이고요 피해 구제율과 이용자 만족도 모두 목표치를 초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을 미흡으로 분류하고 예산을 줄이는 게 과연 합리적 재정 평가입니까?

기재부는 이미 국회 지적 이후에 평가 운영 실태를 점검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사례처럼 성과 외 요인으로 감점된 사업은 재평가하거나 감액분을 복원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이게 지금 민간 평가위원들이 해 놔서 저희들이 좀 부담은 있는데 하여튼 소위 과정에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김재원 위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관 불일치에 따른 왜곡 평가를 즉시 시정하고 기획재정부는 성과 외의 요인으로 인한 부당한 감액분을 전액 복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간이 좀 남아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 앞서서 예술인 복지 제도,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결국

예산의 본질은 무엇이나? 국가의 책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을 질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그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연장선에서 인간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생명에 관한 문제를 짚어 보려고 합니다.

2026년 1월부터 야생생물법에 따라서 곰 사육이 전면 금지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편성한 사육곰 보호·관리 예산은 9억 7500만 원, 현재 남아 있는 270여 마리의 사육곰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PPT 보시면, 전남의 구례 보호시설은 이미 준공돼서 10마리를 보호 중이고요 최대 49마리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충남 서천 보호시설은 침수 사고가 나서 공사가 중단되어 준공이 2027년 이후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내년 1월 법 시행 시점에 220마리 이상이 보호시설 밖에 남게 됩니다.

이 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화천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가 나서고 있는데 정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일부 단체는 곰을 중국을 포함한 해외 생크추어리로 보내는 그런 방안까지 협의 중입니다.

장관님, 이걸 단순히 우리가 시설이 부족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만든 법 이행 과정에서 국가가 동물복지에 마지막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한국이 자국의 곰조차 지키지 못해서 해외로 입양을 보내는 현실은 동물복지의 후퇴이자 국가 품격이 흔들리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평생을 간혀서 쓸개에 파이프가 박힌 채, 그렇게 파이프가 꽂혀서 생명을 갈취당하던 그런 아이들 아닙니까? 이 곰들 그렇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PPT 보시면, 그래서 정부안과 실제 필요한 예산의 차이를 표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9억 7500만 원만 정부예산안이 반영이 되었지요. 그런데 법 시행 이후 남게 되는 초과 개체 220마리 1년간 보호하려면 최소 33억 원이 필요합니다. 23억 원 이상 증액이 돼야만 야생생물법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입니다. K-문화 강국의 품격입니다. 기재부는 예산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환경부는 사육곰 이후의 삶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의지가 실현되기 위해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정부가 만든 법이라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산의 공백이 동물복지의 공백이 되지 않도록 증액을 꼭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형수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영주·영양·봉화의 국민의힘 임종득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남북 9축 고속도로 들어 보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임종득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경북 영천에서 출발해서 영양, 봉화를 거쳐 가지고 강원도 양구까지 이르는 1개 시, 9개 군이 포함돼 있는 계획입니다. 이게 1999년도에 반영이 됐는데 20년이 지나도록 지금 변함이 없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임종득 위원 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작년에 10개 시군의 1만 3800여 명이 서명을 통해서 남북 9축 고속도로를 반영해 달라는 탄원이 있었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올해 영양에서 10개 시군의 군수·시장들이 모여서 한 행사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결정이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25년 말 원래 예정인데요 좀……

○임종득 위원 지금 다 돼 가네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26년 초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득 위원 좀 밀립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임종득 위원 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장관님, 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께서 대선공약으로 내셨던 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임종득 위원 통상 대선공약으로 제시가 되면 로드맵이 수립이 될 텐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준비해서요 다음 전체 망 계획 잡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이게 사실 국토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장관님, 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 날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께서 하신 내용입니다. 기존의 예타에 문제가 많다는 인식하에 균형성장이라고 하는 항목을 추가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지금 어떻게 반영해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항목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국토부장관님이나 우리 부총리님이, 지금 백두대간을 통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남북, 종으로 봤을 때 텅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이 부분은 B/C 값을 가지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다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임종득 위원 다음은 산림청장님 오셨습니까?

○산림청장 김인호 예.

○임종득 위원 영주시에 국립산림치유원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산림청장 김인호 알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최근에 퇴직 예정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 봤어요. 그런데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보고받았습니까?

○산림청장 김인호 예, 보고받았습니다.

○**임종득 위원** 영주가 소백산과 백두대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숲을 이용한 관광단지으로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실제 용역에도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

청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소백산을 같이 쓰고 있는 단양은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산림청장 김인호** 맞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차원에서 사실은 치유원 쪽에 맞춤형 돌봄 체류형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게 영주시의 생각입니다. 산림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청장 김인호**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또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치유와 함께 레포츠나 체험도 이루어지는 복합 산림체험 공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렇다면 청장님도 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고.

결국에는 예산의 문제입니다. 부총리님께서 이 부분 한번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예,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국토부장관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결국은 토지거래허가제 10월 15일 조치와 관련된 질문들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부동산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점식 위원 얘기할 때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임종득 위원** 그렇지요? 용두사미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건 장관님의 생각만이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PPT 한번 올려 주시지요.

이 내용이 뭔가 하면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구청에서 벌어졌던 해프닝입니다. 색깔 다르게 한 것만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참 웃지 못할 일입니다. 공무원이 허가를 안 해주면 안 되는 가운데서 시민이 하소연하고 있는 모습들이지요. 이게 뭔가 하면 시장의 요구에, 흐름에 맡겨야 되는데 강제하는 가운데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임종득 위원**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정책을 계승하고 있어요. 아니, 계승하다 못해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10월 15일 발표된 내용을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구역이 포함되었습니다. 사실상 수도권 전역이 포함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10월 15일 대책과 관련해서 통계 누락 의혹을 받고 고발된 것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통계 누락이요?

○임종득 위원 예, 통계 누락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시의원이 장관님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임종득 위원 아까 답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15일 날에 발표를 했는데 13일 날 국토부에 보고가 됐어요. 대통령실까지 보고된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검토하거나 정책을 발표하는 날, 시간을 좀 머루는 한이 있더라도 이 통계를 적용한 결정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봐도 계속 변명만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현재 13일 날 저희가 알게 된, 저희한테 통보가 된 부동산 그것은 실제 어떤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임종득 위원 그거는 핑계입니다. 10개 구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가 보고가 되었는데 지금 그런 변명을 통해서 10월 15일 이 결정 했던 것을 변명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고발도 들어가고 관련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그때 당시에 그게 아니었다고 해서, 원래 직전 3개월의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7·8·9월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15일 날이어 가지고 그게 늦었다 그러면 미리 달라고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닙니다.

○임종득 위원 제가 또 보여 드려야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

○임종득 위원 제가 이따 보여 드릴까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법리적 논쟁을 한다면 저는 여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건 행정심판을 통해서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임종득 위원 그러면 법리적으로 하더라도, 고발을 했으니까 법리적 논쟁은 나중에 하는데 이게 시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 안 하시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2~3일 더 늦췄으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수용할 수 있지만 법에서는 부동산 동향 통계는 활용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그걸 인정하신다면 지금 이 잘못된 정책결정에 대해서 번복하거나 철회할 계획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부동산 동향에 관한 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게 되면 위법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난 정부에서……

○임종득 위원 아니, 9월 달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표되기 이전에는, 공식적으로 공표되기 이전에는 통계 자료를……

○임종득 위원 그거는 법리적으로 한번 따져 보면 되는데……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렇지요. 법리적으로 따져 보면……

○임종득 위원 국민 눈높이로 봤을 때는 그게 맞지 않고요. 그게 드러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10개 구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 이미 드러났어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윤석열 정부에서 통계 조작이라고 해 가지고 현재 국토부 공무원들이 수사받고 있고 감사를 받아서 징계 청원도 되어 있고 직위해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철회하거나 그럴 계획이 없다, 생각이 없다로 이해하면 되지요?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그러니까 그 문제는 법적으로 따질 여지가 있으니까 법적으로 다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임종득 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또 폭망합니다. 부동산정책 이 정부도 발목이 잡힐 겁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다음 PPT.

토지거래허가제 이게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자연적인 시장경제 체제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만함이 있는 거예요, 이 정부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지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서울시장님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시적으로 풀었다가……

○임종득 위원 아니, 그런 핑계를 대지 마세요. 제가 이것은 다시 이야기할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부동산 폭등한 사례에서 봤듯이 토지거래허가구역 그 제도 자체가 갖는 긍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종득 위원 부총리님, 투자가 뭐고 투기가 무엇인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와 투기의 차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정의하기에 따라서……

○임종득 위원 어렵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임종득 위원 주관적이고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우리 정치 현실을 놓고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 여당은 지금 투기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 싶어 하는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욕구 자체를 악마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론을 대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심지어 공산주의적 정책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다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진보 정권은 수요 억제, 세금 부과, 소유 제한을 많이 했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시장과 수요가 정책을 이겨 내는 것이다,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김용범 실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대통령후보 이재명과 대통령 이재명이 다른 겁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 부분이 세제를 우선 쓰기보다는 하여튼 라스트

리조트(last resort), 최후적으로 불가피하게 하겠다 그 정도로……

○**임종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거 전과 후가 이렇게 표리부동한 것에 대해서 시장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좀 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강제적으로 정부에서 틀고 조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오만입니다. 이것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국토부장관님, 토지거래허가신청서 한번 작성해 보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는 안 해 봤습니다.

○**임종득 위원** PPT 보시면 구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토지 이용 및 관리 계획을 이렇게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공무원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허락을 받지 못합니다. 자신의 합법적인 재산을 사고파는 일인데 국민은 철저하게 을의 입장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만을 가지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임종득 위원** 다음 PPT 올려 주시지요.

이것은 온라인상에 토지거래허가제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들의 사연들을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작년의 나의 토허제 경험담. 다시 못 할 것 같다. 공산당이 따로 없네’. 이 내용들을 보면 참 딱하기 그지없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꼭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득해야 돼요.

다음 PPT.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빛내 집 사는 게 맞나, 투기는 막겠다’.

제가 질문합니다. 원래 집 사는 데 빛내서 사는 것 아니에요? 저도 집을 사 봤습니다만 빛내서 집 사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은 빛내서 안 샀어요? 빛 안 내고 어떻게 삽니까, 지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는 전주에서 사 가지고요.

○**임종득 위원** 그래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임종득 위원** 대부분의 사람이 빛을 내고 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내로남불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당사자들이 다 빛을 내서 집 산 사람들입니다. 갭투자 해 가지고 돈 번 사람들이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대출 규제, 이 부분이 또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PPT 한번 올려 주시지요.

이번 정부에서 이렇게 했지요. 유주택자는 대출을 아예 금지하고 무주택자는 70%에서 40%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요?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부 무주택자가…… 수정을 했습니다.

○**임종득 위원** 몇 가지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바로 수정을 했습니다.

○**임종득 위원** 다음.

그러면 그 제도대로라면 한번 보십시오. 밑에 보면 최소한 현금 6억이 있어야만 집을 살 수 있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임종득 위원 아무리싼 집을 사더라도.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 중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번 사람도 6억 현금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몇 명 될까요, 아까 찬스 빼고? 없겠지요. 왜 구조를 이렇게 만드냐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또 한 가지는 수도권 전역에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임종득 위원 이게 돈을 6억 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그래도 자기가 번 여윌돈을 가지고 사서 거기 안 들어가고 전세를 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갭투자로 해 가지고 집을 한번 구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의 희망을 완전히 꺾어 놔어요. 이것 왜 이렇게 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위원님 말도 저는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갭투자가 만연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수요가 몰리는 과정을 통해서 집값이 폭등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집값 폭등에 관한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렇게 그걸, 갭투자를 가지고 크게 해석해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면 설명이 설득이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요. 위원님, 공급이 충분했다면 덜하겠지만 공급이 부족한 조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종득 위원 다음 한번 보시지요. 이것 한번 보세요.

지금 정책 발표되고 전반적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급감하는 모습. 올 1월과 10월의 차이가 22.9% 감소가 됩니다. 올해가 전년 대비해 가지고 2배 이상 전세계약갱신권 청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 보고받으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임종득 위원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로 지금 전환되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전세대란이 지금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지난 몇 년 동안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추이에 대해서 그 변화를 보면 지금 불과 몇 개월 단위로 벌어진 일이 아니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벌어진 겁니다.

○임종득 위원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것은 지금 여론을 가지고 보고 전반적인 걸 보고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요인이 있겠지요. 그러면 저 위원이 왜 저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좀 받아들이려고 하세요. 그리고 검토해 보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무조건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임종득 위원 다음 한번 보세요.

이게 결국은 서울 전역에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가 되고 다주택자의 세부담으로 폭등합니다. 이 영향이 나타날 겁니다. 참고로 보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길게 이야기 못 합니다.

다음.

강남이나 수원지역이 규제에 묶이면서 이제 수도권 지역의 1300만 국민들이 지금 다 투기꾼화되는 것 같아요. 지금의 정부에서 하는 정책의 모습을 보면 1300만을 투기꾼으로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임종득 위원 한번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원주율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현 위원 좌석에서 하겠습니다.

강원 원주율의 송기현 위원입니다.

국토부장관님께서 대답을 다 못 하신 것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잠깐 30초 정도만 대답 다 못 하신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현재 우리 새 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실제 지난 몇 년 동안 수도권, 특히 서울지역의 공급이 매우 부족하게, 공급절벽 현상이 생긴 조건 속에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결국 주택수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그런 과정에서 부동산가격이 폭동한다고 하는 현실로부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나오고 있다는 현실을 저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동산 공급을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야 되겠고 또 국토부가 책임지고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주택이라는 게 어느 순간 공급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기 내에서는 일정한 수요억제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그런 금융정책과 다양한 형태의 정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대표적인 게 이번 10월 15일 날 발표된 규제대책 및 수요억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규제 정책 자체가 많은 국민들로부터 불편하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겸허하게 수용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집값이 폭동하는 것을 막지 않으면 그 어떤 형태의 주택에 대한 혼란이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현실을 봐야 되겠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인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30초를 해 달라 그랬는데 2분가량 하셔서 가지고 많이 하셨네요.

기재부장관님, 부총리님하고 국토부장관님한테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라는 게 있지요. 이게 국가기간 도로망하고 지방 도로망을 연결해 가지고 지역 간 접근성을 강화하고 생활권 간 연계를 하는 그런 도로인데 설계하고 그런 최초의 관리계획 이런 건 국토부장관이 하고, 설계하고 조사하는 것도 국토부장관이 하고 설계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 도가 공사를 하는, 보상을 하고 공사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요. 특별시하고 광역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설계를

해서 그것을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체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최근 5년간의 국지도 사업의 평균 공정률이 41.2%밖에 안 돼요. 이런 내용 알고 계시지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 63.8%였던 것이, 이게 설계가 돼 가지고 공사가 도에 넘어간 상태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잘되는 데인데도 공정률이 19년도에는 63%, 그런데 22년도에 50%까지 내려갔어요. 전체적인 공정률을 보면 20% 미만이 15건이나 됩니다. 20% 미만이에요, 이거는 설계까지 돼 가지고 넘어간 게. 최근 5년간에 국토부가 설계를 완료해서 지자체에 이관한 사업 중에서, 32건 중에서 21건이 공정률이 0%예요. 공사가 진행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국토부장관님이 아시겠지만 첫째로는 설계해 가지고 할 때 지방, 실제 하는 여건하고 잘 조사가 안 되면서 설계도가 내려간 다음에 도가 맡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보상하는 데서 어려움을 겪어요.

(박형수 간사, 한병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처음에 설계했던 도면하고 보상하려고 하는 도면하고 달라요. 도면이 다르니까 보상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늦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지방 여건하고도 틀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여건하고 틀린 게 있고 현실 여건이 틀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하게 되면 또 공사비가 늘어나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송기현 위원 어떤 경우는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물가상승 되면서 공사비를 다시 산출해 보니까 공사비가 또 늘어납니다,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일정한 정도 더 늘어나면 타당성조사 다시 받아야 되지요? 타당성조사 다시 받으면 그것도 1년 또 걸리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송기현 위원 그렇게 되면서 그냥 늘어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보상 자체는 지자체가 다 해야 되니까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보상을 못 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런데 이런 게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면서 계획했던 대로 안 이루어지고 현재는 40%대 집행률밖에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국토부장관님, 국도의 경우에는 이번에 보상에 관련된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게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송기현 위원 그래서 지적중첩도를 미리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선지정 지적 측량을 해 가지고 보상이나 이런 것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가 돼 있고요. 또 전문기관과 협업해 가지고 공사하는 여건을 잘 맞춰서 설계 단계부터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송기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국지도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지도의 경우에 이런 제도가 더 잘 활용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지자체 까지도 같이 협업에 포함시켜서 애초에 처음 계획하는 단계, 그러니까 처음 지정하는 단계부터 설계하는 단계 그 단계에서 지자체하고 잘 협의가 되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 맞게 잘 조사를 해 가지고 지역에 맞는 설계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설계까지 하고 난 다음에 도가 실행을 할 때 이것이 좀 더 신속하게 지연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할 때 지자체와 설계 시부터, 초기부터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데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국지도 98호선에 양근대교 확장공사가 있었는데 이것이 설계가 다 돼 가지고 2022년도 12월에 이관이 됐는데요. 이것을 양평에서 받아 가지고 인허가를 추진할 때 보니까 교량 구조하고 하상의 상태가 설계하고 완전히 달라서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새로 설계도 해야 되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다음에 총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024년부터 지금까지는 총사업비 변경 때문에 생기는 재조사 단계에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전형적인 예거든요.

그래서 장관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에 제정된 보상 가이드라인을 국지도 사업에도 적용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자체가 협의에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설계 주체를 지금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자체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국토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이것도 점차적으로 도까지도, 도지사가 설계와 이런 것을 하고 난 다음에 승인을 받는 형태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보상비 부담은 현재 100% 지자체에 하고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송기현 위원** 이것은 부총리님한테 말씀드리는데 현재 100% 도에다 맡기고 있거든요.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도로법에. 그런데 사실은 도별로 보면 이게 재정자립도도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인구소멸지역 등 여러 가지 정책적 필요가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100%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하고 있는 이런 제도를 조금 더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나 인구소멸 여부 등등을 요건으로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국지도 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나 소유 주체가 지방이다 보니까 보상은 또 지방에서 하는 이런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법상 규제도 또 규정도 있고 이러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타당성재조사 문제인데 타당성재조사를 할 때 일단 절차에 들어가면 1년 이상 걸리는 게 보통이니까 그것 때문에 지연되는 게 많이 있던 말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 부분은……

○**송기현 위원** 여기서 신속하게,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같이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속도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게 필요하지 않는가.

또 하나는 단계별로…… 너무 다 묶어 놓으니까, 타당성재조사 기간에 아무것도 못 하게 다 묶어 놓으니까 진행이 아예 스톱이 돼 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계별로 해 가지고 일부는 진행을 하면서 타당성재조사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연구해 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토부장관님은 이렇게 지연되는 게 있으면 왜 지연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것인지를 지자체에서 보고서를 받고 협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파악한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2006년도에 된 게 아직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굉장히…… 20년 동안, 거의. 2006년에 됐으면 지금 거의 19년 된 거잖아요. 그런 것도 안 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원인을 다시 잘 보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같이 협의해서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빨리 집행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도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걸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해수부장관입니다.

○송기현 위원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1975년도에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따라 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처음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초기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송기현 위원 많이 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1989년도에 맑은 물 공급정책 이게 생기면서 대대적으로 다 금지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1990년도에 환경부 고시하고, 일체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은 면허 연장이 금지가 됐고 또 1997년도에는 국무총리가 지시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아예 다 내수면 가두리어업이 금지가 되면서 가두리양식업 자체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은 완전히 못 하게 됐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 바람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이 굉장히 큰 손실을 입고, 사실 이게 벌써 1997년도니까 지금 30년 가까이 됐는데 그 당시에 막대한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은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 보상하는 그런 법을 만들게 됐는데 처음에는 90년도 고시하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서 면허 연장이 안 된 분만 했다가 올해, 그 이전에 89년도에 그 당시 환경청장관의 지시로 해 가지고 금지된 그런 분까지 추가가 됐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래서 위원님, 일단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1차 공고 미보상 대상자가 한 9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추가 보상 대상자가 한 15명 정도, 한 47억 정도 규모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예측일 뿐이고 실태조사하고 그다음에 손실보상금 사정을 하는 용역비가 필요한데 이게 한 4억 정도가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억 정도가 증액이 필요하게 되면, 이 법이 통과가 됐는데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끔 저희들이 추가로 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기현 위원 지난번 9월 16일 날 본회의 통과가 됐고 12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을 보면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 침해가 되고 굉장히 큰 손실도 보고 이런 사건이고 실제로 국가가 장려를 하다가 갑자기 정책을 바꾸면서 이분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헌법재판소에서 심판까지 나왔어요. 나왔었는데 사실 그게 5 대 4가 돼 가지고 위헌이라는 것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6명이 안 되는 바람에 이것이 보상이 굉장히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벌써 30년가량 미뤄졌거든요. 지금이라도 이것을 신속하게 국가가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당연한 의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이번 예산 시즌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당장 내년 1월부터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보상금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부총리님, 지금 장관님한테 말씀드린, 해수부장관한테 말씀드린 내용이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태조사 하는 것하고 어느 정도 평가를 해야 되느냐 하는 사정 비용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거기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보상에 대한 비용하고 이것이 적어도 내년 예산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부총리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소위 과정에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부총리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국토위에서 2024년도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이것 꼭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국토부장관이 당시에 ‘꼭 이것 하겠습니다. 재정 당국과 협의해 가지고 꼭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난 정부에서도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올해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어요. 올해도 저희 국정감사에서 다시 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다시 또 내년 예산에도 그게 전액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영구임대아파트의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시범사업입니다. 전국 영구임

대아파트에 보면 여기가 노인들도 많이 계시고 사회보호대상자도 많이 계신데 실제로 노인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아동,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게 많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노인께서 이용하시는 것이 50% 정도 되고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것도 41% 정도가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청소년도 한 5% 정도 이용한다고 되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이 이것을 이용하는 지역복지의 중심 역할을 하는 건데, 전국에 159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117개가 20년 이상 된 겁니다. 159개 중에서 104개가 30년 이상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노후화돼 가지고 위험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유는 LH에서 하고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책임 주체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계속 반대해 가지고, 국토부에서는 국토위예다가 국정감사 때 ‘하겠습니다’ 약속했는데 2년째 내내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총리님께서 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이게 참 고민인 게, 이게 소유가 LH다 보니까요. 그리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부분이고 이래서 국가가 이렇게 딱 돈 주기가 사실은 또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LH 소유에 대해서 정부가 리모델링해 주는 것하고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어렵다고 저보고도, 제가 이 어려운 분들 이런 것 좀 안 해 주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주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LH하고 좀 협의를 해 보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방안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부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는 LH가 하고 있고 또 관리는 지자체가 하고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운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실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맞습니다.

○**송기현 위원** (청취 불능)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상 위원** 저는 먼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데이터 관리 및 활용에 관해서 데이터처장님과 국세청장께 질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는 상병수당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장관님과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국토부장관님께는 잠깐 겨울철 폭설 관련해서 주거 관련한 대비가 돼 있는지 여쭙볼 계획입니다.

데이터처장님!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예.

○**최기상 위원** 지난주에 국회에서 다차원적 불평등지수 발표한 것 잘 보셨지요?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예.

○**최기상 위원** 저도 말씀드렸고요. 보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자산 불평등이 더 심화됐다

라고 해서 걱정이 좀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 중의 하나가 데이터 관련한 제안이 좀 있었습니다. 보시면 데이터 품질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고 데이터 통합·연계·관리 제도화가 필요하고 데이터 보안·안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한 분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불평등에 관한 데이터를 제대로 수집하고 있는 것 같다. 그에 대한 얘기는 어떠세요?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소득 불평등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자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불평등 관련된 자료 데이터들을 모으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다음 PPT 보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관이 저렇게 있더라고요. 데이터처에서 이 기관들이 낸 자료 관리를 정확히 해야 될 텐데 앞으로 복안이 좀 있으세요?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예. 저희가 여태까지는 통계만 해 왔었는데요 이제 데이터처가 되면서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등록을 하고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보니까 불평등에 대한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 그에 관한 진단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예.

○**최기상 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는 행정 데이터조차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입법조사처에서도 앞으로는 더 세부적인 영역까지 불평등 현황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처에서도 국회입법조사처와 같이 이 부분도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예, 같이 협력해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관련해서 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불평등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어떤 자산을 평가하는데 실물자산의 경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 또 금융자산은 금융자산대로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실물자산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좀 있으세요?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지금 저희가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요청할 수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통계 외에 데이터 자체를 분석하는 그 목적으로는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기본법 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기본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연계해서 분석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또 금융실명법이 있고 현재 통계청법도 있기는 한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말씀……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예, 그렇습니다.

각 부처가 법을 서로 갖고 있기 때문에 부처 간의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국세청장님, 관련해서……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국세청 차장입니다.

○최기상 위원 차장님, 지금 금융소득 관련해서는 국세청이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까, 어느 법령에 근거해서? 파악은 하고 계시지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 자료를 데이터처에서 불평등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법령의 개선이 필요한가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그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세 목적으로 수집된 통계데이터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계 목적으로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요도 먼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가공이라든지 또 말씀하셨던 자료 수집처 이런 것들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기상 위원 국가데이터처에서 관련한 협의를 요청해 오면 국세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좀 해 주세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차장님께서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의 현황을 개선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기초 자료는 데이터처가 책임지고 정확하게 만들어 내셔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혹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거나 예산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아시다시피 불평등 해소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다들 인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자유의 최고치는 평등이다라는 견해를 말씀하는 분도 있고요. 또 민주주의 역사는 결국 평등의 확대, 평등의 확산의 역사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으레 상위 1%나 상위 10%의 압도적인 자산의 소유를 인정하는 듯한, 체념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는데 이것은 사회의 역동성이나 지속가능성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처에서 특별히 더 신경 써 주세요.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감사합니다.

국토부장관님께는, 저희가 작년에 습설로 인한 피해가 어떻게 심각했었더라고요. 올해 어떻게 대비를 좀 하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현재 폭설이라든가 또 폭우 이렇게 긴급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특히 주거 문제가 문제가 될 경우에 대비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가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지원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들어가게 되면 지자체장이 추천하고 또 그런 것 LH에서 하게 되는데 2년간 보증금을 면제한다든가 그다음에 임대료를 무상으로 한다든가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당장 우리 사회에서 최소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칠팔십만 가구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70만 명에서 많으면 200만가량의 국민들께서 최소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사시잖아요. 이분들이 당연히 폭설이나 한파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주거개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작년에도 보니까 11월 말에 한파 대비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라는 범

정부회의를 하셨더라고요요, 작년에도, 올해도 조만간 하실 계획이지요? 어떠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현재 특히 겨울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처로 그런 것이 약간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바우처 문제도 있고 또 난방설비 문제도 있고 해서 실제 국토부와 산업부, 기타 여러 부처가 협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서 집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저희가 공직자들이 생명에 관해서 마음을 먹을 때는 단 한 사람도 겨울철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생명에 손상이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마음을 먹고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지. 예년에 비해서 사망자 수가 줄었지’라는 마음가짐은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노동부장관께서는 상병수당 관련해서 여쭙보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노동부차관입니다.

○**최기상 위원** 차관님, 상병수당 제도라는 게 지금 OECD 국가 중에 우리하고 미국만 없다는데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지금 유럽에는 좀 보편적인 제도로 있는 걸로, 저도 각국의 사정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일하는 분들한테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일하는 분들은 아팠을 때, 저 이슈가 대두된 게 사실은 코로나 때 많은 노동자들이 코로나 걸렸을 때 그런 수당이 없다 보니 아픈데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지 아니면 소득을 상실한다든지 여러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부터 아마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2단계에 걸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복지부 사업의 성과를 보면서, 사실은 유럽에서 상병수당이 도입된 양태도 좀 다양합니다. 이게 국가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주하고 일부 부담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기상 위원** 조만간 우리가 2027년부터인가요, 사업 시행하는 건데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일단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에서 시범사업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상병수당 제도가 사각지대도 조금 있고요 지급되는 액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적다 이런 평가가 있는 모양이에요. 주무부처는 아니시지만 그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액수나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사실은 상병수당 관련해서 다른 여러 가지 저희 복지제도, 정확히 저도 사실은 노동부 입장에서는 알지는 못하지만 의료보험에서의 여러 가지 제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각종 급여제도의 정합성과 중복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금액을 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더 충분한 사회적인 공론화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기상 위원** OECD 국가가 대부분 있는데……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그런데 위원님, 외람되지만 OECD 국가에 상병수당 제도가 있는데 또 OECD에는 없는 우리나라의 또 다른 제도가,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러니

까 만약에 노동 쪽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한번 충분한 공론화와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부장관께서는 취임하실 때 상병수당 관련해서 관심을 크게 표명하셨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코로나 때 제기된 문제여서 관심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우리 사회에는 지금 보니까 법정 유급 병가는 없는 모양입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 부분도 좀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고용부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상병수당은 지금 복지부가 3단계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27년에 본사업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법정 유급 병가도 없고 상병수당도 없는 나라에서 그동안 어떻게 일을 하고 사셨대요? 아프시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일하는 분들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제도의 공백인 것 같습니다.

○최기상 위원 게다가 현재는 65세 이상 노동자들은 해당이 안 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근로인구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연령을 15세에서 64세로 시범사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최근 고용률을 보면 65세 이상의 고용률도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알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리고 65세 이상의 일하시는 분들은 또 그만큼 빈곤율도 높은데 상병수당을 제외한다,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런 문제점들이, 시범사업 하면서 많은 문제점들, 검토사항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3단계 시범사업의 모형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본사업 때 사업에 대한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리고 현재는 우리나라 국적자에게만 해당이 되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 그렇습니다.

○최기상 위원 소위 우리나라에서 일하시는 외국인 노동자분들, 이민 노동자분들은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굳이 그렇게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머나먼 나라에 와서 타국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아픈데 상병수당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용을 못 한다, 제외하는 근거가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는 취업자의 기준도 어떻게 할 거냐, 소득기준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연령이나 국적에 대한 부분을 좀 제한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시범사업 하면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이슈를 검토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국적 부분은 한번 특별하게, 본질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제도의 본질이 일하던 분들이 업무 외의 사유로 아팠는데 그런데 국적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특히 그분들이야말로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한테 와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오

히려 떠나면 타국에 와 있으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먼저 적용을 해 줬으면 해 줬지 그것을 안 해 주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아마 외국인도 그 취업자 기준이나 고용 형태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하겠고.

현재는 재원을 건강보험 재원을 쓰는 걸로 되어 있어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또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말씀 주신 65세 이상 또 외국인에 대해서는 본사업 준비할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장관께서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잘될 것 같습니다.

다음 PPT 보면, 우리 노동자분들 중에서 아파도 못 쉬는 분들 중에 말씀하시는 게 대체할 사람이 없으니까 남은 분들이 일을 나눠서 해야 되니까 미안해서 못 쉬는 경우가 있잖아요. 결국 쉬려면 대체인력 부분이 또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아마 시범사업 하면서 어떻게 그 대체인력이 적용이 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 말고도 요즘은 휴직이나 육아휴직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모든 사업장에서 대체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돌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장관님 경우에 저녁을 드셨을 텐데요. 직접 해서 드시진 않고 누군가 만들어서 장관님한테 제공을 했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오실 때 누군가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오셨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최기상 위원 돌봄을 또 받으신 거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최기상 위원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성공했다는 CEO들이나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 다 마찬가지지요. 대부분 돌봄을 받습니다. 돌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기업 같은 경우는 돈을 지급할 뿐이고 저희도 돌봄받으면서 대가를 지급할 뿐인데 그게 왜 더 대단하다고 평가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일자리를 준다, 자기가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먹여 살린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돌봄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일하는 데 지장을 받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돌봄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의 인정이 너무…… 표현을 뭐라고 할까요? 빈약하다, 야속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코로나를 겪으면서 돌봄 노동자들의 소중함 또 돌봄 노동자들이 얼마나 대우가 나쁜지에 대한 것이 한 번 더 사회적으로 인식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복지부는 특히 돌봄을 많이 담당하고 있어서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나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 투입이 쉽지는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기상 위원 저희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장관님들께 뭐라 말씀드리면 장관님들은 가서 관료분들께 지시하실 텐데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 일이 많아서 힘들다는 애

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필요한 얘기만 또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 정당에서도 당직자들이 일을 하시는데 너무나 많은 TF와 대책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니까, 사람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런데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로 같아요. 특히 장관님들 그다음에 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다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은 극히 조금이라는 걸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충북 충주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이종배 위원입니다.

저는 경제부총리님하고 산업부장관님 위주로 말씀 나누도록 할 테니까 다른 분들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지난주에 MOU 또 JFS 다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들 다 많이 하셨는데 왜 안 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막판에……

○이종배 위원 그 막판 얘기가 벌써 지난주에도 막판이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은 됐는데 미국에서 좀……

○이종배 위원 미국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안 됐어요?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국민들이 실망하고 또 불안해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뭐가 안 됐습니까? 미국 측에 뭐가 안 됐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직 논의 중이라 가지고요.

○이종배 위원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논의 중에 있어 가지고요.

○이종배 위원 논의 중도 아닌 것 같고 미국에다 그냥 맡겨 놓고 미국에서 됐다 그러면 서명하고 그러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하여튼 상대방이 있는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

○이종배 위원 글썄, 문제는 원잠 얘기 나오던데, 다른 건 다 됐고…… 경제 쪽은 다 됐다는 것 아니에요, 안보 쪽이 안 됐고? 잘 모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 부분조차도 제가 말씀드리기가……

○이종배 위원 다 얘기들을 했는데, 언론에도 그렇게 브리핑하고 다 그랬는데요, 안보 실장도 얘기했고.

산업부장관님, 그렇게 들으셨지요? 언론에서 보셨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경제 쪽은 다 된 거예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다 마무리가 됐고 안보 쪽의 일부 의견을 놓고 미국 내에서 의견 조율을 하는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잠수함을 한국에서 만드느냐 미국에서 만드느냐 그 문제인가요, 아니면 한국에 핵연료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그런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 분야는 제가 답변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알고는 있는데?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또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

○이종배 위원 그거 언제 가능합니까, 언제? 이번 주에는 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미국 측의 어떤 조율된 의견이 오면 이른 시일 내에 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지난주에 할 때보다 좀 더 애매하게 답변하시네요. 지난주에는 거의 다, 이번 주에 거의 된다 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른 시간 이렇게 하니까 조금 멀리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아마 미국이 지금 정부가 섰다운되어 있는 것도 보니까 영향이 좀 있다 해 가지고……

○이종배 위원 섰다운 뭐 이게 금방 풀리겠어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래서 절차가 좀 더 늦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면 재판하는 것도 영향을 미치나요, 미국 연방대법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 마지막까지 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관세협상 쟁점이 결국은 현금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 그거였거든요. 우리는 처음부터 5% 출자해야 된다고 그랬고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선불이다, 전체 다 현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1500억 불, 조선업을 제외한 나머지 2000억은 현금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다만 매년 연 200억 불을 상한으로 해서 한다. 200억 불은 우리가 외환수익금 가지고 어느 정도 감당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선, 마지막 마진인데 거기에서 합의가 된 것 같은데요.

결국 1500억 제외한 나머지는 미국 의견이 관철된 거 아닌가. 우리가 한 건 연 할부로 이렇게 나눈 거다, 연 할부도 미국에서는 250억 불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200억 불로 줄였다, 뭐 이 정도에서 정리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미국……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니고요. 투자 분야라든지 그리고 그 결정되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우리 한국의 매니저가 참여한 거라든지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라든지 내용들이……

○이종배 위원 MOU에 다 담기나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담겨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MOU에.

수익 분배를 하는데 우리가 원리금 회수 전까지는 5 대 5, 그 이후에는 9 대 1, 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참 아쉽더라고요. 우리가 투자해 놓고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데 일본도 동의를 하니까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일본에는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는 5500억 불 중에서 현금은 1~2%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정관 장관님, 우리나라에서 아카자와 경제산업대신 만나셨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이종배 위원 그래서 그 아카자와 대신은 실제 투자는 1~2% 정도로 전망하고 있고 투자 시 실제 비율 결정은 일본에서 한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런 걸로 봐서, 우리는 현금 2000억 불 해야 되는 걸로 봐서 이걸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MOU가 공개되면 알겠지만 일본하고 저희하고 현금 투자 방법은 똑같습니다. 일본의 5500억 불도 현금 투자가 맞고요, 저희 2000억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일본은 국내법 존중하는 게 MOU 21조에 들어가 있던데.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저희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우리 국내법 존중하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이종배 위원 우리는 특별법 만드는 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대미 투자 관련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보낼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저희하고 국내법이 우선한다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공개가 되면 일본의 5500억 불 현금 투자 내용하고 우리나라 2000억 불 투자 내용이……

○이종배 위원 똑같아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똑같다는 내용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종배 위원 확실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확실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이게 아카자와 대신이 말을 자기 입장에서 한 건가요, 1~2% 현금 얘기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런 내용들은, 아카자와 대신께서 하신 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데요. MOU나, 미국 측이나 저희나 이해는, MOU상에는 저희하고 일본하고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똑같다 이런 말씀이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이종배 위원 일본에서는 이익이 있는 곳에 투자하는 걸로 심사를, 타당성·사업성 또 투자 규모까지 심사를 자기들이 해서 거기에 합당해야 투자를 하는 것이 국내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렇게 설명이 됐는데요. 우리도 똑같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저희도 똑같고 저희는 거기에 한발 조금 더 나아가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말이 일본 MOU에는 안 나오는데 저희는 아예 그 MOU상에도 지금 저희들이 삽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요? 이것 좀 애매한 단어는 다 넣었네요, 용어는. 우리가 유리한 쪽

으로 잘 해석해서 운용만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일본은 자기들이 유리한 쪽에다 투자하고 우리는 리스크가 큰 데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이종배 위원 자동차를, 일본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한미 FTA 그것도 문제지만 소급 적용 문제, 일본은 8월 7일 날 소급 적용하는데 우리는 이게 빨리해도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8월 7일로 소급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젠?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미 투자 협력법이 지금, 저희들은 그게 국회를 통과해야 운용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하는 방식은 EU와 같이 유사한 방식으로, EU도 관세 관련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을 때 그 달의 1월 1일로 소급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종배 위원 우리도 일본 같은 형태로 가자고 그러면 안 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는 관련되는 입법 사항이 필요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하여간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보고.

반도체는 당초에 우리가 최혜국 대우를 받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 APEC 때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 이렇게 했고 또 미국 상무장관은 ‘이번에는 거기에 반도체는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 어떤 것이 맞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대만과 유사, 저희 반도체는 대만이 가장 큰 경쟁 상대국이고 해서 대만과 유사한 수준의 대우를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만이 지금 현재 미국과 관세 협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 결과에 따라서 같은 대우를 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종배 위원 일본보다 더 불리할 수도 있고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건 대만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최혜국 대우 받는 건 아니네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러니까 저희는 일본보다, 일본은 저희하고 반도체 분야에서……

○이종배 위원 일본은 15%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하고 경쟁 관계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종배 위원 앞으로는 모르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앞으로는 물론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만하고의 대우를 유사하게 가져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반도체 쪽에서는 우리가 최혜국 대우를 계속 요구를 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회가 닿으면 또 얘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이종배 위원 경제부총리님, 내년 예산이 728조지요? 금년보다 8.1% 늘었지요, 당초 예산 대비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이종배 위원 (영장자료를 보며)

국가채무 발행액이 25년도에 비해서 141.8조 늘고 그래서 1415.2조, 1400조가 넘어간 게 처음입니다. 그렇지요? 국가채무 비율이 3.5% 늘어서 51.6%. 50% 넘는 것도 처음이고 한 해에 이렇게 3.5%씩 뛰는 것도 아마 처음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채무라는 건 누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종배 위원 아니, 이렇게 뛰는 것도 그렇고, 채무 비율이 2019년도에 35.4%였는데 51.6% 내년엔 뛰면 16.2%나 뛰는 거예요, 7년 만에. 19년도에는 그때 차관 아니에요? 차관 하셨지요, 2차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이종배 위원 그때는 그렇게 잘 잡다가 장관 하더니 왜 이렇게 확 올립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닙니다. 이게 지금은 위원님, 지난 정부는 2.7% 이렇게 낮춰도 결론적으로 거의 한 4%까지 갔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우리 경제는 전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재정을 좀 줄여 가지고 전환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결국은 또 더……

○이종배 위원 글썄, 그렇게 해 가지고 잘 풀리면, 경제도 풀리고 잘 풀리면 되는데 보면 현금성, 소모성 현금 지급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도 보면. 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관리재정수지가 4.2%, 2018년도에 -0.5%였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이종배 위원 D2 외국과 한번 비교를 해서, 20년에서 25년 비교를 해 보니까 OECD 평균이 20년에서 25년은 12% 떨어졌어요. 이게 20년도 그때는 코로나 그런 것 때문에 그랬고 다른 나라들은 많이 줄였거든요. 12% 줄였는데 한국은 7.5%가 늘었어요, 20년하고 25년 비교해 보면.

부채 비율 상승폭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5위던데 앞에 있는 나라들이 싱가포르, 홍콩이라든지 핀란드, 뉴질랜드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재정 규모가 작기도 하고 도시국가들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나라가 1위다. 재정부채 증가율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관심 갖고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가계·기업 부채도 급증하다 보니까, 국가 총부채가 19년도 대비해서 25년도 보니까 G20 국가 중에서 압도적 1위,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1위예요. 우리 이러면 부채국가 되잖아요. 이게 정부부채만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가계·기업 부채 이래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경제부총리님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D1도, 이렇게 확장재정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확장재정이 계속되고 또 대미 투자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대미 투자도 해야 되고 또 저출산·고령화 이런 것 때문에 의무지출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요. 또 산업 공동화도 생긴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고, 지자체도 이번에 채무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바꿔 줬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자체도 늘어나고.

D1이 지자체까지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D1이 급등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

각 안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조언, 우려 말씀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하여튼 정부로서는 재정, 예산,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내고 하는 그런 쪽의 정책……

○이종배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어쨌든 걱정이 많이 되니까 몇 가지 더 짚어 볼게요.

국채이자 계속 불어나 가지고 내년도에는 36.4조,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 맞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33.6조로 저는……

○이종배 위원 36.4조.

예산실장, 맞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이종배 위원 29년도에는 44조 7000억, 44.7조. 40년도에는 250조, KDI에서 전망한 것 250조입니다.

SOC 예산이 한 해, 내년도에 얼마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SOC 예산이 내년도에 한 이십……

○이종배 위원 28조? 26? 얼마지요? 그 정도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이종배 위원 어쨌든 36.4조, 우리가 국채이자 안 두면 SOC를 팍 늘릴 수도 있는데 그거 아쉽잖아요.

국채 만기 도래일을 보니까 우리가 금년도에 상환 국채 원리금이 138조, 신규 발행 국채가 263.8조, 차환율이 191%입니다. 향후 5년간 매년 150조를 상환하고 새로 270조 빚을 내고 있는데 이런 구조적 적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 나갈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래서 저희들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아서 이번에 재정을 늘리면서도 주로 산업 그다음에 R&D 그다음에 콘텐츠 그런 쪽으로 많이 늘렸다는 것을……

○이종배 위원 아니, 그것도 늘기는 했지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런 쪽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기본소득이나 민생회복지원금, 지방의 선심성 사업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것을 다 줄여서, 이 비효율적인 현금성 사업 줄이고 과감하게 축소하고 재정준칙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재정준칙……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전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차관 할 때 재정준칙 만든다고 그때 그러셨잖아요. 왜 안 만들어요? 왜 노력을 안 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실행으로, 행동으로 옮기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의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저는 제 질의시간의 일부만 사용하겠습니다.

예산 증액과 감액 관련해서 의견을 구두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청년미래적금 예산 7446억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국감 때부터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데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재부장관님하고 금융위원장님이 들어 주시면 좋을 텐데요.

이 문제 지적 중에 가장 아픈 부분은 이게 국가재정이 7400억 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되거나 메리트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비슷한 이름으로 비슷한 사업이 계속 등장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는 청년희망적금이었고 윤석열 정부 때는 청년도약계좌였고 이번에는 청년미래적금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청년들 자산 형성 도와주는 정책 중에서 내일채움공제 말고는 사실상 호응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 때는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시혜적으로 정책을 짤 것이 아니라 정책 수혜자인 청년들의 입장이나 청년들의 시각에서 좀 바라보고 짜야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시면 이 청년미래적금이 월 최대 50만 원씩 불입을 합니다, 3년 만기로. 그것 넣으면 정부가 원금의 6%를 재정으로 붙여 주고요 이자를 비과세 해 준다는 겁니다, 일반형 기준으로.

그런데 이자율을 아직 미정이니깐 연 5%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청년의 입장에서 3년 동안 원금은 1년에 600만 원씩 3년이니까 1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3년 후 만기 깨고 수령하는 돈은 2062만 원. 그러면 3년 동안 수익금이 얼마냐면 262만 원입니다, 이자랑 정부 지원금 다 합쳐 가지고. 수익률로 따지면 1년이 아니라 3년 누적수익률이 14.5%인 거예요.

이 정도면 금융상품으로서 어떤 이점이 있다고 하기에 부족하지요. 특히 요즘 같은 자산시장 상승기에 이런 상품에 가입하면 오히려 다른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이 또 청년도약계좌처럼 청년들한테 인기가 별로 없어서 불용이 생길 수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되고요.

대안을 하나 제시하자면 청년형 ISA 계좌를 만드는 것으로 이 사업을 개편했으면 합니다.

아마 다들 아실 텐데 ISA 계좌가 청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혜택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국가재정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 계좌에서 다양한 상품을 골라 담아서 투자할 수 있고요, 거기서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 200만 원은 일단 공제를 해 주고 나머지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9.9% 저율 과세를 적용해 주는 계좌거든요.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는 것도 아닌데 불티나게 가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의 선택지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미래적금이라는 게 청년들을 위한 정책인데 지금 특히 청년들은 작은 돈이

라도 여윌돈이 있으면 금융시장에 참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적금보다는 더 나은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게 당연한 시기고요, 자산 유지보다는 자산 증식이 필요한 나이기 때문에 정부가 굳이 적금이라는 형태의 안전자산 보유를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청년들의 욕구나 판단을 인정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ISA 일반형이 연 2000만 원 한도로 납입을 하고 이자·배당 소득에서 200만 원을 공제한 다음에 9.9% 저율 과세하는 거고요. ISA의 서민형하고 농어민형은 2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을 공제해 주게 돼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혜택이 좋은 청년형 ISA 계좌를 이것 대신에, 이것을 변경해서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대상의 연령층, 그러니까 19~34세 청년 중에서 일정 소득 이하이거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이 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한도는 동일하게 연간 최대 200만 원씩 불입할 수 있게 하고 이자·배당 소득은 완전 비과세를 해 주거나 또는 그게 어렵다면 공제 금액을 서민형인 400만 원보다 더 높게, 600만 원이나 700만 원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청년들한테는 지금 이미 ISA 일반형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청년을 위한 ISA 계좌가 나오고 공제 한도가 매우 늘어나고 비과세가 확대된다고 하면 아주 각광받는 자산 형성 계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청년미래적금도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 지출 규모는 일부 늘어나겠지만 또 아주 큰 규모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부분은 아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 내용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을 같이 검토해 보면 좋겠고요. 소위 심사 때 더 자세하게 의견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처음 발견되고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파트가 이번에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갔는데 에너지가 다 넘어간 게 아니라 그중에 자원 파트는 산업부에 남는다고 하면서 가스, 석유, 석탄 이런 1차 에너지가 자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산업부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1차 에너지를 태워서 전기나 열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실제로 사용을 하는 건데, 전기나 열에 대한 정책은 이제 기후에너지부가 하고 가스 공급사업은 산업부가 계속하니까 지금 예산안을 보면 사업이 다 엉켜 있습니다.

단적으로 산업부 소관 예산 중에서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 있고 도시가스 공급배관 사업, 열을 공급하는, 도시가스가 소외된 지역에 가스배관을 설치하거나 가스탱크를 설치해서 공급하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사업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오래된 논의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가구 수가 적은 도시가스 소외 지역이나 격오지 같은 마을에서 배관을 통해서 가스를 공급하지 않고 지열이나 태양열 같은 분산형 재생에너지로 열을 공급한다거나 또는 열을 전기화해서 전기로 공급하는 방식, 히트펌프나 인덕션을 활용하는 방식이지요. 전기화 방식, 분산형 방식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재생열 공급, 분산형·전기화 열 공급하고 가스배관 설치 사업은 병렬적인 선택지에 해당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관 부처가 앞으로는 2개로 나뉘면서 중복될 수도 있고 또는 굉장히 방향성에 혼선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사업들을 완전히 중단하거나 100% 내용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2개의 부처에서 한 부처는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통한 열 공급 사업, 한 부처는 그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가스배관망 연결 사업 이런 것들을 분절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중복이나 이런 것들을 방향 전환의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산업부 소관의 도시가스 공급배관 사업, 124억 원짜리 예산인데 요 이것 중의 20%든 30%든 50%든…… 지금 이 내용이 27개의 배관을 깔고 135개 가구에 가스설비를 설치해 주는 예산인데 이 중의 일부라도 재생열 공급 사업으로 전환해서 수요 지역의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LPG 배관망 구축사업, 이것 515억짜리 사업인데 8개 시도, 33개 읍면에 가스 저장 탱크 설치해 준다는 겁니다. 이것도 가스 저장 탱크 설치하지 않고도 공동 지열 시설을 만든다거나 건물 위에 태양열 시설을 올리는 방식으로 동일한 열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30%든 50%든 일부를 그렇게 전환해서 이 예산을 조리 있게 재편성할 수 있는 심사가 이번 예산심사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같은 맥락인데 최근에 기후에너지부가 석탄발전소의 암모니아 혼소발전하는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그러니까 중단하겠다고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것이 알려지고 있는데 석탄발전소에서 암모니아 혼소 하는 것을 만약에 앞으로 하지 않게 되면 지금 산업부 소위 그 자원, 석유공사에서 하고 있는 암모니아 터미널을 만드는 사업 그리고 해외 암모니아를 도입하기 위한 이런 구축 사업들도 계속 추진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도 이번에 정리가 되고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후부와 산업부의 1차 에너지, 2차 에너지 이 업무가 분장되면서 정리되지 않은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석탄발전소 외의 다른 용도만 가지고도 충분한 사업성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토해 가지고 상황 변화가 생겼고 이제 수요의 변화로 인해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과감한 삭감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라는 질의를 하고……

7분이 남았는데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의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님, 과학기술정통부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근거하여 매년 17개 광역시·도의 R&D 투자 역량 및 성과 분석에 대한 기초통계를 조사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통계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금년 2월 발표한 2024년 지역 R&D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17개 광역시·도별 매칭비를 포함한 국가 R&D 사업 투자액에서 규모를 살펴보니 까요 대전·서울·경기 순으로 국가 R&D 사업 투자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전이 25.9%, 8.7조 원. 서울은 18.6%인 6.2조 원. 경기도는 14.5%인 4.9조 원을 차지해 세 지역이 전국 투자 규모의 절반 이상, 무려 5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분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중에 전남은 중앙정부 투자비가 4270억 원으로 전체 29조 9564억 원의 1.4%에 불과합니다. 제주의 2108억의 17위보다 한 단계 위인 1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남이 중앙정부의 국가 R&D 사업 투자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따로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원 위원 현재 전남에는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형 연구시설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아마 이렇기 때문에 R&D 투자 금액도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빈익빈 부익부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데, 저는 R&D도 국가 균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불균형이 불균형 발전을 심화시키고 지역 차별로 이어지는 것 그리고 이것들은 결국 지방 소멸에도 좋지 않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R&D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생각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책 마련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역의 균등 R&D 발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R&D 과제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AX 과제들 그리고 관련된 영재학교 그리고 학교들 이런 전반적인 측면에서 균등 발전을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계원 위원 관심 가져 주시고요, 그것 관련해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계속해서,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내세우며 국가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시고요.

그런데 사이버 보안 대책이 지금 보면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화면에 2025년도 주요 사이버 보안 침해 사고 현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금년 2월 달에 GS리테일 침해 사고에서 SKT 침해 사고, KT 무단 소액결제 그리고 롯데카드 정보 유출 그리고 가장 최근에 LG유플러스의 침해 사고 등 해킹 사고가 연중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국민의 불안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서 국가의 주요 통신망과 국민들의 개인정보, 금융정보까지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

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사이버 공격은 날로 지능화되고 복잡화되고 또 AI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연결성이 확대되어 공격 범위와 피해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당면 현실에 대해서 기존의 해킹, 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는 부족하고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정보보안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동의합니다.

○**조계원 위원** 그래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보겠다는 정부 차원의 의지지만 이게 더욱더 강화돼야 될 것 같고, 특히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확보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지금 중소기업을 보니까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침해 사고 신고 건수를 보면 전체 대비 중소기업이 81%, 1428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소기업 보안 역량의 확보가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번에 발표한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이 10월 22일 날 발표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세워졌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관련된 예산 신청하고 특히 정보보호 공시에 있어서도 상장사 매출액 3000억 이상만 그동안에 정보보호 공시를 했었는데 그 이하 소규모 기업들도 정보보호 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런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필요 예산의 몇 %나 지금 반영돼 있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정보보호 예산 전체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조계원 위원** 이번의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지금 저희가 주요 증액 필요 내역으로 1341억을 얘기하고 있는, 논의드리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어느 정도 확정된 건가요, 어느 정도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지금 현재 반영된 것이 900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필요 증액에 대해서 1300억 정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보안 없이는 AI 강국도 사상누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대책은 그래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구원철 장관님도, 부총리님도 신경 써서 이걸 반영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충북 충주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과기부총리님, 과기부가 중요한데 이렇게 부총리가 된 것에 대해서 기대가 큼니다.

AI 내년도 예산이 10조 1000억이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이종배 위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사실 작년 대비 3배수가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인프라 비용은, 대부분 인프라 비용이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이 안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좀 적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앞으로 더 투자가 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사실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AI는 민간 투자를 많이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최근에 엔비디아와 26만 장의 GPU 협약 내용도 보면 정부가 5만 장의 GPU를 마중물 역할로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이런 만큼 사실 정부와 민간 간에 협업을 해 나가면서 같이 또 민간의 투자를 계속 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또 하나는 이번에 예산에도 포함이 됐기는 했지만 AI 인재 양성 그 부분이 참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들이 기회 닿으면 해외에 나가겠다는 게 40%, 청년들은 한 70%까지 외국으로 나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결국 그 사람들이 여기 국내에 있으면서 제대로 대우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기부에서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인재 양성이야 하겠지만 전체 사회 전반에서 우리가 과학기술인들을 우대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연구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잘 마련돼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해외 대비 우리나라가 그동안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안에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많이 됐기는 됐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양성해도 여기에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될 것이다. 경제부총리님도, 전체 국무위원님들이 다 관심 갖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이트칼라 이그젼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시는지 좀……

○**이종배 위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그걸 잘 모르시는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굳이 주 52시간 이런 거 규제하지 않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걸 과감하게 도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AI나 특히 최근 최첨단 분야에서 이런 어떤 노동시간을 제약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들이 다 이렇게 좀 분분합니다. 그리고 실제 AI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시간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보장들 그리고 지금의 정부에서 우리가 내놓고 있는 어떤 기조를 또 찬성하는 조직들도, 분위기도 있고……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면 과감하게 주장을 하세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잠깐만요.

원안위 위원장님,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이 두 번 다 재심의 보류가 됐는데, 그렇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게 정지된 때부터 10년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늦어지면 결국 만약 통과돼도 가동 기간이 10년 아니면 8년 정도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렇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것 빨리빨리 좀 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이 있으면 뭐가 부족하다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구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년 하잖아요, 20년?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미국은 20년쯤 될 겁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우리도 20년씩 이렇게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그거는 적절한 공론화 등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하고 또 그렇게 개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종배 위원** 그렇지요. 문제가 되는 것 있으면 빨리 종합적으로 지적을 해서 다음에는 이거 통과될 수 있도록……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고, 이게 정 보완이 안 된다고 그러면 할 수 없겠지만 보완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서 보완시키는 게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자꾸 이렇게 재심의, 재심의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운영하는 것도 이게 옳은 방향이 아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예, 저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서 확인이 되면 저희가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의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 안도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토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수도권 집값 잡기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안도걸 위원 그런데 참 아킬레스건이 지금 공급 부족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안도걸 위원 지난 정부에서 인허가 착공 물량이 급감하면서 그 후유증이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한계는 있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급 확대에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단기 공급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미분양 주택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수도권에만 해도 1만 5000채의 미분양 물량이 있거든요. 거기서 빨리 주인을 찾아주는 게 좀 필요할 것이고 또 그게 안 된다면 이것을 임대 물량으로 돌리는 그러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을 보장을 하면 매수 심리를 좀 높일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자. 그리고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는 시점에 있어서 이 물량을 리츠가 좀 흡수를 해서 양질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전용 리츠를 좀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도입에 박차를 좀 가해 주시고.

제가 부총리께 여쭙았는데 부총리께서도 리츠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각종 세제 지원을 검토하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미분양 주택 매입·임대 리츠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조만간에 이걸 활성화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윤철 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광주 AI컴퓨팅자원센터 관련해 가지고 고민 많이 해 주고 계시고 11월 6일 날 국무총리께서 답변 또 주셨어요. 정부 차원의 확실한 후속 조치와 신속한 이행계획 등을 속도감 있게 결과를 만들어 가시겠다 하셨고요. 저는 이게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이번 예산 심사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현재 검토되고 있는 대안들이 크게 네 가지 아니겠습니까?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를 설립을 할 필요가 있다. 국가 AI연구소도 설립이 돼야 된다. 그리고 현재 가동 중인 국가AI센터에 컴퓨팅 자원을 좀 확충도 하고 시설도 늘리고 또 거기 관련된 인력 프로그램도 좀 확충을 해 달라라는 거고. 또 국토부장관님께서도 관심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 조성으로 지정을 하고 관련된 실증사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관련된 사업들이 좀 구체적으로 대안으로 제시되고 또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금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어야만이 아마 광주시민들께서 정부의 어떤 약속을 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이 예산 조치 반영 계획에 대해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위원님이 주신 그 과제들에 대해서는 이번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토부장관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제 지역 현안인데요. 광주송정역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안도걸 **위원** 굉장히 민원이 지금 많습니다. 우리 국토부장관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주신 것도 광주시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광주송정역의 이용현황을 보면은 지난 20년간 수요가 14배가 늘었는데 좌석이랄까요 이용 편수는 1.6배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갭이 크거든요. 굉장히 불편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어떤 비즈니스 활동도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뭐 굳이 경부선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겠지만 해 본다면 결국에는 주말 운영 횟수 면에서도 지금 2.4배, 편중이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광주송정역 역사가 지금 너무 협소하고 불편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연면적을 보니까 대전역, 동대구역에 비해서…… 대전역은 3배, 동대구역은 5.4배입니다. 비슷한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렇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또 편의시설이에요. 편의시설이 지금 6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가면 느끼는 건데 무슨 카페 하나가 없고 또 지역 특산물 하나 선물로 살 수 있는 판매 공간이 없습니다. 이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역사 확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안도걸 **위원** 거기를 봤더니 면적은 한 2배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그것도 다른 데 비해서는 적습니다마는, 편의시설 딱 2개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공간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공무원 시설들이 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당초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직접 챙겨 주시고 그 설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송정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부족 문제도 그렇고 또 사업비가 부족한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살펴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리고 이번에 사업비를 증액해 주셨는데 이게 공사비가 늘어나 가지고 지난 3년 동안 공사가 다섯 번이나 유찰됐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유찰됐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 이유는 뭘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사업비 증액에 따른…… 그 액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공사비 부족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것 제가 봤더니요 공사비가 330억에서 390억, 60억이에요. 얼마든지 현실화돼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현실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을 끌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은 홀대 문제로 비쳐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한번 복기를 하시고 그것은 시정을 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잘 챙기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왕진 위원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과기부총리님께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호남 AI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방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광주는 이미 AI 집적단지 1단계로 인프라가 형성이 돼 있고요. 인재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또 기술 성숙도도 타 지역보다 아주 앞서서 현장 실증 또 상용화가 가능한 그런 단계입니다. 이를 더 심화시키는 과제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실증사업이겠지요. 마침 정부에서도 실증사업으로 6000억 예산을 반영해서 이미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광주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6000억 중에서 광주시 부담 1476억 원을 제외하고는 극히 일부만 광주 지역에 사업이 계속되고 대부분은 전국 공모 R&D로 설계돼 분산되기 때문에 속 빈 강정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다행히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AI실증밸리 조성 사업에서 광주를 우선 고려한다 이렇게 또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과기부총리님께서 분명하게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일단 국가 R&D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서 공모를 통해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적정성 검토 등의 과정에서 지역 연계성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광주 지역의 실증 조건화 등을 통해서 연계성 부분을 강화해서 검토할 생각입니다.

○서왕진 위원 사실은 1단계 사업 이후에 2단계 사업이 곧바로 잘 진행됐어야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 그 부분이 충분하게 잘 진척이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2단계 실증사업을 시행하는데 광주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연속성을 잘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부총리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주가 이렇게 인프라나 또 기업의 실증사업 성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면 전남에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이 이번에 결정이 사실상 됐고요. 또 SK하고 오픈AI가 추진 중인 AI데이터센터도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막강한 AI컴퓨팅

인프라가 형성되고 있고 당연히 전력과 용수 풍부하고요. 한전 또 에너지공대와 같은 관련 기관들도 상당히 결합돼 있어서 이렇게 광주와 전남의 두 강점들을 잘 활용해서 AI 기술 실증이나 서비스 또 사업화 역량이 축적된 광주 그다음에 AI 학습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인프라가 구축된 전남이 연계해서 학습, 추론 또 활용이라고 하는 전주기 AI 생태계를 구축할 기반을 갖추고 있을 수 있다, 갖추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특히 광주는 2019년에 1단계 사업을 하고 나서 160여 개 기업이 입주하는 등 정부의 초기 노력이 상당히 성과로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성과를 더 발전시키고 확산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부총리님, 광주·전남의 AI 생태계 구축을 국가전략사업으로 격상을 하고 호남에 구축되는 AI 인프라를 실증 서비스와 사업 확산 및 국가 AI 반도체 산업 발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어떤 국가적 노력을 좀 집중적으로 경주하는 것 이런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현재도 광주시와 협력해서 AI 반도체 실증 검증체계 구축 중이고요. 재정 소요하고 사업 여건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이와 관련해서 아까 안도걸 위원님도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몇 가지 과제들이 제안되고 있지요. 첫 번째로 광주에서 이미 형성된 기업의 컴퓨팅 자원 수요가 1단계 데이터센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고도화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에 대한 어떤 필요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경험이 축적되고 있는 AI 실증사업을 확대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 세 번째로 AI 연구원 설립과 인재 양성에 좀 박차를 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제안되고 있는데요.

이런 광주와 전남의 강점들 또 이미 준비돼 있는 경험들을 잘 결합해서 호남에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부총리님께서 좀 적극적 의지와 구상을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사실 광주·전남이 충분히 AI 시범도시, 실증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을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 저는 주질의에 이어서 벤처 투자 관련 질의를 경제부총리님, 중기부장관님, 금융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중기부장관님, 현재 퇴직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지금 현재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예, 0%입니다. 금지되어 있지요.

그러면 국민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김한규 위원 0.15%입니다. 대체투자가 15%까지 가능한데 그중에 지금 1%만 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연 40조 원 벤처 투자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비상장회사 출자도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연기금의 벤처 투자도 활성화돼야 되는데 혹시 정부가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지금 현재 관련 부처들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자금이 어쨌든 지금보다 굉장히 많아져야 하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경제부총리님, 67개 법정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 중의 1%만 벤처·스타트업계에 투자해도 한 10조 원 정도 됩니다. 현재 투자되고 있는 규모만큼이 새롭게 창출될 수 있는 건데요. 기금별로 설립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목적하고 관련된 산업이 있을 테니 해당 산업에 관련된 벤처·스타트업에 일정 비율을 투자하는 방안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 기금이라는 것이 아마 여유 재원이 얼마나 듀레이션이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좀 검토……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장기투자가 가능한 경우에 일정 비율, 제가 그래서 1%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금융위원장님, 내년 3월에 개인이 비상장회사에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BDC라고 부르지요—시행되는데요. 실제 증권업계의 준비 상황이 어떻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익원 지금 자산운용업계에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투자 대상이 초중기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비상장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 저도 정부위에 있을 때부터 논의를 했던 건데 문제는 제도가 도입돼도 실제로 증권회사가 상품을 출시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되니까 적시에 상품 출시돼서 유동성이 풍부하게 추가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이익원 예.

○김한규 위원 공정거래위원장님,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CVC가 허용이 됩니다. 물론 100% 지분 보유라는 제한은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은 괜찮습니다만 투자금 조성할 때 외부 자금을 40%만 받게 돼 있는 이 부분은 꼭 그래야 되는지 의문이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주력 기업들이 자기 수익을 사내유보로 쌓아 놓지 말고 그것을 벤처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데 활용해라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40%를 넘어서 이게 50% 이상이 되면 CVC가 투자한 펀드가 연결재무제표에

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업집단의 회계 투명성이 불투명해지고 그리고 금융 부실과 산업자본……

○**김한규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요. 두 번째 부분은 회계상 착시 효과가 있어서 생기는 문제일 수는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기업 사내유보를 안 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진지하게 예외를 좀 더 둘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한 가지만 추가드리면……

○**김한규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김한규 위원** 중기부장관님, 스타트업 파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 지역 창업자들이 다른 창업자하고 투자자들하고 같은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2024년에는 공모로 부산 한 곳을 지정했고 2025년에는 예산 배정하지 않았습시다. 중기부가 올해 처음에 내년도 예산안 준비할 때 3개 지역을 공모하겠다고 기재부에 예산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갖고 온 예산안을 봤더니 공모가 아니라 특정 지역을 2개를 배정해서 갖고 왔습니다. 왜 그렇게 바뀐 겁니까? 기재부의 요청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지금 이 부분은 그냥 지역에 스타트업 파크가 신속하게……

○**김한규 위원** 기재부의 요청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조정할 수 있도록……

○**김한규 위원** 기재부의 요청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한규 위원** 기재부장관님, 절차도 이상했는데요. 답을 못 하시잖아요. 기재부의 요청이지요?

이 자료를 보시면 기재부가 예년에는 공모로 했던 걸 갑자기 특정 지역을 지정하겠다고 하면서 7월 22일 날 자료를 내게 하고 3일 만에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보통 공모라면 4주 정도 지자체들이 자료 준비하는데. 그런데 왜 기재부가 갑자기 공모사업을 지역 2개를 특정해서 이 사업으로 바꾸게 됩니까? 기재부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혹시 제주도가 기재부에 밀보인 게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니……

○**김한규 위원** 아니면 혹시 제가 사회적 예의를 안 지켰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닙니다.

○**김한규 위원** 미리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것은 전연 아니고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건 아니지요?

저는 제주도가 선정 안 돼서 사실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예년에 2등이었는데 갑자기 제주도를 배제하고 3·4등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주도 선정 안 돼도 좋습니다. 저는 공모를 하는 게 원칙이지 이렇게 특정 지역을 기재부가 딱 지정을 해서 각 부처의 권한을 뺏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게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광역 지자체에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기로 한 사업이니까 언제든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명하게 돼야 되고 기재부가 다른 부처의 권한을 뺏지 말아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서울 서초갑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번에는 부총리께는 안 여쭙고요. 국토부장관, 금융위원장, 해수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이번 예결위와 국감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과정에서 9월 통계가 아닌 8월 통계를 활용한 문제에 대해서 통계 비틀기다, 통계 왜곡이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장관님, 이번 10·15 대책에서 경기도 화성시와 광주시가 제외된 이유는 뭔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러니까 일단 정량적 평가가 있고 정성적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은희 위원** 한국 부동산 자료를 보면요. 6·7·8월 화성시와 광주시 주택 가격 상승률은 각각 0.44%, 0.4%, 경기도 평균 물가상승률 0.25%의 1.3배를 훨씬 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정량 요건을 충분히 충족했음에도 이 두 지역을 제외했거든요. 어느 지역은 넣고 어느 지역은 빼고, 이게 엇장수 마음대로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건 아니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지역으로 묶을 때 그 조건은 정량적 조건과 정성적 조건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정량적 조건으로는 충족이 된다고 하지만 정성적인 정무적 판단을 해 봤을 때……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정무적인 거지요. 엇쟁이 마음대로지요.

그리고 또 하나 더요. 앞으로 특정 지역만 예외를 뒀을 때는 정무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외를 둔 데는 보시면 동탄 역세권인 오산동에는요, GTX-A 동탄역이지요.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 2층 물건의 실거래가가 지난달 21일 16억 9000만 원 최고가에 계약돼 가지고요, 지금은 매도 호가가 18억 5000만 원으로 2주만에 2억 원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는요 규제 지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나서 3주 연속 상승 불량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조은희 위원 그걸 왜 그렇게 태연하게 ‘예’라고 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부 지역에서, 지금 화성·구리 지역에서……

○조은희 위원 그렇게 불평등하게 고무줄 잣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장관님 안 계실 때 제가 차관한테 물어봤어요. 목동하고 여의도에서 주민들이 물어 보니까 지자체, 양천구청장에 물어보라고 그러고 양천구청장은 또 20일 국토부에서 회신 해 달라고 그러니까 3주 동안 회신도 없고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은 언제 마련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곧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리고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해수부장관입니다.

○조은희 위원 출마설이 자꾸 언론에 보도되길래 제가 해수부를 잘 부탁한다 했더니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라 하셨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12월 9일부터 2주간 울릉도와 육지를 잇는 여객선 5개 노선이 모두 끊길 위기가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여객선 공영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끊길 위기에 지금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것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 안 하시게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저희가 경상북도하고 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니까 걱정 더 안 하게 해 주시라고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금융위원장님, 제가 빚투도 레버리지 일종이라고 한 부위원장님에 대해서 발언이 적절하냐고 여쭙니까 일반론적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금투협 보도자료를 보면요 미래에셋증권이 대형주 10개의 신용대출을 중단했고 또 4일에는 한국투자증권도 신용대출 불가 주요 종목을 지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신용거래 잔고가요 25억 8000……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주 역대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런데도 일반론적입니까?

○금융위원장 이익원 말씀하신 대로 10월 17일 날 저희들이 금투협·거래소 보도자료를 통해서 신용융자를 통한 투자는 면밀한 투자 판단, 위험에 대한 명확한 인식 등이 선행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리스크 관리 부분도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 했고요.

차관이 얘기한 것은 제가 듣기로는 이걸 권유한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리스크 관리, 감당할 수 있는 여력 내에서 그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했는데……

○조은희 위원 금융위원장님, 아직도 지금 부위원장님 옹호하고 계시는데요.

○금융위원장 이익원 말씀하신……

○조은희 위원 그때 코스피 5000, 6000, 7000까지 간다고 빗투를 권장했는데 그걸 일반론적이라고 변명하시면……

○금융위원장 이익원 권장은 아닌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위공직자가 발언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점은 제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노동부장관님이 안 계시니까 차관님하고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차관입니다.

○조배숙 위원 그다음에 국가데이터처장님.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예, 여기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노동부차관님이 먼저……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에 시행이 되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맞습니다.

○조배숙 위원 이게 노동현장과 고용시장에 아주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조배숙 위원 준비가 너무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요. 기업들은 파업이나 단체 행동이라는 손실 때문에 채용과 투자에 신중할 수밖에 없어서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이런 쪽은 정규 채용을 기피하고 계약직, 아르바이트 그다음에 외주 인력 이렇게 해서 결국은 청년일자리 축소가 되는 겁니다. 청년의 신규 채용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 통계를 보시면……

통계를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통계를 보면 최근에 고용률이 9월 기준으로 해서 45.1%인데 17개월 연속 하락세고요 또 실업률은 상승했습니다. 통계에 지금 실업률이 4년 연속 계속 하락했다가 올해 들어서 다시 실업률이 올라가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게 잘못하면 청년세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입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청년 고용의 문제 이거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의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노란봉투법이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용자 개념은 이제 확장했잖아요, 간주 사용자로. 그런데 원래 한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을 때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한다 해서 그 규정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이거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원청 있고 하청이 얹혀 있단 말이야, 다단계 구조로. 그런데 하청근로자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때 그러면 원청 소속 노조와 하청 노조가 어떤 방식으로 교섭창구를 구성해야 되

는지 여기 굉장히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제가 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데이터처장님한테 또 중요한 게……

데이터처장님, 지난번에 인구주택조사에 동성 배우자 추가했지요?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배우자라는 항목에 동성 배우자라고 하는 게 가능한가요? 제가 보니까 지난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조사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이 답변은 지금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거 보시지요.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적 결합을 기초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배우자라는 정의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했냐면 배우자는 혼인에 의해 결합한 남녀를 의미하며 배우자 관계는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에 의해 발생한다. 그리고 대법원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우리 법제가 상정하는 배우자는 이성 간 결합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배우자라는 것을 우리 헌법·민법에서는 이성 간으로 한정을 해 왔는데 어떻게 국가데이터처에서 인구조사를 하면서 동성 간 배우자 이런 항목을 두어서 하십니까? 이거는 헌법과 법률 위반 아닌가요?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저희가 정책적으로 판단한 건 아니고요. 과거에 동성 배우자 항목을 열어 주지 않았을 때 저희가 마킹을 못 해 가지고 그대로 조사를 포기한 경우가 많아서……

○조배숙 위원 그러면 비혼 동거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러시면 돼요. 비혼 동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왜 헌법을 위반합니까?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저희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다기보다는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배숙 위원 그게 본인들이 생각한다고 해서 됩니까, 분명히 헌법과 법률이 있는데?

이거 하시면서 법률 자문 구하셨어요?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지금 법률 자문 받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법률 자문에서 이런 얘기 합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결과가 나오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배우자라 함은 헌법적·법률적으로 분명히 규정이 돼 있고 거기 틀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위배하면서 이런 조사를 하시면 됩니까? 이거는 직권남용이지요.

자, 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우려가 있지만 사실은 노조법 2·3조가 원·하청 간의 격차를 해소해서…… 위원님 잘 아시지만 지금 대기업 정규직과 하청 근로자들의 격차가 크다 보니까 청년들이 대개 일자리에 있어서 편재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줄여 나가는 취지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창구 단일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노동계, 경영계 그다음에 전문가 TF에서 수십 차례 회의를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할지 그 방안을 거의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이 마련되면 위원님께도 설명드리고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저희들 걱정은 아주 다단계로 얹혀 있잖아요, 특히 자동차나 이런 경우는. 그다음에 조선산업 이게 백몇 개가 넘는단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원청에서 감당을 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일부 현장에서 우려되는데 위원님, 노조가 수백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조선업에 노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질서를 만들어서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너무 낙관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개혁신당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경제부총리님 그리고 국토부장관님도 같이 들어 주십시오.

제가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예산을 짤 때 불요불급한 예산을 잘 구조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사실 정부예산을 집행하고 또 평가할 때 보면 이미 들어간 예산이나 투자한 비용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 내지는 어떤 일정 부분이 제때 집행이 안 되거나 뭔가 걸림돌이 생겨 가지고 이게 매몰비용처럼 낭비가 되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중에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경전선 전철화 사업 관련한 문제입니다.

경전선, 그러니까 광주-부산 그다음에 목포-부산 구간이 지금은 디젤 열차, 그러니까 무궁화·새마을호만 다닐 수 있는 구간이지요. 요즘 그런 구간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철화를 해야겠다고 해서 이미 목포에서 부산까지는 특정 일부 구간만 빼고는 사실은 전철화가 거의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미 기투자된 게 1조 6459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순천 구간과 관련해서, 순천 구간이 도심 구간을 통과하다 보니까 지중화가 필요하고 이 지중화에 있어서 지금 예산집행이 신속하게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다시 타당성재조사를 한다라고 기재부에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게 지중화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다른 구간에 이미 설비투자 1조 6000억 이상이 된 것뿐만 아니라 지중화에 대한 설계용역 비용도 100억 원이 투입이 돼서 이미 설계가 완료된 단계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미 다

른 구간이 사실 거의 다 됐고 이 구간도 지중화를 하기로 설계까지 해서 다 완료가 된 상황인데 순천 구간 지중화를 미루게 되면 나머지 구간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순천 구간이 덜 되어도 나머지 구간만이라도 그러면 KTX가 좀 다닐 수 있는 거냐, 중간에 잠깐 이렇게 갈아타고 해서라도 다닐 수 있는 거냐 했는데 그것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전체 구간이 되어야지 KTX가 다니는 거지 나머지 구간이 다 되어도 중간에 한 구간만 전철화가 덜 되면 계속 해서 지금처럼 무궁화호나 새마을호밖에 못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국토부장관님, 제 말이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천하람 위원 물론 지중화하다 보면 예산이 좀 늘어나고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기는 있겠지만 이게 일정 구간에, 이렇게 10분의 1도 안 되는 이 부분 때문에 전체 구간의 비용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장기간 낭비되는 것은 저는 막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걱정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 순천 구간 지중화를 결정한 게 사실 지난 정부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지중화를 결정하고 설계도 진행을 하고 다 해서 전체 구간을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진행을 해 왔는데 혹시 정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미 결정되고 설계까지 완성된 것이 결론이 바뀌는 게 아닌가. 그래서 또 이것은 어마어마한 비효율과 낭비가 초래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부총리님, 그러니까 이 부분 어쨌든 전체적인, 제가 이 타당성재조사 관련한 규정도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지나친 낭비가 초래되거나 매몰비용이 초래되거나 아니면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일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안 해도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또 이게 타당성재조사 같은 경우에 하게 되면 사업 진행을 멈춰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재검토 정도로만 해서 진행하는 방법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일정 구간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 부총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알고요. 지금 나머지 구간은 완료가 되고 이게 빨리 되어야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매몰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안 그래도 실무자들과 이야기해 보니까 지금 총사업비가 한 37.5% 정도 증가되는데 15% 증가되면 이게 타재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 적정성에 준하는 속도로 그 속도를 높일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굉장히……

○천하람 위원 그런데 이게 속도를 빨리해도 결국 타당성재조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스톱이 되는 문제, 멈추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이채명 정부에서 4 곱하기 4로…… 사실 지금 우리 철도 체계가 종으로는 잘되어 있지요, 서울과 지역을 연결하는 게 있는데 횡으로 되는 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 곱하기 4로 축을 잇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균형발전 공약인데 여기서 축 하나를 거의 다 이어 놓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서 타당성재조사로 멈추게 된다면 이것은 엄청난 비효율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좀 적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총리님도 그렇고 국토부장관님도 그렇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의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 보건복지부장관님, 중국인의 건강보험료 적자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고요. 그때 최근에 흑자로 전환됐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임종득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우려와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중국인만이 아니라 모든 외국인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해 오고……

○임종득 위원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일반화시킬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항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말씀대로 24년에 흑자로 전환된 게 맞습니다. 그러나 누적적자가 4318억 원에 달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55억 흑자를 봤다고 해서 위안을 삼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21년도부터 24년까지 중국 관련해서 흑자를 기록한 해가 몇 번 있었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임종득 위원 두 번 있습니다. 2016년에 한 번 있었고요, 이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쇼핑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24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국인 체류 조건을 강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개월 하던 것을 6개월로 강화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이것은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임종득 위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진료비 1000만 원 이상 고액 먹튀를 파악해 보니까 중국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고액 먹튀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말씀 주시지요.

○임종득 위원 아니에요, 있어요. 6개월 이내에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진료를 받고 30일 이내에 출국한 경우를 고액 먹튀라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임종득 위원 슬라이드 올려 주시지요.

저기 보시는 바와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111명이 먹튀를 했

는데 그중에 45명이 중국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인은 중국에서 근로자가 아닐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임종득 위원 그런데 중국인은 근로자가 아니어도 한국에서 혜택을 받지요? 알고 계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것은 그 나라의 건강보험제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종득 위원 아니, 그것은 상호주의 원칙에서 봐야 될 부분들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별로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종득 위원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상호주의 원칙에서 제도를 보완해야 될 시점이다, 지금. 이것을 한번 검토를 장관님이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 해당 법도 개정안이 나와 있어서요 아마 국회에서 다양하게 검토하실 거고 정부도 검토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임종득 위원 다음은 공정거래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임종득 위원 배달 플랫폼 사용해 보셨습니까, 배달 플랫폼?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임종득 위원 요즘 배달 플랫폼 광고 중에 가장 핫한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우측 보세요.

무료배달입니다.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임종득 위원 무료배달이 지금 핫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료배달 구독제 사용 때문이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무료인데 사실은 무료가 아닙니다.

○임종득 위원 그렇지요, 알고 계시네요.

이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 문제도 알고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임종득 위원 지금 배달의민족 매출액이 무료배달 구독제를 하고 나서 26.6%로 뛰어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소비자하고 배달 업체가 윈윈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윈윈이 아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전가되는 거지요.

○임종득 위원 맞지요. 자영업자들 눈물이 지금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임종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릴라 그러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저희 대책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다음 한번 넘기시지요.

이게 우리 지역구에서 저한테 이야기해 준 내용인데 지금 사실은 무료배달 구독제 시행 후에 가게에서 100% 배달비를 부담하는 구조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반면에 배달 플랫폼의 수입구조는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중개 수수료, 결제대행 수수료 플러스 해서 월정액 그다음에 배달라이더 수수료까지를 착취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 폐업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업 부진입니다. 이 문제를 알고 계신다니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중기부장관님, 정책자금 사업을 소상공인한테 지원하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임종득 위원 그것이 2026년에 5.5조 원인데 많은 부분이 지금 이렇게 소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장관님하고 공정거래위원장님이 함께해서 이 제도적 맹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바로잡아 주십사 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지금 이 제도 개선방안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될 겁니다.

○임종득 위원 장관님, 말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저희가 쓰는 5.5조 원이 다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배달 관련된 부분 챙겨 보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율의 송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현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송기현 위원 내일이 농민의 날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농업인의 날입니다.

○송기현 위원 내일 원주를 방문하시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고맙습니다.

○송기현 위원 국가기념행사를 원주에서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시민과 함께 즐겁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농민의 날 행사가 1964년도 11월 11일에 원주에서 최초로 시작했고 원주가 지속적으로 국가지정기념일로 건의하는 바람에 30년 전에 처음으로 국가지정기념일이 11월 11일

로 돼서 30주년이 된 것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내일이 30주년 기념식입니다.

○송기현 위원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원주에서 시작됐다는 그 의미를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농민기본소득 관련돼서 내년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요. 농민기본소득의 사용처는 지금 현재 민생지원금 사용처와 같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농협 경제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송기현 위원 하나로마트나 주유소나 이런 것.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송기현 위원 실제로 거기가 사용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에서는 소비처를 찾을 수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지금 확인해 보니까 시범지역이 7개 군인데 하나로마트 중에 사용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걸 따져 보니까 정선은 하나도 없고요 청양은 7개 중에서 하나만 가능하고 순창은 6개 중에서 하나만 가능하고 영양도 4개 중에서 하나만 가능합니다. 남해도 마찬가지로 7개 중에서 2개만 가능하고.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농촌기본소득을 받더라도 사용할 곳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이걸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사용자 편의성도 있고요, 또 그 군 안에서도 읍면 간에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지방정부랑 협의를 해서 조금 더 바람직한 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송기현 위원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물어보니까 그쪽 담당하는 쪽에서는 소비 편의의 우려가 있어 가지고 이걸 잘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지 않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렇지 않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지 않습니다.

○송기현 위원 어쨌든 민생지원금 같은 경우도 면 지역 하나로마트 1307개 중에서 처음에 125개밖에 없다가 확장을 해 가지고 779개까지 늘리지 않았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 취지가 소비처가 부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 하게 됐다 그런 점이 있던 거니까 그걸 참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송기현 위원 꼭 그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리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장관님, 지난 10월 달에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5개년 계획, 5차 계획을 발표하셨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송기현 위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2009년도에 오송과 대구에 지정된 후에 추가로 지정된 곳은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송기현 위원 그런데 이 5차 계획의 평가를 보니까 이게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운영이 되는 바람에 임상, 사업화, 제도 등의 산업 전 주기 연계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역 혁신체계와의 연계가 미흡하다고 돼 있고 또 지역산업으로의 확산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결국 산업 파급력이나 자생력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차 계획에서는 기존 클러스터 간에 내부적인 협력, 연계성 확보 이런 것만 좀 중점적으로 했더라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송기현 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지금과 마찬가지로 내부적인 그런 한계에 부딪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래서 5차 계획에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전국에 있는 한 20여 개의 바이오 클러스터하고 연계를 어떻게 할 건가에 그걸 강화하는 내용들을 담아서,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각 지역의 그 센터들을 지정해서 지역 내에 있는 그런 자원이나 시설이나 공동연구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송기현 위원 지금 123대 국정과제에는 의료AI·제약·바이오 글로벌 강국 도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의료AI·제약·바이오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과 같이 연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된 법이 다른 지역에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 2건의 개정안이 나와 있고 타 클러스터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하는, 지정하는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 중에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의 대구·오송처럼 대규모의 재정이 들어가서 신규 지정하는 건 좀 어렵고 기존에 지정된 클러스터를 어떻게 좀 더 융합해서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기현 위원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법에 따라서 종합적으

로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송기현 위원 그렇지 않고 장관님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종합적인 지원이 되는 데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해당되는 법을 국회에서 논의할 때 그런 점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국토부장관님, 저희 금천구 금천구청역사 근처에 유희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9월 7일 날 발표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금천구청역사의 복합개발 그리고 경부선 지하화 문제랑 연결이 돼 가지고 우회 선로 이 부분이 해결이 빨리 돼야 되거든요. 계속 잘 검토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또 금천구에 공군부대가 있는데 국토부에 의해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지로 선정이 났습니다. 여기에 상업시설뿐만이 아니라 대규모 주택공급을 하려면 LH 우선추천 후보지가 선정돼야 되고 나중에 위탁개발 대상지 등 선정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도 LH와 기재부와 협조해서 신속하게 주택공급 가능하도록 잘 준비하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서울에서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좋은 곳이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감사합니다.

복지부장관님께서는…… 장관님께서는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질병권이라는 단어 들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건강권은 많이 쓰는데 질병권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합니다.

○최기상 위원 질병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나 효율이 정의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회, 건강 중심 사회에서 실패한 몸이나 질병 난민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고 건강한 사람만을 표준의 몸으로 선정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질병을 겪는 것이 보편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 같네요. 한병철 선생의 ‘피로사회’도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시다만 아픈 몸을 스스로가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사회에서도 존중하면서 같이 살아가야 된다 이런 취지 같아요.

그래서 아픈 몸 선언문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면 ‘모든 사람은 아플 때 돌봄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아픈 몸은 아픈 상태를 의심받지 않고, 아프지 않은 몸으로 회복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상병수당의 정신도 이 취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프더라도 가정과 일터 그 외의 사회 공동체에서 온전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즉 아프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인식 이 부분을 바꿔 보자라는 운동 같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안전하게 쉴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쉬는 게 본인뿐만이 아니고 사회에도 이롭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플 권리가 있고 아픈 내용에 대해서 서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개인의 서사로 인정받아야 되고 이 부분을 사회가 같이 해결해 나가자 이런 운동 같아요. 어떻습니까, 취지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상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가 이렇게 완벽, 완전, 영어로는 퍼펙트라는 부분이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영화 중에 ‘호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사망한 로버트 레드포드가 감독을 하고 브래드 피트가 나온 영화인데 거기 보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콤플리트 언더스탠딩(complete understanding)이 없더라도 캔 러브 콤플리틀리(can love completely) 이런 취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벽과 완전을 지향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그 상태 그대로 온전할 수 있게 우리 사회의 많은 제도와 정책들이 구현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들 조금씩 아프시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특히 고령화되면서 질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정신건강 부분에서는 또 특히 더 강조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기상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기대수명은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건강수명, 행복수명, 존엄수명의 관점에서 보면 격차를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동의합니다.

○최기상 위원 복지부장관께서 그 부분을 주도적으로 준비하셔서 우리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당당하게 아프고 내 아픔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다음 사람들은 덜 아플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중요한 가치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호명 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조은희·조배숙·최형두·임종득·조지연·조계원·송기현·최기상·안도걸·김한규·천하람·이소영·박형수 위원님께서 회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윤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배경훈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직원들과 보좌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경위분들과 속기사분들 그리고 국회방송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부처 대상 부별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

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0분 산회)

---

○출석 위원(47인)

|     |     |     |     |     |     |     |     |     |     |
|-----|-----|-----|-----|-----|-----|-----|-----|-----|-----|
| 강승규 | 고민정 | 김남근 | 김대식 | 김상욱 | 김성희 | 김용만 | 김위상 | 김재원 | 김한규 |
| 노종면 | 박민규 | 박형수 | 박희승 | 배준영 | 서범수 | 서왕진 | 송기현 | 안도걸 | 우재준 |
| 윤후덕 | 이강일 | 이병진 | 이성권 | 이소영 | 이수진 | 이재관 | 이종배 | 이훈기 | 임미애 |
| 임종득 | 전종덕 | 정점식 | 정진욱 | 조계원 | 조배숙 | 조은희 | 조정훈 | 조지연 | 차지호 |
| 천하람 | 최기상 | 최형두 | 한기호 | 한병도 | 허성무 | 황정아 |     |     |     |

○출장 위원(2인)

곽상언 김승원

○청가 위원(1인)

김기웅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전문위원 정대영

입법심의관 이동훈

입법심의관 최철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부총리겸장관 구윤철

제2차관 임기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겸장관 배경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차관 강형석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제1차관 이스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제1차관 금한승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기획조정실장 문성요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차장 김용재

국가데이터처

처장 안형준

통계정책국장 이명호

지식재산처

처장 김용선

국세청

청장 임광현

차장 이성진

관세청

청장 이명구

차장 이종욱

조달청

청장 백승보

기획조정관 이형식

우주항공청

청장 윤영빈

농촌진흥청

청장 이승돈

산림청

청장 김인호

질병관리청

청장 임승관

차장 임숙영

기상청

청장 이미선

차장 김승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강주엽

새만금개발청

청장 김의겸

해양경찰청

청장 김용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반상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원호